완자

정답친해

법과 사회

I 개인 생활과 법

01 가족생활과 법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4쪽

01 (1) ○ (2) ○ (3) × **02** (1) – ㉡, ㉢ (2) – ㉠
03 (1) 법률혼 (2) 친양자 (3) 가정 법원 **04** (1) 유언 (2) 채무
05 상속 **06** ① **07** ④ **08** ③ **09** ③

01 혼인에 따른 권리와 의무

(3) 혼인한 부부는 부부 별산제에 따라 혼인 전 재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획득한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06 혼인의 성립 요건

② 혼인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다. ③ 남녀의 혼인 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혼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행정 관청에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혼 부부로 인정받는다. ⑤ 8촌 이내 혈족, 일정한 범위의 인척 등 법률에서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남녀는 혼인할 수 없다.

바로 알기 ①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혼인 신고를 하면 법률상 혼인이 성립한다. 따라서 결혼식은 법률상 혼인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07 성년 의제

④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 것을 성년 의제라고 한다. 이에 따라 혼인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08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③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친자 관계를 인정받는다. 인지란 부모가 자녀를 자기 자녀로 인정함으로써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법적 행위이다. 혼인 중 출생자는 당연히 부부의 친자로 인정받아 별도의 인지 과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09 유언의 방법

③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이나 그밖에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진다.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증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5~18쪽

01 ④ **02** ①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⑤
08 A: 친생자, B: 친양자, C: 일반 양자 **09** ⑤ **10** ④ **11** ⑤
12 ① **13** ③ **14** ① **15** ⑤ **16** ㉠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17** ④ **18** ①

01 법률혼과 사실혼

자료 분석

핵심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병과 정은 혼인 신고를 하였어.

(가) 갑과 을은 1년간 사귄 후에 많은 하객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두 사람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 병은 과거에 교제하던 정과 장난삼아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정이 병에게 알리지 않고 그 신고서를 실제로 제출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병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혼인이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야.

(가)에서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이다. 이에 비해 (나)에서는 혼인 신고가 이루어졌고, 법원이 병의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병과 정은 법률혼 관계이다.

바로 알기 ①, ②, ③ 결혼식을 올리거나 공동생활을 해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가)에서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부부가 아니며, (나)에서 병과 정은 혼인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 이건 꼭 암기! 법률혼과 사실혼
- 혼인 의사 합치 ○, 혼인 신고 ○ → **법률혼**
- 혼인 의사 합치 ○, 혼인 신고 × → **사실혼**

02 일상 가사 대리권

① 남편의 입원 중에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한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상 가사에 해당한다.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으므로 남편도 갚을 의무가 있다.

03 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가 혼인을 하면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배우자인 을을 고의로 돌보지 않고 버려두었으므로 을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갑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④, 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 불명,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 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③ 성격 차이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04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가)는 협의 이혼, (나)는 재판상 이혼이다. ① 협의 이혼을 할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② 협의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법원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④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정 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바로 알기 ⑤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혼 조정이 성립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 미건 꼭 암기! **이혼의 절차**

-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숙려 기간 →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 이혼 신고 → **협의 이혼**
-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 → 조정 결렬 시 이혼 소송 → 이혼 판결 → 이혼 신고 → **재판상 이혼**

05 혼인과 이혼

ㄴ. 배우자의 잦은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 ㄹ.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에 해당한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바로 알기 ㄱ. 결혼식은 혼인의 요건이 아니고, 혼인 신고는 혼인의 요건 중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즉,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이 성립하지 않고,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성립한다. ㄷ. 재산 분할 청구권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

06 친자 관계

제시된 글에서 밑줄 친 '이것'은 친자 관계이다. 친자 관계는 혈연이나 입양으로 형성되는데, ㄱ, ㄷ은 친생자, ㄹ은 양자로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

바로 알기 ㄴ.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미건 꼭 암기! **친자 관계의 유형**

- 법률혼 관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인지 필요) → **친생자**
-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 **양자**

07 친양자 입양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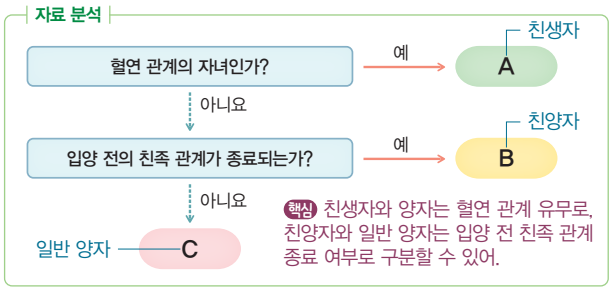
① 김◎◎은 친양자로 입양되었는데, 친양자가 될 자는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김◎◎은 입양 당시 미성년자였을 것이다. ② 친양자는 입양 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③, ④ 친양자는 입양 후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김◎◎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바로 알기 ⑤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므로 가족 관계 등록부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따라서 김◎◎은 양부 박○○와 양모 정□□의 혼인 중 출생자로 기재된다.

✦ 미건 꼭 암기! **친양자 제도**

가정 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 청구 →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 → 양부모의 성과 본 적용, 입양 전 친족 관계 종료 → **친양자 입양**

08 친자 관계의 유형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한다. 부모와 혈연 관계에 있는 자녀를 친생자라고 하고, 입양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양자라고 한다. 양자에는 일반 양자와 친양자가 있다.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등 입양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지만,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등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된다.

09 친자 관계의 유형 비교

⑤ 친생부모의 사망 시 친양자(B)는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일반 양자(C)는 상속인이 된다.

바로 알기 ① A는 친생자이다. 친생자에는 법률혼 상태에서 낳은 혼인 중 출생자와 법률혼 상태가 아닌 중에 낳은 혼인 외 출생자가 있다. ② B는 친양자이다.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③ 친양자가 아닌 양자는 입양된 시점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별도의 인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혼인 외 출생자이다. ④ 일반 양자는 가족 관계 등록부에 양자로 기재되지만,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기재된다.

10 일반 양자와 친양자

갑은 친양자, 을은 일반 양자이다. ④ 친양자는 기존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모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바로 알기 ① 친양자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친양자는 기존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만 일반 양자는 기존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③ 을은 가족 관계 등록부에 양부모의 양자로 기재되지만, 갑은 친양자이므로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기재된다. ⑤ 친양자가 될 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일반 양자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갑과 달리 을은 입양 과정에서 가정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갑은 19세 미만, 을은 19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11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자료 분석

핵심 A, B는 갑과 을의 친생자이고, B는 병의 일반 양자나 친양자가 될 수 있어.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A와 B가 태어났다. 이후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갑은 A를, 을은 B를 각각 맡아 양육하였다. 3년 후 을과 병은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병은 미성년자인 B를 (가) 로 입양하였다.

일반 양자와 친양자가 모두 들어갈 수 있어.

⑤ B가 병의 친양자이면 갑과 B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B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바로 알기 ①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았을 것이다. ② A는 갑과 을의 친생자이므로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③ 병이 B를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 B는 병과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B는 병의 혼인 외 출생자가 아니라 을과 병의 양자로서 법률상 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④ B의 경우와 같이 친생 부모의 한쪽이 친양자 입양의 부모 중 한쪽이라면 그 친생 부모와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12 친권의 행사

② 오늘날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로서보다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③ 가정 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④, 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 등으로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한다. 이혼 시에는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 법원이 이를 지정한다.

바로 알기 ① 친권은 부모의 복리가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사해야 한다.

13 친권 상실

③ A의 아버지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A의 명의로 휴대 전화를 개통하여 요금까지 연체하고 있다. 이는 친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재산 분할은 이혼하는 부부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청구한다. ② A의 아버지는 딸의 양육비도 주지 않고 방임하여 조부모가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의 행위를 노인과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 ④ A의 아버지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면접 교섭권 정지만으로는 친권 남용을 막기 어렵다. ⑤ A의 아버지가 심신 상실 상태에 이르렀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피한정 후견인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

✦ 미간 꼭 암기! **친권 상실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 + 자녀나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 →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선고(가정 법원)**

14 부모의 양육 의무와 상속권

ㄱ, ㄴ. 기존 민법은 살해나 유언장 위조 등 일부 사유만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부양 의무 태만은 포함하지 않아 자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따라서 부모의 부양 의무와 상속권 행사를 연계하여 자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ㄷ. 친권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권리로서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ㄹ. 단순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의 책임을 기준으로 상속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15 유언의 효력

⑤ 민법상 자필 유언은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등 법원은 갑의 유언에 대해 재산 목록 등 핵심 부분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바로 알기 ① 고등 법원은 갑의 유언이 유언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②, ③ 고등 법원은 유언자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과 별개로 갑의 유언은 무효라고 보았다. ④ 갑이 유언에서 자녀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언의 효력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

16 유언의 방법

사망 직전 갑이 증인을 부른 상태에서 말로 유언하는 것은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말한 유언의 취지를 증인 중 1인이 필기해서 낭독하면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유언 방식이다. 한편, 유언자가 직접 스스로 글로 쓰는 것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유언의 내용, 날짜, 주소 등을 정확히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한다.

17 유언과 상속

④ 법적 요건을 갖춘 두 개의 유언이 있으면 최근에 한 유언만 인정된다. 따라서 10억 원을 을에게 준다는 유언만 효력이 있다. 그런데 병과 정은 모두 법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직계 비속이므로 을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갑의 의지와 관계없이 을에 대해 일정액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갑이 구수 증서 유언을 통해 을에게 전 재산 10억 원을 모두 준다고 했지만 은행 채무가 3억 원이 있으므로 실제 상속 재산은 7억 원이다. 또한 나머지 상속인이 을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을이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② 갑이 자필 증서를 통해 유언한 것은 구수 증서 유언보다 일찍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자필로 병에게 12억 원의 재산을 모두 준다고 한 유언은 무효이다. ③ 갑은 유언을 통해 배우자 을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했으므로 을은 은행 채무를 제외한 7억 원을 상속받는다. 그리고 병과 정은 각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언은 먼저 작성된 유언(㉡)이 아니라,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한다. 따라서 병이 아니라 을이 상속을 받게 된다.

✦ 이건 꼭 암기! 상속 제도

- 유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몫 보장 → **유류분**
-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등에 상속인의 지위 포기 → **상속 포기**
-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 → **한정 승인**

18 다양한 상속 제도

① 갑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므로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바로 알기 ② 갑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받을 수 있는 일부의 재산도 상속을 받지 못하므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③ 갑이 상속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채무도 상속하지 않게 되는 등 갑의 선택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갑이 아버지의 채무를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가만히 두면 갑은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 ⑤ 사망자의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통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9쪽

01 주제: 혼인의 성립 요건

예시 답안 혼인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두 사람은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민법에서 정한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가 된다.

채점 기준	
상	혼인의 성립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혼인의 성립 요건 중 두세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혼인의 성립 요건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유언의 방법

예시 답안 유언자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등 법에서 정한 다양한 유언의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유언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법 다섯 가지를 모두 쓰고, 유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경우
중	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법 다섯 가지 중 일부를 쓰고, 유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경우
하	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법 다섯 가지 중 일부만 쓴 경우

03 주제: 이혼의 유형

(1) 답 (가) 협의 이혼, (나) 재판상 이혼

(2) 예시 답안 협의 이혼은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점 기준	
상	이혼의 효력 발생 시기를 핵심어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이혼의 효력 발생 시기를 핵심어를 일부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이혼의 효력 발생 시기를 핵심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04 주제: 친양자 제도

(1) 답 친양자

(2) 예시 답안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등 입양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일반 양자에 비해,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등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된다.

채점 기준	
상	친양자의 법률 효과를 일반 양자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친양자의 법률 효과를 일반 양자와 비교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05 주제: 상속 순위

예시 답안 유언이 없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가)는 2순위, (나)는 3순위, (다)는 4순위, (라)는 1순위이다.

채점 기준	
상	(가)~(라)의 상속 순위를 모두 정확하게 쓰고, 핵심어를 모두 사용하여 그 이유를 서술한 경우
중	(가)~(라)의 상속 순위를 모두 정확하게 쓰고, 핵심어 중 일부만 사용하여 그 이유를 서술한 경우
하	(가)~(라)의 상속 순위만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20~21쪽

01 ① 02 ② 03 ③ 04 ④

01 혼인과 이혼

자료 분석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공동생활을 시작한 것은 법률혼 부부로 볼 수 없어.

(가) 갑과 을이 결혼식을 올리고 공동생활을 시작하였다.
↓
(나) 갑과 을이 혼인 신고를 하였다.
↓
(다) 갑과 을 사이에서 아들 병이 출생하였다.
↓
(라) 갑과 을이 이혼에 합의하여 이혼하였다.
↓
(마) 갑이 병을 맡아 양육하였다.

핵심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간의 친족 관계는 소멸되고 상속권도 사라져.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돼.

ㄱ. (가)에서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이다. ㄴ. (나)에서 갑과 을은 부부로서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거래 행위에 대해 일상 가사 대리권을 가진다. 일상 가사 대리권은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발생한다. ㄷ. (다)에서 병은 혼인 중 출생자이므로 부모인 갑과 을의 인지 없이도 친생자로 인정받는다.

바로 알기 ㄹ. 갑과 을은 협의 이혼을 하였으므로 이혼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이다. ㅁ. 을은 이미 갑과 이혼하였으므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에 병만 상속인이 된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혼인의 법률 효과

부부 별산제	•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함 •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
일상 가사 대리권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거래 행위와 관련된 법률 행위를 서로 대신할 수 있음

02 이혼의 유형과 절차

자료 분석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

갑은 을과 법률혼 관계로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을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을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5세가 된 딸 병이 있다.

(가) 갑과 을이 혼인 관계 해소에 합의한 경우 — 협의 이혼

(나) 갑의 혼인 관계 해소 요구에 을이 거부한 경우 — 재판상 이혼

(가)는 협의 이혼, (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ㄱ. 협의 이혼에서는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한다. ㄹ.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를 한 때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바로 알기 ㄴ. 재판상 이혼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진다.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거쳐 을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협의 이혼이다. ㄷ.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모두 법원을 거친다. 협의 이혼에서는 이혼 의사 확인을 위해,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 절차를 위해 가정 법원을 거쳐야 한다.

03 입양을 통한 친자 관계의 유형

자료 분석

핵심 A는 일반 양자, B는 친양자야.

〈입양을 통한 친자 관계의 유형〉
- A: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유지되어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
- B: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친생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

- 갑: A와 B는 모두 가정 법원의 재판을 거쳐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
- 을: A와 달리 B는 입양 후에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친양자)
- 병: A는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라도 가능하지만 B는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일반 양자, 친양자)
- 정: A는 입양 후에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지만, B는 양부모의 혼인 외 출생자로 봅니다. (혼인 중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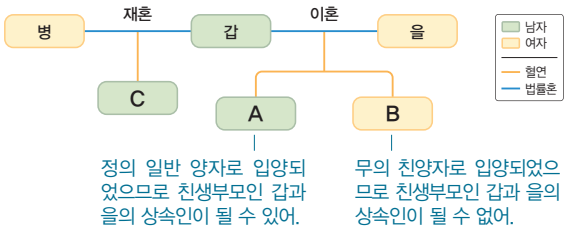
을.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혼인 중 자녀로 간주되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병. 일반 양자는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라도 가능하지만 친양자는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바로 알기 갑. 가정 법원의 재판을 거쳐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친양자이다. 일반 양자는 양부모와 양자가 입양에 합의하여 가정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입양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 일반 양자와 친양자는 모두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

04 유언과 상속

자료 분석

핵심 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배우자 병, 자녀 A, C이고, B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어.



* 갑은 모든 재산을 ○○ 양로원에 주라는 자필 증서 유언을 남겼다. 유언의 내용을 스스로 친필로 쓰고 날인해야 해.
* 갑과 을의 이혼 후에 A는 정의 일반 양자로, B는 무의 친양자로 입양되었다.
* 갑의 재산 상황: 부동산 4억 원, 은행 예금 3억 원이다.

ㄱ.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인은 배우자 병, 직계 비속 A와 C이다. ㄴ. 갑의 재산은 7억 원이다.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을 경우, 배우자 병은 직계 비속인 A, C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따라서 병은 3억 원, A와 C는 각각 2억 원을 상속받는다. ㄷ.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을 경우, ○○ 양로원이 갑의 재산 7억 원을 유증받는다. 만일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에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 양로원이 유증받는 금액은 최대 7억 원이다.

바로 알기 ㄹ.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을 경우, 상속인 병, A, C는 ○○ 양로원에 일정액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무의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갑과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다.

02 계약과 불법 행위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26쪽

01 (1) × (2) ○ **02** (1) 계약 (2) 채무 불이행
03 (1) 동의 (2) 법정 대리인 **04** ㄱ, ㄷ, ㄹ
05 특수 불법 행위 **06** ② **07** ① **08** ③ **09** ①

01 계약의 성립

(1) 당사자 간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은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

06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① 계약의 내용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계약 당사자의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⑤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에 따라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다.

바로 알기 ② 책임 능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 결과가 위법하여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07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①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는 의무만을 면제받는 것이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② 미성년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미성년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미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옷을 구입하더라도, 그 옷이 용돈의 범위를 벗어난 고가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집이라고 해도 그 집을 미성년자가 매도하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08 불법 행위

③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한다. 불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09 사용자 책임

① 종업원이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사장은 종업원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한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27~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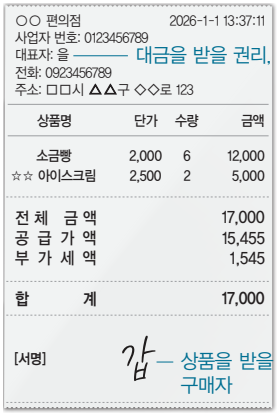
01 ③	02 ④	03 ③	04 ②	05 ④	06 ⑤	07 ④
08 ④	09 ①	10 불법 행위		11 ③	12 ④	13 ⑤
14 ④	15 ②	16 ③	17 ②	18 ⑤		

01 다양한 계약

③ 버스에 승차하면서 요금을 내는 것,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물건을 사면서 돈을 내는 것 등은 모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의 유형이다.

02 영수증과 계약

자료 분석


○○ 편의점 2026-1-1 13:37:11
사업자 번호: 0123456789
대표자: 을
전화: 0923456789
주소: □□시 △△구 ◇◇로 123

상품명	단가	수량	금액
소금빵	2,000	6	12,000
☆☆ 아이스크림	2,500	2	5,000
전체 금액			17,000
공급가액			15,455
부가세액			1,545
합계			17,000

[서명] 갑

대금을 받을 권리,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판매자

핵심 갑은 구매자, 을은 판매자이고, 갑과 을의 의사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었어.

상품을 받을 권리,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구매자

④ 갑은 을에게 상품 구매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청약이 이루어졌고, 을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승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당사자 간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가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바로 알기 ① 편의점에서 빵과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것은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래 행위이다. 따라서 갑이 미성년자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②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판매자인 을이다. ③ 을은 갑에게 상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구매자인 갑이다. ⑤ 구매 행위에 따른 영수증에 판매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이다.

03 계약의 성립

① 갑이 침대를 20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것은 청약이고, 을이 갑의 제안에 그 침대를 200만 원에 팔겠다고 한 것은 승낙에 해당한다. ②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에 의해 갑과 을에게는 채권과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④ 을이 갑에게 ○○ 침대를 배송한 것은 계약에 따른 을의 배송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⑤ 을은 갑에게 침대를 배송하여 설치해 주었고, 갑은 을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계약에 따른 채권과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었다.

바로 알기 ③ 매매 계약은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 합치된 ㉡에서 성립하였다.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미간 꼭 맑기! 계약의 성립

2인 이상 계약 당사자 +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의 합치 → **계약 성립**

04 계약의 무효

② 첫 번째 계약에서는 한강에서 반지를 찾아주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하고, 두 번째 계약에서는 하늘의 별을 따다 주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시된 계약들은 채무 이행이 실현 가능하지 않아 무효이다.

바로 알기 ① 제시된 계약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성립되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③ 제시된 계약이 청약과 승낙이 불일치되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④ 한강에서 반지 찾기나 하늘의 별을 따기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제시된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05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④ 제시된 사례에 나타난 계약은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시가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 주택을 사겠다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바로 알기 ①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곤궁한 사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계약은 무효이다. ②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였지만 그 내용이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 ③ 주택을 5천만 원에 사겠다는 계약은 실현 가능한 내용이다. ⑤ 주택의 판매자나 구매자가 행위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06 계약과 채무 불이행

ㄷ. 을이 도시락 배달이라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 ㄹ. 을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갑과 을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는 도시락을 배달받을 권리와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을에게는 대금을 받을 권리와 도시락을 배달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면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한다.

07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 행위

용돈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아르바이트의 대가를 받는 행위,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제받는 행위 등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다. ㄴ. 중학생(15세)이 친척으로부터 세뱃돈을 받은 경우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이다. ㄹ. 혼인한 아들(18세)은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모가 사 준 집을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도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초등학생(9세)이 부모 몰래 골동품을 판 경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볼 수 없다. ㄷ. 고등학생(17세)이 고가의 전자 제품을 구입한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률 행위이다.

✦ 이건 꼭 암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원칙) → 용돈 범위 내 물품 구입, 아르바이트의 대가 취득 등(예외) → **법률상 행위 능력 제한**

08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취소

④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그 자체로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②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경우에 따라 무효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으로 구입했더라도 부모에게서 받는 용돈의 범위를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09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취소

① 갑은 자신의 용돈 범위에서 청바지를 구입했으므로 청바지 구입 계약은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과 갑의 부모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바로 알기 ② 갑은 미성년자로서 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갑은 자신의 용돈 범위에서 청바지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갑이 청바지를 구입한 법률 행위는 유효하므로 갑의 부모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갑과 을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갑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갑과 을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을은 갑의 부모에게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10 불법 행위

어떤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한다. 타인을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도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1 불법 행위 성립 요건

①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능력인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가해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④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가해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⑤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 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바로 알기 ③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가해 행위가 일부러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것일 때도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이건 꼭 암기! **불법 행위의 성립**

고의 또는 과실(유책성), 위법한 행위, 손해 발생,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 **불법 행위 성립**

12 불법 행위의 성립과 책임 능력

(가)에서 갑의 행위는 고의,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 관계 성립의 요건을 만족하지만, 책임 능력이 없는 어린이의 행위이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에서 을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위법성과 인과 관계가 있으며, 손해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을은 책임 능력이 있는 성인이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법률상 책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한다. 책임 능력이 없으면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없다.

13 후발 손해 배상 책임

자료 분석

핵심 갑의 운전 중 과실에 의해 을이 다쳤으므로 갑의 불법 행위가 성립해.

갑은 급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하였고, 마침 출근하려고 회사로 걸어가고 있던 을이 달려오던 갑의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을은 이미 지불했거나 앞으로 지불해야 할 입원비와 치료비, 입원과 치료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고 후유증 등을 걱정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사고 후에는 자동차를 보기만 해도 두려운 느낌이 들 만큼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⑤ 갑과 을이 손해 배상에 합의했더라도 추후에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별도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바로 알기 ① ㉠은 갑이 입은 정신적 피해로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된다. ② 갑의 신호 위반에 의해 을이 다친 것이므로 갑의 과실에 의해 불법 행위가 성립하였다. ③ 갑이 을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합의서가 있더라도 을에게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하면 갑은 별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갑과 을의 모든 법률관계가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사용자의 배상 책임

④ 종업원인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다툼의 원인이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

바로 알기 ① 갑과 을은 손해 배상 액수로 다투고 있지 않다. ② 책임 능력은 어린아이나 심신 상실자의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데, 가구점의 종업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갑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갑과 을은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다투고 있지 않다.

15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책임

② 가해자 을은 18세로서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을의 아버지 병이 지는 손해 배상 책임은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병이 지는 손해 배상 책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다.

16 특수 불법 행위의 사례

밑줄 친 '이것'은 특수 불법 행위이다. ① 8세 초등학생은 책임 무능력자이다.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 그 부모가 지는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해당한다. ② 창틀은 공작물이다. 공작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는 점유자인 임차인이 배상 책임을 지지만, 임차인이 그 공작물의 관리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것은 특수 불법 행위 중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에 해당한다. ④ 종업원의 과실로 손님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종업원에 대한 사무 감독을 하는 사장이 지는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다. ⑤ 동물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동물을 점유한 사람이 지는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중 동물 점유자 책임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③ 17세의 고등학생은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산책하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을 경우 고등학생 본인이 지는 책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다.

✦ 미건 꼭 암기! 책임 주체별 특수 불법 행위

-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교사, 보호자 등 감독자 →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피용자의 직무 관련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회사, 고용주 → **사용자 책임**
-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책임이 있는 건물·시설 점유자, 소유자 →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는 동물 소유자, 관리자 → **동물 점유자 책임**
- 공동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해자 → **공동 불법 행위 책임**

17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ㄱ, ㄷ. 갑은 6세로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을은 갑의 부모에 대해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ㄴ. 갑은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을은 갑에 대해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을에 대해 갑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갑의 부모는 을에 대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8 사용자와 점유자의 배상 책임

(가)에서 갑은 종업원의 실수로 피해를 입었고, (나)에서 을은 공작물인 간판의 추락으로 피해를 입었다. 갑은 종업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음식점의 사장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자동차를 파손한 간판이 달린 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간판의 설치 또는 보존상에 하자가 있었다면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가)에서 종업원의 행위는 일반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나)에서 간판이 떨어진 것은 일반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 ② 음식점 종업원은 사용자가 아니라 피용자이다. ③ 책임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종업원이 그런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④ 공작물과 관련하여 1차적 책임은 점유자에게 있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미건 꼭 암기!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 면제

-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 → **감독자 책임 면제**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 → **사용자 책임 면제**
-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 → 공작물 점유자 책임 면제 → **공작물 소유자 무과실 책임**
- 동물 점유자가 동물의 보호,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 → **동물 점유자 책임 면제**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31쪽

01 주제: 계약의 성립 요건

예시 답안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의사 표시가 합치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계약의 성립 요건을 청약, 승낙을 모두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계약의 성립 요건을 청약, 승낙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계약의 성립 요건을 청약, 승낙을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02 주제: 채무 불이행

예시 답안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계약의 강제 이행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다.

채점 기준	
상	채무 불이행의 의미와 발생 시의 조치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채무 불이행의 의미를 쓰고, 발생 시의 조치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채무 불이행의 의미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1) 답 동의

(2) 예시 답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이 추인되지 않은 이상 먼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채점 기준	
상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의 내용을 핵심어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의 내용을 핵심어를 일부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의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4 주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1) 답 을, 병

(2) 예시 답안 정의 노트북을 훼손한 당사자는 갑이지만 갑은 6세로서 책임 능력이 없다.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인 갑을 감독할 법정 대리인인 을과 병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져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을과 병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을과 병이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예시 답안 건물 외벽은 공작물에 해당한다. 공작물의 하자로 타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공작물의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사례에서 갑은 공작물의 점유자, 을은 소유자이며, 병은 피해자이다. 법원은 갑이 아니라 을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즉, 점유자인 갑이 건물 외벽으로 인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갑은 책임이 없고 소유자인 을이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채점 기준	
상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갑이 아니라 을이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핵심어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갑이 아니라 을이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핵심어를 일부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갑이 아니라 을이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핵심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32~33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1 계약의 성립 요건

자료 분석

미성년자의 계약은 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취소할 수 있어.

어린아이나 심신 상실자의 계약은 의사 능력이 없으므로 무효야.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우선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법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하며 착오, 속임수, 협박 등과 같은 하자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속아 의사 표시를 하였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강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계약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더 나아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계약은 당사자의 능력과 흠 없는 의사 표시, 실현 가능성,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비로소 법적 효력을 얻는다.

핵심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해.

계약의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지나치게 불공정하면 무효가 돼.

④ 판단 능력이 정상인 성년 회사원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은 행위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확정된 것이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사례이다.

바로 알기 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행위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행위이므로 이 계약은 무효이다. ② 10억 원을 빌려주고, 한 달에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5억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약속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 ③ 17세 고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행위 능력이 제한된 미성년자의 계약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증을 해 주면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사회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02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자료 분석

(가) 갑(16세)은 방학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부모(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루 7시간 근로에 두 달 동안 일하는 조건이었다. 갑은 일이 끝나는 두 달 후에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근로 계약의 요건을 지켰으므로 일단 유효해.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무효야.

이 부분은 합법적이므로 유효해.

(나) 을(18세)은 탈모 증세로 고민하다가 부모(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탈모 방지용 치료제를 구입하였다. 구입 당시 거래 상대방은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을은 며칠 동안 사용해 본 결과 증상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부모(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비싼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후회하고 있다.

을과 을의 부모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ㄱ. (가)에서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서에 임금을 두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근로 기준법」에 어긋난다. 「근로 기준법」에서는 임금은 매달 일정한 날짜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의 내용 중 임금 지급 부분은 무효이다. ㄷ. (나)에서 을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상품을 구입했는데,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

바로 알기 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ㄹ. (가)에서 거래 상대방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고,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이므로 갑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에서 거래 상대방은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을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03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자료 분석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불법 행위로 볼 수 없어.

갑은 퇴근하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의 을이 갑에게 시비를 걸며 접근해 왔다. 처음에 갑은 빨리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을은 계속해서 갑을 따라오며 언성을 높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을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고, 결국 갑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갑은 신체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을의 공격을 제지하려 하였고, 몸싸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을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그 결과 을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핵심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③ 갑이 을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지만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갑의 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갑이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을을 제지하다가 을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것이다.

바로 알기 ① 손해가 경미하다고 해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② 불법 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도 해당한다. ④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⑤ 갑이 을의 폭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상처를 입혔으므로 갑의 행위와 을의 손해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

04 불법 행위

갑이 미성년자이므로 책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져. 책임 능력이 있을 경우 갑이 불법 행위 책임을 져. 이 경우 갑의 부모도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갑이 책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갑이 아니라 갑의 부모가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을 져.

자료 분석

- 갑(17세)은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있던 손님 A(30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 을(40세)이 운영하는 가구점에 고용된 병(19세)이 고객 B가 주문한 가구를 트럭으로 배달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길을 가던 행인 C를 치어 상해를 입혔고, 가구를 제시간에 배달하지 못하였다.

병의 불법 행위이므로 병이 배상 책임을 지지만, 을이 사용자이므로 을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을과 B가 가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

⑤ 을은 사용자, 병은 피용자, B는 을과 계약한 고객이고, C는 병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C의 손해에 대해 을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더라도 C는 병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바로 알기 ① A에 대한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갑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미성년자인 갑의 감독을 소홀히 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②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갑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갑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A의 손해에 대해 갑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B는 병이 아니라 을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이 병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경우 을은 C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사용자의 배상 책임

- 전제: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면책: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03 재산 관계와 법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38쪽

01 (1) 소유권 (2) 법률 **02** 저당권 **03** (1) × (2) ○
04 (1) – ㉡ (2) – ㉢ (3) – ㉠ **05** (1) 주택 임대차 계약 (2) 확정 일자 (3) 대항력 **06** ① **07** ⑤ **08** ④ **09** ④

03 부동산 매매

(1) 부동산의 매매 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현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06 물권의 종류와 내용

ㄱ. 소유권과 저당권은 등기가 가능한 물권이다. 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바로 알기 ㄷ. 민법상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이고,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이다. ㄹ. 물권에는 개인이 가진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07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08 부동산 매매 절차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사고 싶은 부동산을 탐색한 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현 소유자를 확인한 다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매매 대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잔금 지급까지 완료되면 매도인은 등기를 위한 서류 및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이를 받은 매수인은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동산 매매 절차가 완료된다.

바로 알기 ④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한다.

09 주택 임대차 계약

ㄱ.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주택을 빌려서 생활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ㄴ.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ㄹ.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으면 확정 일자 이후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바로 알기 ㄷ.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해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39~41쪽

01 ③ **02** ② **03** 물권 법정주의 **04** ④ **05** ② **06** ①
07 ② **08** ② **09** ① **10** ④ **11** A: 임차권, B: 대항력
12 ② **13** ④ **14** ③

01 물권과 채권

(가)는 채권, (나)는 물권이다. ③ 물권은 아파트와 같은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바로 알기 ①, ② 법에 정해진 것만 인정되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이다. ④ 계약 당사자 간에만 유효한 권리는 채권이다.

✦ 이건 꼭 암기! **물권과 채권**
-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종류나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권리 → **물권**
-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 → **채권**

02 물권과 채권

ㄱ. 아파트는 부동산으로서 물권의 대상이고,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ㄷ. 을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된다.

바로 알기 ㄴ. 아파트 매매 계약은 소유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ㄹ. (가)에서 갑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아파트를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에서 을은 돈을 받을 권리와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03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원칙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한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조항으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04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

거래로 물건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그 물건의 권리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동산은 옮길 수 있는 물건이므로 점유(B)를 이전하는 인도로서 물권을 변동시키면 된다. 하지만 부동산은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므로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은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등기(A) 제도를 두고 있다.

05 물권의 종류

② 을은 담보로 잡고 있는 갑의 집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만일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갑의 집에 대해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을은 갑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을은 갑의 집에 대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③ 을의 권리는 저당권으로서 갑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어 있다. ④ 등기부에 기재된 을의 저당권은 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⑤ 갑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갑의 집은 경매에 넘어가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로 변경된다.

✦ 미건 꼭 암기! 저당권

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 목적물의 점유 이전 ×, 채무자가 계속 사용·수익 가능 → 변제 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무 변제 × → 부동산 경매로 우선 변제 가능

06 부동산 거래 절차

①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을 현장 탐색하고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07 소유권의 변동

② 부동산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므로 병이 소유권을 가진다.

바로 알기 ① 소유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병이 소유자이다. ③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도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았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을이 잔금을 지불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⑤ 을과 병 간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을은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08 부동산 매매 계약

②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매수인인 A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미 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A와 B의 계약 관계에서 A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므로 매수인이고, B는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므로 매도인이다. ③ 소유자는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의 소유권은 계약이 아니라 등기로 이전된다. ⑤ 매도인인 B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인 6천만 원을 A에게 지불해야 한다.

09 등기부의 구성

(가)는 갑구, (나)는 을구이다. ㄱ. 갑구에서 마지막 순위 번호에 있는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이므로 부동산 매수인은 반드시 그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ㄴ. 등기부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같은 제한 물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바로 알기 ㄷ.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는 모두 물권의 변동 내용이 기재된다. ㄹ. 해당 물건의 위치, 물건의 성격 등은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다.

✦ 미건 꼭 암기! 등기부의 구성

- 해당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인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 기재됨 → **표제부**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기재됨 → **갑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기재됨 → **을구**

10 부동산 등기부의 분석

④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자가 B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B가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갑구에 A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지만 A가 이 주택에 현재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B는 이 주택을 담보로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 주택의 주소는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다. ⑤ 2024년에 이 주택에 들어온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따라서 경매에서 낙찰 대금이 B의 저당금을 변제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전액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11 임차인의 권리

주택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사용·수익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한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미건 꼭 암기!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 주택 인도 + 전입 신고(주민 등록 이전) → **대항력 발생(임대인 외의 사람에게도 임차권 주장 가능)**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 계약서에 확정 일자 →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인정**

12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시된 그림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을 처분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 보장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ㄹ.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관련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의 변화를 보여 준다.

바로 알기 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개정되었다. ㄷ. 법률만으로 전월세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3 주택 임대차 계약

④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사와 함께 전입 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 주택에 대한 을의 대항력은 2023년 5월 15일부터 발생한다.

바로 알기 ①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이다. ② 2024년 6월 11일에 갑이 보유하고 있던 ○○ 주택의 소유권은 경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정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의 갑의 지위도 정에게 승계된다. ③ 병의 저당권 설정 일자가 을의 우선 변제권 일자보다 우선하므로 을은 병에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⑤ 병의 저당권 설정은 ○○ 주택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14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분석

③ 주택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다. 따라서 B는 자기가 원한다면 2028년 3월 9일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2026년 2월 10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불과하므로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② 이 계약서만으로 B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일 등기부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④ 저당권을 설정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A가 C에게 주택을 매도하였더라도 B가 대항력을 갖춘 상태이고 임대차 기간 중이라면 B는 C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42쪽

01 주제: 물권과 채권

예시 답안 물권은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다른 특정한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채권의 내용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물권은 그 종류나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채점 기준	
상	물권과 채권의 특징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지 않고 각각의 특징을 서술한 경우
하	물권과 채권의 의미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예시 답안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 주택을 처분하면 새로운 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주거 안정 보장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다.

채점 기준	
상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등장 배경을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등장 배경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만 서술한 경우
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등장 배경을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계없이 서술한 경우

03 주제: 물권의 공시 방법

(1) 답 소유권

(2) 예시 답안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이므로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어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이므로 거래를 통해 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한다.

채점 기준	
상	동산과 부동산의 물권 공시 방법과 권리 변동 요건을 핵심어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동산과 부동산의 물권 공시 방법과 권리 변동 요건을 핵심어를 한 가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동산과 부동산의 물권 공시 방법과 권리 변동 요건을 핵심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04 주제: 부동산 거래

(1) 예시 답안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갑구에서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등기부의 갑구에서 소유자 확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등기부에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2) 예시 답안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 제도를 통해 공시하므로 갑은 등기 이전을 완료한 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채점 기준	
상	등기 이전을 완료한 시점에 소유권이 변동한다고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변동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전세 사기 해결을 위한 노력

예시 답안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면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임차인이 계약시에 등기부 확인과 임대인의 채무 상황 점검 등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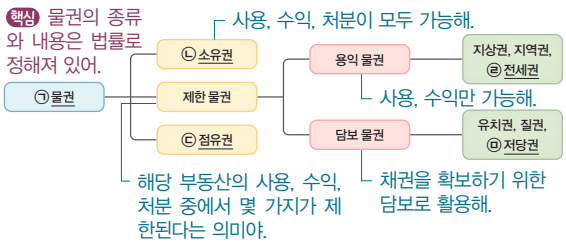
채점 기준	
상	전세 사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핵심 어구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전세 사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핵심 어구를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전세 사기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핵심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43쪽

01 ⑤ 02 ④

01 물권의 종류

자료 분석



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가치를 지배하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조건부로 처분만 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 ②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보호해 주는 권리는 점유권이다. ③ 점유권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보유하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이다. ④ 전세권은 임차인이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의 대항력이다.

02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자료 분석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이야.

갑과 을은 갑 소유의 ○○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1조 임차인 을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2025년 4월 10일에 계약금 2천만 원을 지불하며
  2025년 5월 2일에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불한다.
- 제2조 갑은 을에게 ○○ 주택을 2025년 5월 2일에 인도한다.
- 제3조 임대차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2026년 5월 1일까지로 한다. 주택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보장되므로 을은 2027년 5월 1일까지 거주할 수 있어.
- 제4조 계약일 현재 갑의 등기부에는 선순위 권리자가 없음을 확인한다. 갑은 을이 입주할 때까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야 갑은 이사와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통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 반환이 안전해져.

④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기간은 2년을 보장한다. 따라서 갑과 을이 1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약정했더라도 을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7년 5월 1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임대차 계약은 갑이 을에게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일정 기간 부여하는 계약일 뿐이다. 갑이 주택을 을에게 인도하더라도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이며, 소유권은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이전된다. ②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는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까지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입주와 동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③ 우선 변제권은 단순히 확정 일자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로 대항력을 먼저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⑤ 제4조는 갑이 을의 입주 전까지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입주 이후의 저당권 설정까지 막을 수는 없다. 또한 갑이 제4조를 위반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저당권자에게는 저당권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제4조만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대처 방법

- 내용 증명: 우체국이 공적 증명을 해 주는 의사 통지 방법인 내용 증명을 보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고 소송 진행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할 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음
- 분쟁 조정 위원회 이용: 주택 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 주는 공적 기관인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음
-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이용: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사기 사례 접수, 심리 상담 등을 해 주는 기관인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I단원 실력 굳히기 046~049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②
08 ⑤	09 ⑤	10 ⑤	11 ①	12 ②	13 ③	14 ⑤
15 해설 참조		16 (가) 미성년자, (나) 친생자			17 해설 참조	
18 임차권						

01 혼인의 성립과 친권

ㄴ. 혼인 신고에 의해 갑과 을은 법률혼 부부가 된다. ㄷ. 출생과 동시에 병은 권리 능력을 가진다.

바로 알기 ㄱ. 결혼식은 혼인의 요건이 아니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이다. ㄹ. 병은 법률혼 관계인 갑과 을의 혼인 중 자녀이다. 따라서 (다)에서 병의 출생과 동시에 갑과 을은 친생부모로 추정된다.

02 이혼의 효과

① 병은 을이 양육하기로 하였으므로 갑은 병을 만나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바로 알기 ② 갑과 을은 협의 이혼을 하였으므로 이혼 의사 확인과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이혼 조정 절차는 재판상 이혼에서 필요하다. ③ 을이 재혼하더라도 을과 병의 친자 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에 대한 친권은 을이 가지게 된다. ④ 갑과 을의 이혼으로 갑과 을의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므로 갑이 사망하면 을은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병은 여전히 상속인이 된다. ⑤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가지므로 갑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갑은 을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03 입양 방법

자료 분석

핵심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되고,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가 돼.

- 갑과 을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자 남편과 사별 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병의 딸 정을 [(가)]로 입양하였다. 입양 후에도 병과 정의 친족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되므로 일반 양자야.
- A와 B는 재혼하였다. B는 전 남편 C와의 사이에서 낳은 D를 데리고 왔는데, A가 D를 [(나)]로 입양하였다. 입양 후에 C와 D의 친족 관계는 소멸되었다.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되므로 친양자야.

(가)는 일반 양자, (나)는 친양자이다. ③ 양자로 입양된 자의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한다.

바로 알기 ① 친양자가 될 자는 미성년자이어야 하지만, 일반 양자는 성인도 가능하다. 따라서 친양자가 될 자는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② 일반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된다. ④ 일반 양자와 친양자는 양부모에 대해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⑤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의 사망 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친생부모의 사망 시 상속인이 된다.

04 유언과 상속

⑤ B, C는 을의 직계 비속으로 공동 상속인이므로 법정 상속분이 같다. 따라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액도 동일하다.

바로 알기 ① B, C는 을의 친생자이지만, A는 갑의 친생자이다. 을이 A를 입양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을의 사망으로 A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② 을은 자필 증서 유언으로 병에게 재산을 준다고 했는데, 이 경우 병은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을의 유언에 의한 유증을 받는다. ③ B는 을의 친생자이다. 갑이 B에 대한 친권을 가지려면 입양으로 갑과 B가 친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④ B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법정 상속인은 갑과 C가 된다. A는 갑의 친생자로서 을이 입양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05 불공정 계약

② 계약을 해지해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므로 계약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

바로 알기 ① 계약을 해지해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은 명확하다. ③ 제시된 약관의 계약 내용은 실현할 수 있다. ④ 약관의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다. ⑤ 정리된 약관이 있으므로 계약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다.

06 매매 계약서

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면 성립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② 2026년 2월 20일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이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일치한 시기는 그 이전일 수 있다. ③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갑과 을에게만 적용된다. ⑤ 제품 하자 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지 않으면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

바로 알기 ④ 제2항에 따라 갑이 제품을 을에게 인도하고 을이 모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제3항에 따라 제품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으므로 갑과 을의 법률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07 미성년자의 계약

② 병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으므로 병 또는 병의 부모는 오토바이 매매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바로 알기 ① 갑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게임기를 구매하였으므로 갑의 부모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은 용돈의 범위 내에서 옷을 구매하였으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을의 부모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병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였고, 정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병과 정은 모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A는 거래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B와

D가 맺은 계약은 모두 유효하므로 B와 D는 각각 을의 부모와 정의 부모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08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부르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먼저 타인의 불법적인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사회적으로 허용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친 경우이다.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긴급 피난으로,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를 들어 화재를 피하기 위해 남의 집 담을 넘어 도망친 경우이다. 권리 보전을 위해 법정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자구 행위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예를 들어 빌려준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서 즉시 물건을 되찾는 경우이다. 그리고 정당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절개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의료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법원은 갑이 농구 경기 중 을의 얼굴을 부딪쳐 앞니 2개를 부러뜨린 것은 맞지만 농구 경기 자체의 위험성을 살펴볼 때 갑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갑은 25세로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없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② 불법 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③ 갑이 을에게 손해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④ 갑이 을의 얼굴을 부딪쳐 을이 다친 것이므로 갑의 행위와 을의 손해 간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09 불법 행위 책임

자료 분석

핵심 특수 불법 행위는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되고,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성립해.

-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 고등학생 갑(17세)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A가 주차장에 세워 둔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A는 갑의 어머니인 을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다.
- 이삿짐센터 직원인 병(35세)은 B의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상자에 들어 있던 도자기를 깨뜨렸다. B는 이삿짐센터의 사장인 정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다.

병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해.

갑이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므로 갑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지지 않아.

⑤ 정은 사용자, 병은 피용자이다. 피용자인 병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면 정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병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정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로 알기 ① 갑은 17세로서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인 A는 가해자인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이 갑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경우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병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병의 선임 및 감독에 대한 정의 과실이 없다면 정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을이 지는 책임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지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다. 정은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것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다.

10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제시된 사례에서 A와 B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A의 식당에서 손님 B가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서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② B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재해야 손해 배상액 산정에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손해 배상의 산정 내역이 없어 누구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④ A가 가해자인지 아니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로 알기 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추후에 새로운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배상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A, B가 작성한 합의서에 후유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가)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나)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서는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서는 재산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ㄱ.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여 국가나 다른 개인이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ㄴ.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강조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상충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바로 알기 ㄷ.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모두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ㄹ.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개인이 가진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개인의 소유권 행사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타난 원칙이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물권의 배타성과는 관련이 없다.

12 등기부의 구성

제시된 자료와 같은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장부로, 크게 표제부·갑구·을구로 구분된다. 먼저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기본적 사항이 기재되는데, 토지의 경우 지번·지목·면적 등이, 건물의 경우 구조·면적·위치 등이 포함되어 부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며, 최초의 소유권 설정부터 소유권 이전,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변동 내역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소유권의 귀속을 명확히 한다.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 제한물권이나 채권적 권리가 기록되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ㄱ. 매매 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었으므로 갑이 을에게 이 주택을 매도했음을 알 수 있다. ㄷ.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을이 병에게서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ㄴ. 갑구에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을이 현재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ㄹ. 을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병은 이 주택을 경매에 넘기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이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13 저당권

자료 분석

핵심 갑은 을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어, 부동산이 경매되면 경매 대가에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아. 채무의 담보가 돼.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의 부동산에 이것을 설정한 후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더라도 갑은 여전히 그 부동산에 대해 이것을 가진다. 을이 갑으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한 경우, 갑은 비록 병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자는 변제 기간 내에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어.

제시된 글에서 밑줄 친 '이것'은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채무 변제가 없을 때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저당권은 소유권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기재되는 권리이다.

바로 알기 ①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이므로 등기함으로써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점유 이전과는 무관하다. ②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유효하게 인정된다. ④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이다. 저당권은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에 해당한다. ⑤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용·수익·처분을 모두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다. 저당권은 담보 물권으로서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처분 권능만 가질 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14 주택 임대차

⑤ 을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후에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갑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병의 권리보다 을의 보증금 변제 권리가 우선한다.

바로 알기 ① 등기부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②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 신고를 완료하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을은 2025년 11월 3일에 대항력을 획득하였다. ③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획득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획득한다. 을은 2025년 11월 3일에 대항력을 획득하였고, 2025년 11월 2일에 확정 일자를 받았으므로 2025년 11월 3일에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였다. ④ 주택 임대차 기간은 2년을 보장받으므로 을은 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2027년 10월 31일까지 갑의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

15 일상 가사

예시 답안 일상 가사, 일상 가사로 발생한 채무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진다.

채점 기준	
상	일상 가사를 쓰고,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부부 연대 책임까지 서술한 경우
하	일상 가사만 쓴 경우

17 동물 점유자의 책임

예시 답안 병은 개의 점유자인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갑은 을의 반려견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주의를 다해야 하는데 잠시 다른 곳을 보느라고 주의를 소홀히 하여 병이 다쳤으므로 개의 점유자인 갑이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진다.

채점 기준	
상	동물 점유자 책임과 관련한 사례에서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근거와 함께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동물 점유자 책임과 관련한 사례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만 서술한 경우

Ⅱ 국가 생활과 법

01 국가 운영 원리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056쪽

01 (1) ㄴ (2) ㄱ (3) ㄷ **02** (1) – ㉡ (2) – ㉠
03 (가) 국회, (나) 대통령, (다) 법원 **04** (1) 대통령 (2) 국회 (3) 법원
05 ④ **06** ㄴ, ㄷ **07** ② **08** ③ **09** ②

05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④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민회에 모여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하였다.

바로 알기 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② 입헌주의는 근대 시민 혁명 이후에 정착된 원리이다. ③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시행되었다. ⑤ 고대 아테네에서는 추첨제와 윤번제를 통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을 맡을 수 있었다.

06 현대 사회의 특징

ㄴ. 현대 사회에서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 ㄷ. 근대 사회에서 확립된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두하였다.

바로 알기 ㄱ. 현대 사회에서는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신분, 재산, 성별에 따라 참정권이 차등 부여된 것은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에 해당한다.

07 홉스의 사회 계약설

② 홉스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자연권을 통치자에게 전부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④ 로크는 개인이 자연권을 국가에 일부 위임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국가가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시민은 언제든지 위임한 권리를 회수하고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③, ⑤ 루소는 개개인의 자연권은 양도될 수 없고, 그들이 구성하는 도덕적 인격체에 이를 이전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국가를 일반 의지가 구현되는 정치적 공동체로 보았다.

08 대통령의 권한

③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바로 알기 ①, ②, ④, ⑤ 국회의 권한이다.

09 법원의 권한

②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을 제청할 수 있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과 행정부의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위법성 심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057~060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⑤ **05** ⑤ **06** ㉡ 국민 투표, ㉢ 국민 발안, ㉣ 국민 소환 **07** ⑤ **08** ③ **09** ③ **10** ①
11 ① **12** ④ **13** ⑤ **14** ② **15** ③ **16** ②
17 A: 국회, B: 법원 C: 헌법재판소 **18** ③

01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민회를 통한 직접 민주 정치가 실시된 A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이다. 근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는 모두 대의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된 B가 현대 민주주의이므로 C는 근대 민주주의이다. ③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를 중심으로 대의제가 운영되었다.

바로 알기 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였으므로, 시민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낮았다. ② 사회 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것은 근대 민주주의이다. ④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다. 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가 시행되었고,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였다.

✦ 미리 꼭 암기! 근대 사회의 특징
의회 중심의 대의제 발달+형식적 법치주의 확립+입헌주의 원리 정립 →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02 근대 시민 혁명 과정의 주요 문서

자료 분석

(가) 영국의 권리 장전(1689) — 민주주의 요소
- 제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 제4조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이 쓰기 위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 법치주의 요소

(나) 미국 독립 선언(1776) — 천부 인권 사상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 — 민주주의 요소

ㄱ. 영국의 권리 장전은 의회의 동의 없는 군주의 권력 행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하여 의회 중심의 법치주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ㄴ. 미국 독립 선언은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라고 선언하여 국민 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확립하였다.

바로 알기 ㄷ. 시민 혁명은 천부 인권 사상,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 등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ㄹ. 보통 선거 제도는 시민 혁명의 직접적인 결과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차티스트 운동 등 지속적인 선거권 확대 운동의 영향을 받아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확립되었다.

03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

(가)는 천부 인권 사상, (나)는 계몽사상, (다)는 사회 계약설이다. 근대 시민 혁명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천부 인권 사상과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따라 낡은 전통과 관습을 극복하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보는 계몽사상,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설립하였다고 보는 사회 계약설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04 사회 계약설

갑은 리바이어던에게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홉스이다. 을은 자연권을 국가에 일부 위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로크이다. 병은 자유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체에 이전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루소이다. ⑤ 홉스, 로크, 루소 모두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입헌 군주제를 주장한 사상가는 로크이다. ② 시민 모두가 일반 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③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주장한 사상가는 홉스이다. ④ 로크는 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주어진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 이건 꼭 암기!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홉스, 로크, 루소**

-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 **홉스**
- 자연권을 국가에 일부 위임+저항권 인정 → **로크**
- 자연권 절대 양도 불가+일반 의지 실현 → **루소**

05 현대 사회의 특징

⑤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바로 알기 ①, ②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제 요소와 전자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 ③ 참정권 확대 운동의 결과로 20세기 중반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④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초기에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강조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그 의미가 실질적 법치주의로 확장되었다.

✦ 이건 꼭 암기! **현대 사회의 특징**

보통 선거 제도 확립+대의제의 결함 보완(직접 민주제 요소 도입, 전자 민주주의 시행)+실질적 법치주의 대두 →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06 직접 민주제 요소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는 국민 투표,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발안, 대표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는 국민 소환이다.

07 법치주의의 유형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실질적 법치주의이고, '아니요'라고 답한 B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⑤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바로 알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므로,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에 합치해야 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적 경험을 반성하면서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였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 이건 꼭 암기! **법치주의의 유형**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목적과 내용은 문제 삼지 않음 → **형식적 법치주의**
- 법률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의 정당성도 강조함 → **실질적 법치주의**

08 히틀러의 수권법

ㄴ. 수권법 제2조에서 헌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을 배제하였으므로, 입헌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ㄷ. 수권법은 형식적 법치주의가 악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바로 알기 ㄱ. 수권법 제1조에서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법률 의결권을 행정부에도 부여하였고, 제2조에서는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 헌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결과 행정권이 입법권을 침범하면서 권력 분립의 원리가 무력화되었고,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되었다. ㄹ. 수권법은 법률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실질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09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제시된 글은 민주주의의 동적인 성격과 법치주의의 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두 원리가 현실에서 대립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법치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동시에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양자의 긴장 관계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권력 분립의 원리

(가)의 확립으로 국가기관을 여러 개로 나누고 각각의 국가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가)는 권력 분립의 원리이다. ㄱ. 권력 분립의 원리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장한다. ㄴ. 권력 분립의 원리는 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함부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바로 알기 ㄷ, ㄹ.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사법권은 사법부에 각각 부여하고 있다.

✦ 미건 꼭 암기! **권력 분립의 원리의 목적**

권력의 독점과 남용 방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권력 분립의 원리의 목적**

11 권력 분립의 원리의 기능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은 행정 소송을 통해 위법한 행정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한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12 유신 헌법

④ 유신 헌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면, 국회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⑤ 유신 헌법 제40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고, 이를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당선을 결정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 구성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서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②, ③ 유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구성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국회 해산권까지 가진다. 이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로, 권력 분립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였다거나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3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 비교

A는 대통령, B는 국회이다. ⑤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 수단이다. ④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 미건 꼭 암기! **국회와 행정부(대통령)의 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국정 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임명에 관한 동의 권한+재정에 관한 권한 등 → **국회의 권한**
-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헌법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국정 운영에 관한 권한 등 → **행정부(대통령)의 권한**

14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주체

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A는 국회,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정부의 수반인 B는 대통령,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법원을 구성하는 C는 법관이다. ㄱ.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국회는 대통령과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통해 행정부(대통령)와 법원을 각각 견제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ㄴ. 국회는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의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ㄷ.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여 선전 포고권과 강화권을 가진다.

✦ 미건 꼭 암기! **헌법에 명시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주체**

- 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체 → **국회**
-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 →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15 대통령의 권한

③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바로 알기 ① 사면권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회복(복권)시키는 권한으로, 법원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②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④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⑤ 조약 체결 및 비준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주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16 헌법재판소의 권한

(가)는 정당 해산 심판, (나)는 위헌 법률 심판, (다)는 헌법 소원 심판이다. 그리고 A는 헌법재판소, B는 법원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바로 알기 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은 정당 해산 심판이다. ③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④ 명령·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은 법원의 권한이다. ⑤ 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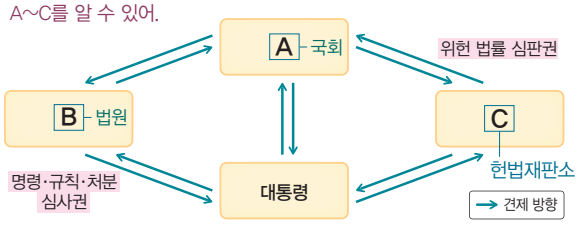
✦ 이건 꼭 암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비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심사권 → **법원의 권한**
-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 **헌법재판소의 권한**

17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 견제 수단

자료 분석

핵심 제시된 명령·규칙·처분 심사권과 위헌 법률 심판권을 통해 A~C를 알 수 있어.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는 B는 법원이다. C는 위헌 법률 심판권을 통해 A를 견제하므로 헌법재판소이다. 나머지 A는 국회이다.

18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주요 권한

③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바로 알기 ① 헌법 소원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② 법률 제·개정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④ 국회는 법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⑤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061쪽

01 주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과 한계

예시 답안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민회에 모여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권이 자유민인 성인 남성에게만 부여되어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 참여에서 배제된 제한적 민주주의였다.

채점 기준	
상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과 한계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과 한계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권력 분립의 원리의 필요성

예시 답안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리이다. 권력이 분산되어야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채점 기준	
상	권력 분립 원리의 필요성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관점에서 서술한 경우
하	권력 분립 원리의 필요성을 단순하게 서술한 경우

03 주제: 법치주의의 유형

(1) 답 ㉠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2) 예시 답안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만을 강조하므로,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자유·평등·정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므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점을 핵심 어구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점을 핵심 어구 두 가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점을 핵심 어구 한 가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04 주제: 위헌 법률 심판

(1) 답 헌법재판소

(2) 예시 답안 결정문에 나타난 심판은 위헌 법률 심판이다.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통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함으로써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쓰고, 법원과 국회, 헌법재판소와 국회 간 견제 관계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쓰고, 법원과 국회, 헌법재판소와 국회 간 견제 관계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만 쓴 경우

05 주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예시 답안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여 이를 관철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모습이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것은 법치주의의 모습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실현되며, 두 원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조건〉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적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조건〉에 제시된 내용 중 한 가지만 적용하여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062~063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⑤

0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

자료 분석

A~C 시기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두 가지씩 서술하시오. (단, 옳은 답을 쓴 경우 하나당 1점, 틀린 답을 쓴 경우 하나당 0점을 부여함.)

핵심 A의 채점 결과가 2점이므로 A의 내용은 모두 옳은 답임을 알 수 있어.

현대 사회

구분	내용	채점 결과
A	•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 옳은 답 • (가) — 옳은 답	2점
B 고대 아테네	• 직접 민주 정치가 시행되었으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은 자유민인 성인 남성으로 한정되었다. — 옳은 답 •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두하였다. — 틀린 답	1점
C 근대 사회	• 전자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 틀린 답 • (나) — 옳은 답	1점

핵심 B의 채점 결과가 1점이므로 현대 사회의 내용에 해당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두하였다.'가 틀린 답임을 알 수 있어.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된 A는 현대 사회, 직접 민주 정치가 시행된 B는 고대 아테네이므로, C는 근대 사회이다. ⑤ (나)에는 근대 사회의 특징에 해당하는 옳은 답이 들어가야 하므로, '사람에 의한 지배를 거부하고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었다.'가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고대 아테네에서는 추첨제와 윤번제를 통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을 맡을 수 있었다. ② 현대 사회에서는 신분, 재산, 성별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가 실시되었다. ③ 현대 사회에서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과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였다. ④ (가)에는 현대 사회의 특징에 해당하는 옳은 답이 들어가야 하므로, 고대 아테네의 특징인 '시민이 민회에 모여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가 들어갈 수 없다.

02 법치주의의 유형

자료 분석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

절대 왕정 시기에는 국왕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목적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A는 통치자의 합법적인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형식적인 원칙과 함께 자연법, 인권과 같은 실질적 내용까지를 그 불가분의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B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특징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아닌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여, 입법자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한다. ㄹ.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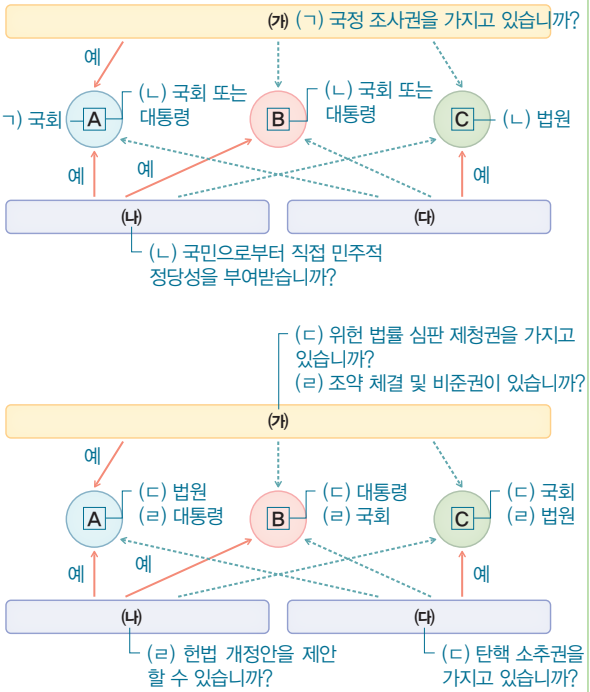
바로 알기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통치 권력이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법치주의의 유형 비교

구분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공통점	• 국가 권력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봄 •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봄	
차이점	•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함 •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내용의 정당성도 강조함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됨

03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권한

자료 분석



(가)~(다)의 질문에 따라 A, B, C는 각각 국회, 법원, 대통령 중 하나가 된다. ㄴ. (나)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습니까?'가 들어가면 A와 B는 각각 국회 또는 대통령이 된다. 따라서 C는 법원이 되므로 (다)에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ㄷ. (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들어가면 A는 법원이고, (다)에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들어가면 C는 국회이므로 B는 대통령이 된다.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과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바로 알기 ㄱ. (가)에 '국정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들어가면 '예'라고 답한 A는 국회이다. (나)에는 국회와 다른 국가기관이 함께 가지는 권한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까?'는 들어갈 수 없다. ㄹ. (가)에 '조약 체결 및 비준권이 있습니까?'가 들어가면 A는 대통령이고, (나)에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가 들어가면 B는 국회이다. 따라서 C는 법원이 되므로,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까?'가 들어갈 수 없다.

04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 견제 수단

자료 분석

우리나라 헌법은 각 국가기관이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여러 견제 수단을 두고 있다.

- A는 헌법에서 정한 주요 조약을 체결·비준할 때 B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C는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통해 B를 견제할 수 있다.
- D의 구성에는 A와 B, 그리고 C의 장(長)이 모두 관여하여 D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주요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의 권한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대법원, D는 헌법재판소이다. 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바로 알기 ① 국회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②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회는 국정 감사 및 조사(판결 제외)를 통해 대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 ④ 규칙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구분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됨	법관의 자격이 있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구성원의 임명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함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임 → 모두 대통령이 임명함

02 우리나라 헌법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068쪽

01 헌법 02 (1)–㉡ (2)–㉠ (3)–㉣ (4)–㉤ (5)–㉢
03 (1) ㄱ (2) ㄴ (3) ㄷ 04 (1) × (2) ○ (3) ○
05 ① 06 ③ 07 ④ 08 ④ 09 ③

04 평등권에서 추구하는 '평등'의 의미

(1) 평등권에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다른 취급을 금지하는 절대적·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05 헌법의 국가 창설 기능

제시된 글은 건국 헌법 제정 후에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보여 주므로,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정하는 헌법의 국가 창설 기능과 관련된다.

06 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 헌법 조항

③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평화주의 원리와 관련된다.

07 사회권의 성격

④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권리이다.

바로 알기 ① 청구권, ② 평등권,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⑤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08 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제도

④ 국가 배상 제도와 형사 보상 제도는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국가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 보장과 관련된다.

09 기본권 제한의 형식 요건

③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국가의 자의적인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069~072쪽

01 ⑤ 02 ③ 03 ⑤ 04 복지 국가 원리 05 ② 06 ④
07 ② 08 ⑤ 09 ② 10 ⑤ 11 ⑤ 12 ③ 13 ②
14 ② 15 ① 16 ① 17 과잉 금지의 원칙 18 ③

01 헌법의 특징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법률이나 명령, 자치 법규 등은 헌법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이자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 규범이기 때문이다.

바로 알기 ①, ②, ③, ④ 모두 헌법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자료와는 거리가 멀다.

✦ 이건 꼭 암기! 헌법의 최고 규범성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 → **헌법**

02 헌법의 기능

제시된 글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때 헌법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합의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통합하는 헌법의 기능과 관련된다.

바로 알기 ①, ②, ④, ⑤ 모두 헌법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글에서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 이건 꼭 암기! 헌법의 공동체 유지·통합 기능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원리, 제도, 질서를 바탕으로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통합함 → **공동체 유지·통합 기능**

03 법치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

A는 법치주의 원리이다. 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은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의 실현과 관련된다.

바로 알기 ① 평화주의 원리, ② 복지 국가 원리, ③ 문화 국가 원리, ④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 이건 꼭 암기!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법치주의 원리

권력 분립, 법치 행정, 법률에 따른 재판, 적법 절차의 원리, 위헌 법률 심판 등 → **법치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

04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사례

제시된 기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상시적 돌봄과 보호를 강화한 사례로, A는 복지 국가 원리이다.

05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

ㄱ, ㄹ. 복지 국가 원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로, 사회권 보장을 통해 실현된다.

바로 알기 ㄴ.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ㄷ.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평화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 이건 꼭 암기!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복지 국가 원리

사회권 보장, 사회보장 제도 운영, 최저 임금제 시행, 소득 재분배 정책 등 →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

06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

제시된 글에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으므로, A는 민주주의 원리이다. ④ 국민 투표제는 국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제도로, 민주주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

바로 알기 ① 평화주의 원리, ② 문화 국가 원리, ③ 법치주의 원리, ⑤ 복지 국가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 이건 꼭 암기! 민주주의 원리의 의미와 실현 방안

-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민주주의 원리**
- 참정권 보장, 대의 제도, 민주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공무 담임권 규정,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 →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

07 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 헌법 조항

A는 복지 국가 원리, B는 평화주의 원리, C는 문화 국가 원리이다. ㄱ. 복지 국가 원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ㄹ.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가의 법률 제정 및 정책 결정 방향을 제시한다.

바로 알기 ㄴ. 국민에 대한 평생 교육의 진흥은 문화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ㄷ. 우리나라는 평화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속 자문 기구인 평화 통일 자문 회의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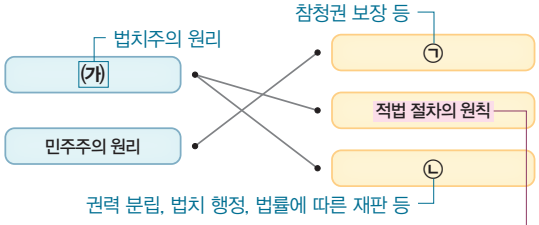
08 복지 국가 원리와 평화주의 원리

A에서는 '기회의 균등', '균등한 향상'과 같이 '균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므로, 복지 국가 원리와 관련된다. B는 '국제법과 조약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이 나타나 있으므로 평화주의 원리와 관련된다. ⑤ (가)에는 평화주의 원리와 관련된 헌법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위헌 법률 심판은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② 평화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③ 복지 국가 원리와 평화주의 원리는 모두 헌법의 기본 원리로, 개별 헌법 조항이나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④ 최저 임금제는 복지 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이다.

09 헌법의 기본 원리와 실현 방안

자료 분석



핵심 (가)의 실현 방안으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연결되었으므로 (가)가 법치주의 원리임을 알 수 있어.

(가)는 법치주의 원리이다. ㄱ. ㉠에는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인 참정권 보장이 들어갈 수 있다. ㄹ. '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의한다.'라고 명문화된 규정은 법치주의 원리와 관련된다.

바로 알기 ㄴ. '독점 규제 및 소비자 보호'는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므로 ㉡에 들어갈 수 없다. ㄷ.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는 민주주의 원리이다.

10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ㄷ, ㄹ.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권리로,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근거이자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이다.

바로 알기 ㄱ.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근본이념으로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이건 꼭 암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모든 기본권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근거,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 기본권 유형 관련 헌법 조항

(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평등권 관련 조항이고, (나)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자유권 관련 조항이다. (다)는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참정권 관련 조항이고, (라)는 국가에 청원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청구권 관련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마)는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사회권 관련 조항이다.

12 자유권 침해 사례

갑은 언론·출판 및 표현의 자유를, 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A는 자유권이다. ③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때 보장되는 방어적 권리이다.

바로 알기 ①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며,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④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공무 담임권은 참정권에 해당한다. 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 이건 꼭 암기!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 → **자유권**

13 평등권과 청구권 침해 사례

(가)는 평등권이 침해된 사례이고, (나)는 청구권이 침해된 사례이다. 따라서 A는 평등권, B는 청구권이다. ②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 청구권의 내용으로, 청구권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바로 알기 ①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③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권리이다. ④ 평등권과 청구권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⑤ 양심의 자유는 자유권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 이건 꼭 암기! **청구권 관련 헌법 규정**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등 → **청구권**

14 기본권 유형의 비교

자료 분석

질문	청구권 A	사회권 B	자유권 C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 — 사회권, 청구권이 해당해.	예	예	아니요
(가)	예	아니요	아니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 — 사회권의 특징이야.	아니요	예	아니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C는 자유권이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B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A는 청구권이다. ② 사회권의 헌법 규정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환경권 등이 있다.

바로 알기 ① 청구권은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③ 자유권은 청구권, 사회권과 달리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④ 자유권은 사회권, 청구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⑤ (가)에는 청구권의 특징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제시된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 이건 꼭 암기!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의 성격**

- 적극적 권리+현대적 권리 → **사회권**
- 소극적·방어적 권리+포괄적 권리 → **자유권**
- 적극적 권리+절차적 권리+수단적 권리 → **청구권**

15 사회권, 참정권, 평등권

A는 참정권, B는 사회권, C는 평등권이다. ①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로, 민주주의 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바로 알기 ② 사회권은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이다. ③ 평등권에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다른 취급을 금지하는 절대적·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④ 사회권과 평등권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⑤ 기본권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준수될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 이건 꼭 암기! **사회권, 참정권, 평등권 관련 헌법 규정**

-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 3권, 환경권 등 → **사회권**
-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등 → **참정권**
- 여성 근로자의 차별 금지, 연소 근로자의 특별 보호 등 → **평등권**

16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우리나라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목적 요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방법 요건) 법률로써(형식 요건)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헌법에 그 요건과 한계를 엄격히 규정하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제한을 방지하고 있다.

✦ 미건 꼭 맑기! 기본권 제한 규정(헌법 제37조 제2항)의 내용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 **기본권 제한의 요건**
-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기본권 제한의 한계**

17 과잉 금지의 원칙

제시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과잉 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

✦ 미건 꼭 맑기! 과잉 금지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여야 한다는 원칙 → **과잉 금지의 원칙**

18 기본권 제한 사례

제시된 사례는 금융 정보 제공 요구의 사유나 경위, 요구된 거래 정보의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국민의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요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됨을 보여 준다. ㄱ, ㄷ.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지만,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아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바로 알기 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제한 여부를 판단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자유권의 일종으로,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포괄적 기본권이기도 하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073쪽

01 주제: 헌법의 기본 원리의 기능

예시 답안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헌법의 개별 조항이나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채점 기준	
상	헌법의 기본 원리의 기능을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헌법의 기본 원리의 기능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평등권의 의미와 성격

예시 답안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채점 기준	
상	평등권의 의미와 성격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평등권의 의미와 성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복지 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1) 답 (가) 복지 국가 원리, (나) 민주주의 원리

(2) 예시 답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복지 국가 원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복지 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헌법에 사회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헌법에 참정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채점 기준	
상	복지 국가 원리, 민주주의 원리의 의미와 실현 방안을 핵심 어구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복지 국가 원리, 민주주의 원리의 의미와 실현 방안을 핵심 어구 중 세 개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복지 국가 원리, 민주주의 원리의 의미와 실현 방안을 핵심 어구 중 두 개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04 주제: 자유권과 사회권 비교

(1) 답 A: 자유권, B: 사회권

(2) 예시 답안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인 반면, 사회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인 반면,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 사상이 등장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현대적 기본권이다.

채점 기준	
상	자유권과 사회권의 차이점을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자유권과 사회권의 차이점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기본권 제한 관련 사례 분석

예시 답안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과잉 금지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의 조항이 양심의 자유, 즉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조건〉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근거를 서술한 경우
하	〈조건〉에 제시된 내용 중 한 가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근거를 적용하여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074~075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①

01 헌법의 기본 원리 구현 사례

자료 분석

〈사례로 본 헌법의 기본 원리〉

• A가 구현된 사례	• B가 구현된 사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보 취약 계층에게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함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정부가 분쟁 지역에 구호물자와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함

복지 국가 원리에 대한 설명이야. 평화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야.

A는 복지 국가 원리, B는 평화주의 원리이다. ④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규정은 평화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바로 알기 ①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의 원리는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② 국민 투표제는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③, 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모두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 민주주의 원리가 평화주의 원리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02 헌법의 기본 원리 비교

자료 분석

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 헌법 내용	실현 방안
A (문화 국가 원리)	(가)	• 전통문화 계승 의무 • 문화·예술의 자유 보장
B (법치주의 원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위헌 법률 심판 • (나)

핵심 실현 방안에서 '전통문화 계승 의무'와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A가 문화 국가 원리, B가 법치주의 원리임을 알 수 있어.

A는 문화 국가 원리, B는 법치주의 원리이다. ㄱ. 문화 국가 원리는 국가가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ㄷ.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한 책무'는 문화 국가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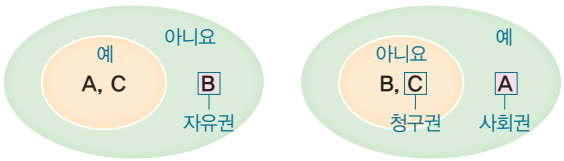
바로 알기 ㄴ. 법치주의 원리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는 핵심 원리로 자리 잡았다. ㄹ. (나)에는 법치주의 원리의 실현 방안인 법률에 따른 재판, 적법 절차의 원칙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은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03 기본권의 유형 비교

자료 분석

아래 그림은 질문 (가), (나)에 대해 '예', '아니요' 중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기본권 유형끼리 묶은 것이다. 단, A~C는 각각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질문
(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 — 사회권, 청구권
(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 — 사회권



핵심 (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이고, (나)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기본권은 사회권이야.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 C는 청구권이다. ④ 자유권은 사회권, 참정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바로 알기 ① (가)에 대한 B의 응답은 '아니요'이고, (나)에 대한 A의 응답은 '예'이다. ②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한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사회권은 기본권 중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③ 사회권과 청구권은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인 반면, 자유권은 소극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⑤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비교

구분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의미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이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징	• 최근에 등장함 •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함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됨	• 수단적 역할 •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함
성격	• 적극적, 현대적 권리 • 열거적 권리	• 소극적, 방어적 권리 • 포괄적 권리	• 적극적, 절차적 권리 • 열거적 권리

04 과잉 금지의 원칙

자료 분석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득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특정 기본권 주체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A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권 제한은 공익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적합하고 필요하며 법익의 균형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과잉 금지의 원칙 내용이야.

A 원칙은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ㄱ. 과잉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ㄴ. 과잉 금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정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바로 알기 ㄷ. 과잉 금지의 원칙에서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의미이다. ㄹ. 과잉 금지의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해당한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과잉 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의 수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함
피해의 최소성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

03 형법과 형사 절차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080쪽

01 (1) 형법 (2) 죄형 법정주의 02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03 (1) 무죄 (2) 피의자 (3) 검사 (4) 구속 적부 심사 제도
04 (1) ㄴ (2) ㄱ (3) ㄷ 05 ④ 06 ② 07 ① 08 ③
09 ④

05 형법의 보호적 기능

제시된 글은 형법이 개인과 사회의 법익을 보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관련된다.

06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제시된 글은 '지나치게 내놓아'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07 위법성 조각 사유

갑은 자신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도를 밀쳐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②, ③, ④, ⑤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조각 사유는 아니다.

08 보안 처분의 종류

보안 처분에는 보호 관찰, 치료 감호,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등이 있다.

바로 알기 ③ 자격 정지는 형벌의 종류 중 명예형에 해당한다.

09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①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 전반에서 보장된다. ② 공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③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⑤ 명예 회복 제도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④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 보장되는 인권 보장 제도이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081~084쪽

01 ⑤ 02 ④ 03 ④ 04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05 ②
06 ⑤ 07 ② 08 ③ 09 ⑤ 10 ① 11 ②
12 (가) 피의자, (나) 피고인 13 ② 14 ③ 15 ⑤ 16 ①
17 ④ 18 ④

01 형법의 보장적 기능

제시된 글은 국가로 하여금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벌만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⑤ 형법은 보장적 기능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바로 알기 ①, ②, ③, ④ 모두 형법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자료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이건 꼭 암기! 형법의 기능

-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을 방지함 → **보장적 기능**
- 범죄를 규정하고 범죄 발생 시 형벌을 부과하여 개인과 사회의 법익을 보호함 → **보호적 기능**

02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변천

A는 근대의 죄형 법정주의, B는 현대의 죄형 법정주의이다. ㄴ. 현대의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까지 강조하여 입법권의 자의적 행사도 제한한다. ㄹ. 죄형 법정주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포함한다.

바로 알기 ㄱ. 근대의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아 입법자에 의한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ㄷ. 죄형 법정주의는 성문의 법률이 아닌 관습법의 적용을 금지한다.

✦ 이건 꼭 암기!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근대적 의미**
-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현대적 의미**

03 적정성의 원칙

제시된 자료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으므로, A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④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 행위와 형벌의 정도가 서로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바로 알기 ① 소급효 금지의 원칙, ②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이건 꼭 암기! 적정성의 원칙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 **적정성의 원칙**

04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사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적용했다고 하였으므로, (가)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

05 죄형 법정주의 적용 판례 분석

ㄱ. ㉠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문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염소는 법률이 정한 수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갑의 행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로 알기 ㄴ. 죄형 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이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정도는 법관이 아닌 법률에 의해야 한다. ㄹ. 행위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유추 해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06 위법성 조각 사유

(가)는 피해자의 승낙, (나)는 긴급 피난, (다)는 정당방위이다. ⑤ 긴급 피난과 정당방위는 타인 또는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바로 알기 ① 목줄이 풀린 채 자신에게 돌진하는 맹견을 피하기 위해 근처 가정집으로 들어간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② 불법 납치를 피하기 위해 납치범을 밀쳐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③ 동거인이 자신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둔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 ④ 정당방위는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행동이고, 긴급 피난은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다.

✦ 이건 꼭 암기!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 → **위법성 조각 사유**

07 범죄의 성립 요건

(가)는 위법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나)는 책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ㄱ. 제시된 사례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가)에 해당한다. ㄹ. (가)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나)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알기 ㄴ. 심신 미약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하는 사유이다.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나)는 책임이 조각된 경우로,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가)는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이므로 행위자의 책임 충족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 이건 꼭 암기!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 충족+위법성 충족+책임 충족 → **범죄 성립**

08 책임 조각 사유

자료 분석

사건	변호인의 주장	판결
(가)	갑(34세)은 심신 상실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임 — 책임 조각 사유	무죄
(나)	경찰 을(25세)의 폭행은 현행범인 소매치기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 — 위법성 조각 사유	무죄
(다)	병(47세)은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에 못 이겨 거액의 회사 돈을 협박범에게 송금한 것임 — 책임 조각 사유	무죄

핵심 (가)~(다) 모두 조각 사유가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어.

③ (다)에서 변호인은 병의 행위가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이므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바로 알기 ① (가)에서 변호인은 갑의 행위가 심신 상실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② (나)에서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하였으므로, 을의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④ (가)에서는 갑의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것이고, (나)에서는 을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것이다. ⑤ (나)와 (다)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을의 행위는 정당 행위가 인정되었고, 병의 행위는 협박에 의한 행위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건 꼭 암기! **책임 조각 및 감경 사유**

-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 심신 상실자의 행위, 폭력·협박으로 강요된 행위 등 → **책임 조각 사유**
- 심신 미약자의 행위,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의 행위 등 → **책임 감경 사유**

09 형벌과 보안 처분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A는 형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재 수단인 B는 보안 처분이다. ㄷ. 필요시 형벌과 보안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ㄹ. 형벌과 보안 처분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바로 알기 ㄱ. 보호 관찰과 치료 감호는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ㄴ. 자격 상실은 형벌 가운데 명예형에 해당하고, 과료는 재산형에 해당한다.

✦ 이건 꼭 암기! **형사 제재**

-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하는 제재 → **형벌**
-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 → **보안 처분**

10 구류, 금고, 징역 비교

자료 분석

	금고	구류	징역
질문	A	B	C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는가?	㉠	㉠	㉡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는가?	㉡	㉠	㉡

핵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는 형벌은 징역뿐이므로 ㉡이 '예'임을 알 수 있어.

A는 금고, B는 구류, C는 징역이다. 금고와 구류는 노역의 의무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고, 징역과 금고는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① ㉠은 '아니요'이고, ㉡은 '예'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②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소유권을 빼앗는 형벌은 몰수이다. ③ 인권의 핵심인 생명을 빼앗는 형벌은 사형이다. ④ 구류는 단기간 형벌이라는 점에서 금고, 징역과 차이가 있다. ⑤ 일정한 자격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형벌은 명예형이다.

✦ 이건 꼭 암기! **자유형의 종류**

- 1개월 이상 수용+정해진 노역에 복무 → **징역**
- 1개월 이상 수용+노역에 복무하지 않음 → **금고**
- 1일 이상 30일 미만 수용 → **구류**

11 보안 처분의 종류

② 치료 감호는 심신 장애 상태, 약물 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바로 알기 ① 보호 관찰은 범죄자가 집행 유예, 선고 유예, 가석방되었을 때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③ 벌금은 일정한 재산을 빼앗는 재산형에 해당한다. ④ 「동물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⑤ 보호 관찰과 치료 감호는 보안 처분에 해당하고, 벌금은 재산형에 해당한다.

✦ 이건 꼭 암기! **보안 처분의 종류**

보호 관찰, 수강 명령, 치료 감호, 사회봉사 명령 등 → **보안 처분**

12 피의자와 피고인

수사 기관에 의하여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의자'라고 하며, 수사 종결 후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 이건 꼭 암기! **범죄 혐의자의 지위 변화**

- 수사의 대상의 되는 수사 단계 → **피의자**
-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공판 단계 → **피고인**

13 형사 절차

㉠과 ㉡은 기소 전 단계이므로 수사 단계이다. ㉢은 공판, ㉣은 형 집행 단계이다. ㄱ.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ㄹ.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형벌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한다.

바로 알기 ㄴ. 갑은 구속 이후 수사 단계에서 구속 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 이전에 이루어진다. ㄷ.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보장된다.

14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제시된 문서는 구속 적부 심사 청구서이다. ③ 구속 적부 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이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구속 적부 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바로 알기 ① 구속 적부 심사 청구 시 제출한다. ② 구속 점부 심사는 기소 전 피의자 상태에서 청구하는 제도이다. ④ 구속 적부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의자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지 유죄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구속 적부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는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지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 이건 꼭 암기!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와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 →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 → **구속 적부 심사 제도**

15 헌법에 명시된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원칙

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 절차 원칙과 제12조 제2항의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 보장은 형사 절차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 이건 꼭 암기!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고문과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등 →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원칙**

16 형사 절차와 구제 제도

① (가)는 수사 단계로, 수사 기관이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을 한다.

바로 알기 ② 갑은 구속 기소되었으나 재판 도중 구속 집행이 정지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므로, 보석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③ (다)에서 갑은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④ 형사 보상은 불기소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 또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⑤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로, (마)에서는 갑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활용할 수 없다.

✦ 이건 꼭 암기!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

-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 → **선고 유예**
- 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선고한 형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 → **집행 유예**

17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및 형사 구제 제도

갑은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 국가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을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명예 회복 제도를 통해 무죄 사실을 공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건 꼭 암기!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배상 명령 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피해자 신변 보호 제도 등 →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18 형사 구제 제도

ㄴ.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구금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ㄹ. 명예 회복 제도를 통해 무죄 재판서를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ㄷ. 갑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므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와 피해자 신변 보호 제도는 갑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적절하지 않다.

✦ 이건 꼭 암기! **형사 구제 제도**

명예 회복 제도, 형사 보상 제도 등 → **형사 구제 제도**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085쪽

01 주제: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예시 답안 근대의 죄형 법정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법률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형벌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반면 현대의 죄형 법정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법률의 형식뿐 아니라 그 내용의 적정성까지 강조하여 입법권의 자의적 행사까지 제한한다.

채점 기준	
상	근대의 죄형 법정주의와 비교하여 현대의 죄형 법정주의의 특징을 서술한 경우
하	현대의 죄형 법정주의의 특징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징역과 금고 비교

예시 답안 징역과 금고는 모두 수형자를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징역은 수형자에게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인 반면, 금고는 원칙적으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채점 기준	
상	징역과 금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징역과 금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범죄의 성립 요건

(1) 답 (가) 책임, (나) 위법성

(2) 예시 답안 갑의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충족하나,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을의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은 충족하나,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채점 기준	
상	(가), (나)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핵심 어구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가), (나)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핵심 어구를 2개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가), (나)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핵심 어구를 1개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04 주제: 보안 처분

(1) 답 전자 감독 제도

(2) 예시 답안 전자 감독 제도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보안 처분의 하나이다. 보안 처분은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해 부과되는 대안적 성격의 형사 제재이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제재이다.

채점 기준	
상	보안 처분의 특징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하	보안 처분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예시 답안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나타나 있고,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여 법률적·사실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타나 있다. 이 두 원칙은 모두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채점 기준	
상	헌법 조항에 나타난 원칙을 쓰고, 두 조항의 목적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헌법 조항에 나타난 원칙만 쓴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086~087쪽

01 ④ 02 ① 03 ⑤ 04 ④

01 죄형 법정주의 적용 사례

자료 분석

「군 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 면전 모욕죄의 구성 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전화 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전화로 상관을 모욕한 이 사건에 대하여 상관 면전 모욕죄를 적용한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A 원칙에 반한다.

'면전에서'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것은 유추 해석 금지의 위반이야.

A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④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구성 요건을 만들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바로 알기 ① 명확성의 원칙, ② 적정성의 원칙, ③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⑤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02 범죄의 성립 요건

자료 분석

범죄를 형식적으로 정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법률만이 범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죄형 법정주의상의 법률적 개념이다. 이에 따른 범죄 개념은 A, B, C라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을 요소로 한다. A는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법률적 구성 요건에 합치되는 것을 말하고, B는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의미하며, C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A, B, C를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해.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다. 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처벌 근거 법률이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알기 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제시된 사례는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범죄 성립의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	법률에 규정된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법성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위법해야 함
책임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야 함

↓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범죄 성립

03 형사 절차

자료 분석

○○○○ 범죄 다큐멘터리

"일상 속 범죄를 파헤치다"

1화 "믿을 수 없는 목소리"

A(60세)는 금융 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갑(30세)에게 돈을 건네주려고 하였다. 이를 눈치 챈 은행의 청원 경찰이 갑을 붙잡은 후 경찰에 인계하였다. 이후 검사는 갑을 구속 기소하였고, 이 사건으로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

2화 "허위 영상, 진짜 피해"

대학생 B(20세)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신고하였다. 경찰은 수사 결과 B의 대학 동기인 을(20세)이 자신의 동생 병(13세)과 공모하여 지인 수십 명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한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을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고, 병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검토 중인데…….

3화 "교제 폭력의 실상"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야.

C(22세)는 교제 중인 정(25세)의 위치 추적, 휴대폰 검열 등 지속적인 통제와 협박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였다. 화가 난 정은 C를 둔기로 폭행하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를 피하고자 ㉠ C는 정을 밀치고 도망갔다. 정이 계속 쫓아오자 이를 피해 ㉡ C는 옆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신고를 하였다. 이후 경찰에 의해 정은 체포되었고, 검사는 C의 행위에 대해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 후 1심 법원은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C에 대한 보복의 위협 등을 이유로 구속하는데…….

긴급 피난 여부가 쟁점이야.

핵심 검사는 C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제시된 자료에서 정이 C에 대한 보복의 위협으로 구속되었다고 하였으므로, C가 정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C는 피해자 신변 보호 제도를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구속 적부 심사는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이므로, 기소된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갑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판사가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④ 정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04 형사 절차와 위법성 조각 사유

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와 피고인 을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ㄷ. 검사는 C의 행위에 대해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을 정당방위, ㉡을 긴급 피난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형사 보상 제도는 형사 피의자가 구금되었다가 불송치 결정되거나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구금된 상태에서 공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수형인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인 A는 형사 보상 제도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수사	• 구금+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 구금+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공판	구금+무죄 확정 판결
형 집행	구금+재심에 따른 무죄 확정 판결

04 사법의 의미와 한계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092쪽

01 사법권 02 (1) ○ (2) × 03 (1)–㉡ (2)–㉠
04 (1) ㄷ (2) ㄱ (3) ㄴ 05 (1) 소극적 (2) 입법 06 ② 07 ②
08 ② 09 ㄴ, ㄷ

02 대법원의 권한

(2) 대법원은 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 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 심판,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06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와 원칙

제시된 내용은 하나의 다른 사건을 서로 다른 급의 법원에서 반복하여 심판받을 수 있는 심급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알기 ① 영장주의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④, ⑤ 모두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제시된 자료에서 설명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07 대법원의 권한

대법원은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 심사권,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선거 소송 재판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바로 알기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의 탄핵 소추로 해당 공무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08 권한 쟁의 심판

제시된 사례는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 권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관의 권한 범위를 판단한 것으로, 권한 쟁의 심판에 해당한다.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이다.

바로 알기 ①, ③, ④, ⑤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와 관련된 권한은 아니다.

09 사법(司法)

ㄴ. 사법은 관련 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입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ㄷ. 사법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바로 알기 ㄱ.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법익을 일반적·추상적 법 규범으로 정립하는 것은 입법에 대한 설명이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093~096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④	06 ④	
07 (가) 대법원, (나) 고등 법원			08 ②	09 ①	10 ②	11 ②
12 ②	13 ①	14 ⑤	15 ⑤	16 ④	17 ③	

01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법원의 독립을,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들은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02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을. 법원에 대한 다른 국가기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을 실현하는 방안에 해당하므로 옳은 답변을 하였다. 병. 법관의 자격과 임기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는 것으로 옳은 답변을 하였다.

바로 알기 갑. 위헌 법률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정. 법관은 재판을 진행할 때 상급 법원은 물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하므로, 틀린 답변이다.

03 공정한 재판의 실현

①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원칙을 두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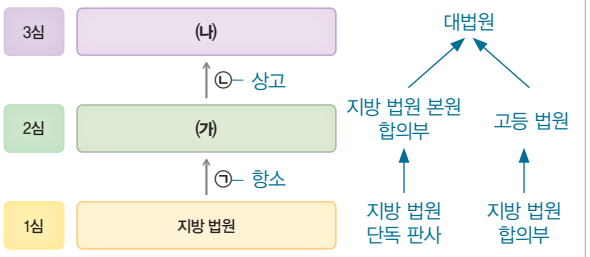
바로 알기 ② 제시된 글에서 말하는 '사법'은 국가기관이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사건에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이나 권리관계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③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심급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④ 증거 재판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⑤ 공개 재판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미건 꼭 암기! 공정한 재판의 실현 방안

사법권의 독립, 심급 제도, 공개 재판주의, 증거 재판주의 등 → **공정한 재판의 실현**

04 심급 제도

자료 분석



1심을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한 사건이면 (가)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가 되고, 1심을 지방 법원 합의부가 담당한 사건이면 (가)는 고등 법원이 된다. (나)는 대법원이다. 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바로 알기 ① 동일 사건에서 ㉠이 항소라면, ㉡은 상고에 해당한다. ② (가)가 고등 법원이면 1심에서 지방 법원 합의부가 담당한 사건이므로, 비교적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절차임을 알 수 있다. ③ 2심 재판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민사·형사 사건의 상고·재항고 최종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④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선거 소송은 대법원의 권한이다.

05 대법원

A는 상고 사건과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이다. 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ㄹ.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바로 알기 ㄱ.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ㄷ.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미건 꼭 암기! 대법원의 권한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 심사권,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선거 소송 재판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등 → **대법원의 권한**

06 대법원과 고등 법원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루어지므로 A는 대법원이다. 을의 1심을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였으므로 항소심인 B는 고등 법원이다. ④ 을은 2심을 담당하는 고등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영역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특허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 회생 법원 등이 있다. ② 대법원은 고등 법원의 상급 법원이다. ③ 갑이 소속된 ○○ 정당이 제기한 소송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으로 단심제가 적용된다. ⑤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은 법원의 권한이다.

07 우리나라 법원의 조직

(가)는 우리나라 법원 조직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다. (나)는 특허 법원과 동급의 법원이며 2심을 담당하는 고등 법원이다.

08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역할

② 고등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담당한 1심에 대한 항소 및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바로 알기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이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고등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을 담당하고,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④ 재판은 원칙적으로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공개

재판주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⑤ 회생 및 파산 사건은 회생 법원에서 담당한다. 가정 법원은 가사 소송과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한다.

09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A는 법원, B는 헌법재판소이다. 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담당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제청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청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②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청구로, 해당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③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후에 그것이 기각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이건 꼭 암기!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때,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는 심판 →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10 정당 해산 심판과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가)는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정당 해산 심판이다. (나)는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해 청구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이건 꼭 암기! **정당 해산 심판과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의 청구로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묻는 심판 →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11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자료 분석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질문 (위헌 법률 심판)	A	B
청구 주체가 법원인가?	예	아니요
(가)	예	예

A와 B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해.

핵심 청구 주체를 묻는 질문을 통해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구분할 수 있어.

"청구 주체가 법원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위헌 법률 심판이고, '아니요'라고 답한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ㄱ. 법원은 재판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ㄹ.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므로, 제시된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알기 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ㄷ. 위헌 법률 심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 이건 꼭 암기! **헌법재판소의 심판별 청구 주체**

-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청구 → **헌법 소원 심판**
-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 → **위헌 법률 심판**
-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소추 → **탄핵 심판**
-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 → **정당 해산 심판**
-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 → **권한 쟁의 심판**

12 헌법재판소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알기 ① 권한 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다. ③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법령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이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를 기속한다. ⑤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 이건 꼭 암기!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 관련 최종 심판을 담당+헌법 수호 → **헌법재판소**

13 위헌 법률 심판 제청

②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를 기속한다. ④ 재판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법원에 한다. ⑤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할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갑은 △△ 지방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고, △△ 지방 법원이 갑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다.

14 입법, 사법 비교

A는 입법, B는 사법이다. ㄷ. 입법과 사법은 법 규범의 제정과 해석·적용이라는 각자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ㄹ. 사법은 당사자가 그 해결을 의뢰할 때 발동하므로 입법에 비해 소극적·수동적 성격을 띤다.

바로 알기 ㄱ. 사법의 한계는 입법을 통해 법률을 제·개정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재설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ㄴ. 사법은 법적 삼단 논법의 추론 과정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 미건 꼭 암기! 입법과 사법 비교

-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법익을 일반적·추상적 법 규범으로 정립함 → **입법**
- 법 규범을 해석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해결함 → **사법**

15 사법의 한계

제시된 사례는 사법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률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사법의 한계를 보여 준다.

바로 알기 ①, ②, ③, ④ 모두 사법의 한계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16 사법의 한계와 입법론적 해결

제시된 사례에서 드러난 사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법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민 등록법」을 개정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17 시민의 입법 과정 참여 방법

입법 과정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법률이 사법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리나라는 시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을 두고 있다. ① 국민 신문고를 활용한 입법 참여 방법이다. ② 의원 소개 청원에 대한 설명이다. ④ 국민 참여 입법 센터를 활용한 입법 참여 방법이다. ⑤ 국민 동의 청원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알기 ③ 우리나라는 국민 발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의 권한이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097쪽

01 주제: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의미

예시 답안 법원의 독립은 법원의 조직과 운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등 외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자격과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여, 법관이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점 기준	
상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의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의 의미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입법, 사법의 성격 비교

예시 답안 입법은 국가기관이 적극적·능동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법 규범을 정립하는 국가 작용인 반면, 사법은 법적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당사자가 그 해결을 의뢰할 때 발동되므로 입법에 비해 소극적·수동적인 국가 작용이다.

채점 기준	
상	입법, 사법의 성격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입법, 사법의 성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심급 제도

(1) 답 (가) 항소, (나) 상고

(2) 예시 답안 하급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제도 A는 심급 제도이다. 심급 제도는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채점 기준	
상	심급 제도의 목적을 핵심 어구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심급 제도의 목적을 핵심 어구 중 두 가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심급 제도의 목적을 핵심 어구 중 한 가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04 주제: 헌법 소원 심판의 유형

(1) 답 (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 (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2) 예시 답안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인 반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재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청구하는 심판이라는 점에서 절차상 차이가 있다.

채점 기준	
상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입법과 사법의 바람직한 관계

예시 답안 제시된 사례는 사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률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사법의 한계를 입법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이처럼 입법과 사법은 법 규범의 제정과 해석·적용이라는 각자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사법의 한계와 해결 방안, 입법과 사법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입법과 사법의 바람직한 관계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098~099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④

01 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자료 분석

대법원 상고

A는 법원 조직상 최고 법원으로서 고등 법원, 특허 법원, 가정 법원, 지방 법원, 군사 법원의 민사·형사, 행정, 특허 및 가사 사건의 판결에 대한 (가) 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나)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 1회의 재판으로 종결되는 소위 단심(單審)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서 사건을 담당하기도 한다.

재항고

법원 조직상 최고 법원인 A는 대법원이다. 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따라서 ㉠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① 대법원은 상고심과 재항고심을 담당한다. 상고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 재항고는 2심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는 상고, (나)는 재항고이다. ③ 국가기관 상호 간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기관의 청구로, 국가기관의 권한 유무와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 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④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급 법원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지며, 위헌 법률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구성	•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대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역할	•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 심사권 •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 •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선거 소송 재판권 등

02 법원과 헌법재판소

자료 분석

핵심 갑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야.

대법원

○○죄로 기소된 갑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A가 이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 조항에 따른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갑은 □□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해당 조항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한편, △△죄로 기소된 을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법 조항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및 ◇◇법 조항에 따라 디엔에이(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검사는 을의 디엔에이 감식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을은 이에 불복하여 C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C에 신청하였다. C가 을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을은 ◇◇법 조항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B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핵심 을이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보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야.

A는 갑의 상고심을 진행하므로 대법원이다. B는 갑과 을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이다. C는 을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원이다. ① 갑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갑의 헌법 소원 심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바로 알기 ② 헌법재판소는 갑의 청구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소송 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이 C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법원은 ◇◇법 조항에 대한 을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⑤ 갑과 을은 모두 □□법 조항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03 헌법재판소의 권한

자료 분석

위헌 법률 심판이야.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법 기관으로 다양한 심판을 담당한다. 이 중 A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른 제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B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A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심판이다. C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청구로 해당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청구하는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야.

A는 위헌 법률 심판,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C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ㄷ.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권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다. 국가기관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의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ㄹ.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둔 명령이나 규칙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다.

04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료 분석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해.

갑은 자신을 모욕한 을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려고 하였으나, 명예 훼손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에 갑은 해당 조항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 헌법재판소에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 기각 결정하였다.

과잉 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어.

ㄱ.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이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ㄴ.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며, 이는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구제하는 심판이다. ㄷ.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하였으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바로 알기 ㄹ. 헌법 소원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례에서는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Ⅱ단원 실력 굳히기 102~105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③	05 ②	06 ④	07 ②
08 ②	09 ⑤	10 ①	11 ③	12 ②	13 ⑤	14 ③

15 ㉠ 민주주의, ㉡ 법치주의 16 해설 참조 17 해설 참조 18 해설 참조

0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

자료 분석

표는 학생 갑이 A~C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이다. 갑은 모든 질문에 옳게 답하였다.

근대 사회

질문	예	아니요
시민 혁명을 계기로 형성되었는가?	A	B, C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는가?	A, C	B
(가)	A, B	C

현대 사회

핵심 첫 번째 질문은 근대 사회의 특징이고, 두 번째 질문은 현대 사회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야.

시민 혁명을 계기로 형성된 A는 근대 사회이고, 여성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B는 현대 사회이다. 따라서 C는 고대 아테네이다. ⑤ 법치주의는 근대와 현대 사회에서 모두 강조되므로, 주어진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여하여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 원리를 기반으로 하였다. ② 고대 아테네에서는 추첨제와 윤번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공직을 담당한다. ③ 근대 민주주의는 천부 인권 사상,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의 영향을 받은 시민 혁명을 계기로 등장하였다. ④ 보통 선거 제도는 현대 사회에 이르러 확립되었으므로, 제시된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2 법치주의의 유형

법적 절차와 형식의 준수만을 법치주의의 실현 기준으로 삼는 A는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법률의 절차적 합법성뿐 아니라 그 내용과 목적이 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갑. 형식적 법치주의는 절차의 합법성을 갖춘 법률이라면 그 내용과 목적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을. 실질적 법치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며, 범죄와 형벌 간 적정한 균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죄형 법정주의의 적정성 원칙의 근거가 된다.

바로 알기 병.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의 행사가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형식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정. 현대 사회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악용되었던 역사적 반성을 토대로, 법률의 내용과 목적까지 실질적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03 국가기관 간 견제 수단

사면권은 대통령이 법원을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B는 대통령, C는 법원이다. 따라서 A는 국회이다. ②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한다.

바로 알기 ① 탄핵 심판권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고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해당한다. ③ 국정 조사 및 감사권은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국회는 국정 감사권 및 조사권을 통해 행정부(대통령)를 견제할 수 있다. ④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주요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등이 있다. ⑤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은 법원이 행정부(대통령)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없다.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등이 있다.

0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보건 복지부의 의료 보장, 교육부의 돌봄 지원, 고용 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은 국민의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복지 국가 원리와 관련된다. ③ 우리나라 헌법은 복지 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한다.

바로 알기 ① 민주주의 원리, ② 문화 국가 원리, ④ 평화주의 원리, ⑤ 법치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05 기본권 유형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인 A는 평등권이다. ②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과 상호 작용하면서 국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권이 보호하지 못하는 생활 영역에서도 국민을 보호한다. 따라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바로 알기 ①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방어적인 성격을 지닌다. ③ 청구권은 국민이 권리를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④ 평등권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⑤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06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ㄷ. 직업 수행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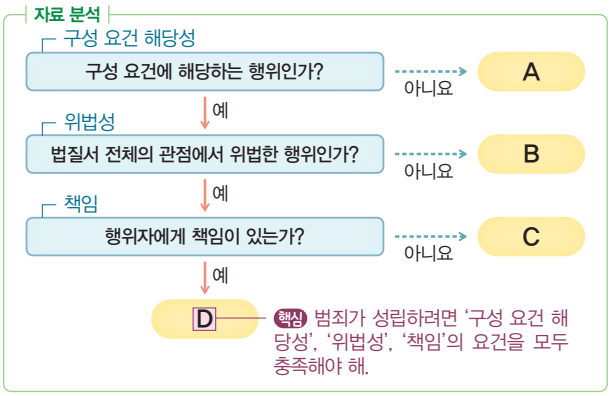
바로 알기 ㄱ. 갑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07 범죄의 구성 요건과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

A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고, B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이며, C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ㄱ. 범죄의 구성 요건을 유형화하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지므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구현된다. ㄷ.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다.

바로 알기 ㄴ.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구성 요건의 창설을 금지하는 것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ㄹ. 명확성의 원칙과 적적성의 원칙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적용된다.

08 범죄의 성립 요건



② 을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즉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B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① 우리나라 형법은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갑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C에 해당한다. ③ 심신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형을 감경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병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여 D에 해당한다. ④ 정의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B에 해당한다. ⑤ A, B, C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D의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범죄가 성립한다.

09 범죄와 형벌

⑤ 법원은 갑과 병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형벌을 부과하였으므로, 갑과 병의 행위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로 알기 ① '형법'이라는 명칭의 형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며, 「동물 보호법」처럼 '형법'이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금지 행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 ② 갑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즉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다. ③ 갑은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④ 병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한다.

10 형사 절차

①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기소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은 갑과 을은 기소 전에 구석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② 검사의 기소로 피의자였던 갑, 을, 병은 피고인 신분이 되어 검사와 함께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③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는 보석 제도이다. ④ 정은 피해자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수 없다. ⑤ 형사 보상 제도는 형사 피의자가 구금되었다가 불송치 결정되거나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구금된 상태에서 공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수형인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을은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1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ㄴ. 을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서 갑의 형사 재판 법원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ㄷ. 병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명예 회복 제도에 따라 확정된 무죄 재판서를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ㄹ.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한 범죄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정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2 법원의 조직과 역할

1심 재판을 담당한 A가 지방 법원 및 지원의 단독 판사라면 2심 재판부인 B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고, A가 지방 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라면 B는 고등 법원이다. C는 대법원이다. ② 대법원은 대통령 선고 소송 재판권을 가진다.

바로 알기 ①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항소,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고이다. ④ 2심 재판을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 법원에서 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대법원은 상고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⑤ 헌법 소원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13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운영

ㄷ. 법률의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ㄹ.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바로 알기 ㄱ. 헌법재판소는 책임에 비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이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ㄴ.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담당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제청할 수 있다.

14 사법의 한계와 입법론적 해결

제시된 글은 사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론적 해결의 방법으로, (가)에는 시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 ①, ②, ④, ⑤ 모두 시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바로 알기 ③ 우리나라는 국민 발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다.

16 참정권의 성격

예시 답안 제시된 헌법 조항은 참정권과 관련된다.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채점 기준	
상	참정권이라고 쓰고, 참정권의 성격 두 가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참정권이라고 쓰고, 참정권의 성격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참정권이라고만 쓴 경우

17 위법성 조각 사유의 종류

예시 답안 제시된 글에 나타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정당 행위이다. 정당 행위란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

채점 기준	
상	정당 행위라고 쓰고, 정당 행위의 의미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정당 행위라고만 쓴 경우

18 탄핵 심판 절차

예시 답안 (가)에 들어갈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탄핵 심판이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해당 공무원의 탄핵을 발의·의결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 해당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채점 기준	
상	탄핵 심판이라고 쓰고, 그 절차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탄핵 심판이라고만 쓴 경우

Ⅲ 사회생활과 법

01 근로자의 권리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12쪽

01 사회법 **02** (1) ○ (2) ○ (3) × **03** (1) – ㉠ (2) – ㉢ (3) – ㉡
04 (1) 무효 (2) 부당 노동 행위 (3) 고용 노동부 **05** (1) 본인 (2) 7시간
06 ⑤ **07** ② **08** ③ **09** ③

02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3)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06 노동법의 의미

⑤ 노동법은 사회법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다.

07 「근로 기준법」상 근로 시간

②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성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8과 40의 합인 48이다.

08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③ 「근로 기준법」상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보다 낮은 근로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

바로 알기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통화(通貨)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사용자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의 경우에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⑤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계약 사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09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

①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소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 주휴 수당, 휴일,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다. ④, ⑤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③ 연소 근로자의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13~116쪽

01 ② **02** ① **03** ① **04** ② **05** ③ **06** ④ **07** ②
08 ① **09** 쟁의 행위 **10** ② **11** ⑤ **12** ② **13** ⑤
14 ④ **15** ⑤ **16** ④ **17** ⑤

01 사회법의 특징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가)는 사회법이다. ㄱ, ㄷ. 사회법은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하여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등장한 법으로, 사법의 영역에 공법적 규제가 더해진 법의 영역이다.

바로 알기 ㄴ. 사회법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이 있다. 민법은 사법, 행정법은 공법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ㄹ. 사회법은 자유방임주의의 확산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하였다.

✦ 이건 꼭 암기! **사회법의 등장 배경**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자유방임주의의 확산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 확대 → **사회법 등장**

02 노동법의 등장 배경

밑줄 친 '이 법'은 「도제의 건강 및 풍기에 관한 법률」이다. ① 「도제의 건강 및 풍기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점차 확대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노동법으로 발전하였다.

✦ 이건 꼭 암기! **노동법의 등장 배경**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여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음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커짐 → **노동법 등장**

03 노동법의 특징

(가)는 「근로 기준법」, (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모두 노동법에 해당한다. ㄱ, ㄴ. 노동법은 사회법의 한 종류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하였다.

바로 알기 ㄷ.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자, 국가가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기 위해 노동법이 등장하였다. ㄹ. 노동법은 근로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 이건 꼭 암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법**
「근로 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최저 임금법」→ **노동법**

04 「최저 임금법」의 목적

제시된 조항은 「최저 임금법」에 해당한다. ②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알기 ① 국가는 「최저 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 임금 수준을 준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임금 협상의 자율성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③, ④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최저 임금법」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거나 임금의 과도한 상승이 억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법으로, 모든 근로자의 소득 균등화를 도모한다고 보기 어렵다.

✦ 미건 꼭 암기! 「최저 임금법」의 목적

최저 임금 보장 +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 +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 **「최저 임금법」의 목적**

05 개인으로서 근로자의 권리

③ 갑과 을이 합의하면 을은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②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시된 근로 계약서에 따르면 을은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1주에 5일을 일하며, 근무 시간 도중인 12시~13시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지게 되므로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④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계약 사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다. 갑, 을이 체결한 근로 계약서상에서 임금이 최저 임금 미만이므로, 임금에 대한 부분만 무효가 된다. ⑤ 「최저 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갑, 을이 합의했더라도 을은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 미건 꼭 암기! 「근로 기준법」상 근로 조건

-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 → **임금**
-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이내 + 1주 40시간 이내 → **근로 시간**
-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휴게 시간**
-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해 적정한 보상 지급 → **재해 보상**

06 근로자의 권리 침해

④ (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가)의 경비원은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

바로 알기 ① (가)에는 근로 계약의 서면 작성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가)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례가 아니라, 휴게 시간 보장 및 임금 지급 문제가 나타난 사례이다. ③ (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의 초과 여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07 개인으로서 근로자의 권리

자료 분석

근로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해.

A사는 근로자 갑(35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 조건을 구두로만 설명하였으며, ㉠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A사는 갑에게 ㉡ 매달 20일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매 근무일마다 8시간씩 근무하고 ㉢ 근로 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후 갑은 업무 중 기계 오작동으로 부상을 입었으나, A사는 치료비를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며 ㉣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다. 얼마 뒤 A사는 갑에게 ㉤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라며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

㉡ 「근로 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A사는 갑에게 매달 20일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법령을 준수하였다.

바로 알기 ㉠ 「근로 기준법」상 근로 계약은 근로 조건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 해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08 단체로서 근로자의 권리

A는 단결권, B는 단체 교섭권, C는 단체 행동권이다.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이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단체 행동권은 단체 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체 교섭 결렬 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미건 꼭 암기! 근로 3권

-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 노동조합에 가입 및 활동할 권리 → **단결권**
-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 교섭권**
- 단체 교섭 결렬 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단체 행동권**

09 단체 행동권과 쟁의 행위

단체 행동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근로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파업, 형식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 능률을 낮추는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10 단체로서 근로자의 권리

ㄱ.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과 관련이 깊다. ㄷ.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조건에 관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바로 알기 ㄴ. 근로 조건에 대한 협의는 단체 교섭권과 관련이 깊다. ㄹ. 파업은 쟁의 행위로,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11 개인으로서 근로자의 권리와 부당 노동 행위

자료 분석

▶ 지식 Q&A

근무 시간이 8시간일 때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해.

안녕하세요. 저는 20세로, 최근 △△ 물류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회사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별도의 휴게 시간은 없으니 틈틈이 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은 현금 대신 회사 창고에 남아 있는 물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근로 계약서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맺은 근로 계약에 대해 법적으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하기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해.

(가)

⑤ 글을 작성한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 금지를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조언이 적절하다.

바로 알기 ① 근로 계약서에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된다. ② 임금은 물품이 아닌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③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합의했더라도 「근로 기준법」상 근로 기준보다 낮은 조건이나 위법한 사항은 무효가 된다. ④ 휴게 시간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근로 기준법」 위반이다.

✦ 이건 꼭 암기!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방법**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12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절차

ㄱ.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단체 행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ㄹ.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면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ㄴ.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지방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해야 한다.

13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자료 분석

핵심 갑은 업무를 위해 외출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어.

- 갑은 회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잠시 외출하였다. 그러나 회사 인사 담당자는 근무 시간 중에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근로 기준법」에 정해진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해.
- 노동조합의 간부인 을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가 결렬되자 적법하게 파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을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 을의 단체 행동권을 침해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해.

①, ②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③ 을은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단체 행동권을 침해당하였다. ④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⑤ 갑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부당 해고, 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 3권을 침해당하는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 이건 꼭 암기!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 제기 → **부당 해고의 구제**

14 임금 체불

정해진 때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의 사례이므로, (가)에 들어갈 용어는 임금 체불이다. ④ 고용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함으로써 임금 체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②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이다. ③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법에 정해진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⑤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이다.

✦ 이건 꼭 암기! **임금 체불의 구제 방법**

고용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제기,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 **임금 체불의 구제**

15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

을.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지만,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 가능하다.

병. 연소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그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 연소 근로자의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바로 알기 갑.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 미건 꼭 암기!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

- 법정 대리인의 동의 +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 → **근로 계약**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 불가 → **근로 제한 업종**
- 독자적 임금 청구 가능 + 주휴 수당, 최저 임금 보장 → **임금**
-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이내 + 1주 35시간 이내 → **근로 시간**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 → **야간·휴일 근로**

16 연소 근로자의 근로 조건

④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 계약 종료 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

바로 알기 ① 근로 시간 도중 30분의 휴게 시간이 있으므로 1일 근로 시간은 7시간이다. ②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8시간일 때 1시간을 주어야 한다. 갑은 을에게 30분의 휴게 시간을 주었으므로 ㉡은 적법하다. ③ 연소 근로자도 최저 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은 위법하다. ⑤ 미성년자도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은 위법하다.

17 연소 근로자의 권리 침해 사례

17세인 갑, 을은 모두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이다. ⑤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그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최저 임금을 보장받았으므로 「근로 기준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 ②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 기준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 ③ 근로 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 기준법」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 ④ 연소 근로자도 사용자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17쪽

01 주제: 노동법의 등장 배경

예시 답안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커지며 노동법이 등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계약 자유의 원칙을 언급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고자 노동법이 등장하였음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고자 노동법이 등장하였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이 등장하였다고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연소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예시 답안 청소년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고,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연소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채점 기준	
상	연소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연소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근로 기준법」상 해고의 조건

(1) 답 「근로 기준법」

(2) 예시 답안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한다.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근로 기준법」상 해고의 조건을 〈핵심 어구〉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근로 기준법」상 해고의 조건을 〈핵심 어구〉를 두 가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근로 기준법」상 해고의 조건을 〈핵심 어구〉를 한 가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04 주제: 부당 노동 행위와 구제 방법

(1) 답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2) 예시 답안 (가)에 들어갈 용어는 부당 노동 행위이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부당 노동 행위를 쓰고 그 구제 방법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부당 노동 행위라고만 쓴 경우

05 주제: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

(1) 예시 답안 연소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이는 「근로 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채점 기준	
상	18세 미만의 사람임과 「근로 기준법」의 명칭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2) 예시 답안 성인 근로자와 달리 연소 근로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성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성인 근로자와 달리 연소 근로자의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채점 기준	
상	성인과 다른 연소 근로자의 보호 규정을 〈조건〉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적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성인과 다른 연소 근로자의 보호 규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만 서술한 경우
하	성인과 비교 없이 연소 근로자의 보호 규정만을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18~119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③

01 사회법의 등장 배경과 종류

자료 분석

핵심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해.

법은 전통적으로 국가나 공공 단체 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공법(公法),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법(私法)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후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3의 법 영역인 ㉡ 이 법이 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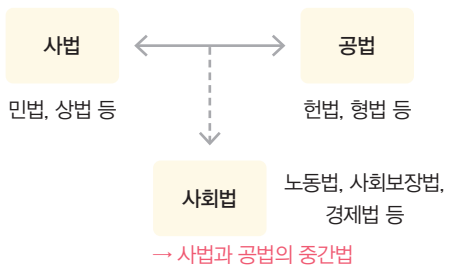
근로자와 자본가의 대립, 빈부 격차 심화,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 등이 있어.

사회법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법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법이다. ㄹ. 사회법은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 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경제법,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알기 ㄱ.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자유방임주의가 확산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등장하였다. ㄴ.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문제에는 근로자와 자본가의 대립, 빈부 격차 심화,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 등이 있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법의 영역



02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자료 분석

핵심 「근로 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연소자로 규정하고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18세인 B는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 계약서〉

사용자 A와 근로자 B(18세)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 근무 장소: △△ 편의점
3. 업무 내용: 매장 청소 및 물건 판매
4. 근로 시간/근무일: ㉠ 9시~18시(휴게 시간: 13시~14시)/매주 월~금(주휴일:토요일)
5. 임금: ㉡ 시급 9,500원(1월), 10,000원(2월)/㉢ B의 통장으로 2월 29일에 1회 입금

2024년 법정 최저 임금 미만이야.

* 2024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해야 해.

「근로 기준법」상 성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휴게 시간도 근로 시간 도중에 1시간이 주어졌어.

B는 18세로 성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 즉, ㉠은 적법하고 (○) ㉡과 ㉢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밑줄 친 ㉠~㉢의 적법성 여부를 모두 옳게 판단한 학생은 병이다.

바로 알기 ㉡ 2024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갑의 1월 근로에 대한 시급은 9,500원으로, 법정 최저 임금 미만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적법하지 않다.

03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자료 분석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근로자가 해야 해.

A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버스를 운전하는 갑은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 위반 등 운행 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다.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 노동 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어.

ㄴ. 중앙 노동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한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이다. ㄹ. 갑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민사 소송에 해당하는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부당 해고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근로자만 가능하며, 노동조합은 불가능하다. ㄷ. 해고 처분이 근로 3권을 침해하면 부당 노동 행위가 되지만, 사례에는 근로 3권 침해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앙 노동 위원회가 갑의 근로 3권 침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04 성인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의 권리

자료 분석

핵심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고, 취직 인허증 발급 대상은 15세 미만이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구비해야 하는 대상은 18세 미만이야.

고등학생 갑과 을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로, 겨울 방학 2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20명이 고용된 ○○ 공장에서 매 근무일(수요일~일요일, 주 5일) 8시~16시까지(휴게 시간 11:30~12:30) 물품 검수 및 포장 업무를 하고 법정 최저 임금보다 높은 시간당 13,000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사장 병과 체결하였다.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당시 갑과 을은 고용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 발급 대상은 아니었고, 병은 갑과 달리 을에 대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의무가 있었다. 2개월 후 갑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1년 후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병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갑은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해고라는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갑의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

근로 계약 당시 18세 갑은 성인 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을은 연소 근로자였다. ③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인용하였으므로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으므로, 해고가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바로 알기 ① 갑은 성인 근로자이므로, 병은 연소 근로자인 을에 대해서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의무가 있다. ② 병은 갑과 합의가 있으면 갑의 근로 시간을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소 근로자 을과는 합의가 있어도 을의 근로 시간을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별도로 갑은 병을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 즉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일요일은 갑과 을의 근무일이므로 「근로 기준법」상 휴일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과 을이 근로 계약 내용대로 근무한다면 갑과 을의 일요일 근무에 대해 병이 지급해야 할 1일 임금은 각각 91,000원이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

연장 근로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 근로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

02 사회보장과 경제생활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24쪽

01 (1) 사회보장법 (2) 헌법 **02** (1)–㉢ (2)–㉡ (3)–㉠
03 공정 거래 위원회 **04** (1) ○ (2) × (3) ○
05 ㄱ, ㄷ **06** ① **07** ④ **08** ③

04 소비자의 권리 침해 시 구제 방법

(2) 권리를 침해당한 소비자는 노동 위원회가 아니라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05 사회보장법의 등장 배경과 의의

ㄱ, ㄷ. 사회보장법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체계를 포괄한다.

바로 알기 ㄴ. 사회보장법은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6 사회 보험의 종류

① 사회 보험과 관련한 법률에는 「국민연금법」, 「국민 건강 보험법」, 「고용 보험법」,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등이 있다.

바로 알기 ②, ④ 「기초 연금법」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공공 부조와 관련이 있다. ③, ⑤ 「노인 복지법」과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07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①, ②, ③, 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부당한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알기 ④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행위는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08 「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③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합리적인 소비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25~127쪽

01 ④ 02 엘리자베스 구빈법 03 ⑤ 04 ④ 05 ④
06 ① 07 ② 08 ⑤ 09 ③ 10 ⑤ 11 ⑤ 12 ②
13 ④

01 사회보장법

㉣ 헌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의 법적 근거가 된다.

바로 알기 ㉠, ㉡ 사회보장법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등장하였다. ㉢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에 관한 모든 법체계를 포괄한다. ㉤ 형법은 사회보장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02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영국에서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 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초기 사회보장 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03 사회보장의 역사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한 헌법인 A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법률인 B는 미국의 사회보장법, 궁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보험을 주장한 문서인 C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A)은 1919년, 미국의 사회보장법(B)은 1935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C)는 1942년에 등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제시한 것은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② 독일에서 복지 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다. ③ 대공황 이후 미국의 실업,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은 사회보장법이다. ④ 사회보장법과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두 정부의 사회 복지 책임을 강화하였다.

✦ 이건 꼭 암기!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 과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1919) →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 →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2) → **현대 복지 제도의 확립**

0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

(가) 헌법과 (나) 「사회보장 기본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ㄱ. 헌법에서는 사회보장이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증진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ㄴ.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등을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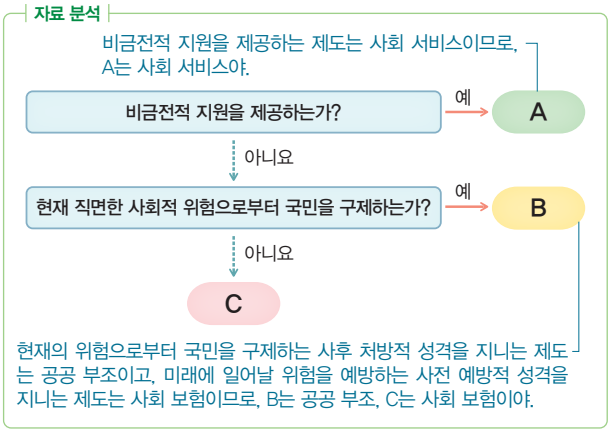
바로 알기 ㄷ. 「사회보장 기본법」은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으며, 헌법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의 이념과 목적을 구체화하고 있다.

✦ 이건 꼭 암기!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법적 근거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 복지 증진 노력 규정 → **헌법**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규정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보호 + 국민 생활의 질 향상 보장 → 「**사회보장 기본법**」

05 사회보장 제도의 이해

자료 분석



A는 사회 서비스,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보험이다. ㄴ, ㄹ.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며, 공공 부조는 사회 보험과 달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알기 ㄱ. 사회 서비스는 민간 단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ㄷ. 국민연금은 사회 보험, 기초 연금은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 이건 꼭 암기!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 +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 → **사회 보험**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자립 지원 + 금전적으로 생계를 부조 → **공공 부조**
-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 비금전적 지원 제공 → **사회 서비스**

06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실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가)는 「고용 보험법」,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연금 급여 실시를 규정한 (나)는 「국민연금법」, 소득이 낮은 노인에 대한 기초 연금 실시를 규정한 (다)는 「기초 연금법」이다.

바로 알기 ③, ④, ⑤ 「국민 건강 보험법」은 질병, 부상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보험 급여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07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갑은 선별적 복지, 을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ㄱ. 선별적 복지는 낙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ㄹ.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공평성 증진에 유리하다.

바로 알기 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이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ㄷ.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에 비해 복지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크다.

✦ 미건 꼭 암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혜택 제공 → 공평성을 증진함 + 재정 부담이 큼 → **보편적 복지**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상만 선별적 지원 → 실질적 효과가 큼 + 낙인 문제 발생 → **선별적 복지**

08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부당한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명시하고, 이를 규제한다. 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ㄷ. 합병 등을 통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에 해당한다. ㄹ.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 판매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 미건 꼭 암기!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유형**

-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 판매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퇴 방해 등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 합병 등을 통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행위 →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 기업 간 담합 등의 방법으로 가격이나 품질의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 행위**
- 부당한 거래 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 사업자 배제 + 경쟁 사업자의 부당한 고객 유인 + 거래 강제 등 → **불공정 거래 행위**

09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기업이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 휴대 전화 제조업체들에게 거래 과정에서 특정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 기관인 A 기관은 공정 거래 위원회이다. 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 판매량 등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이다. ㄷ. 공정 거래 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로 알기 ㄱ. □□ 기업의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다. 부당한 거래 거절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ㄹ. 공정 거래 위원회는 사법 기관이 아니며, 형벌을 직접 부과할 수 없다.

10 청약 철회 제도

자료 분석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한 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 책임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5,000원짜리 무선 이어폰 보관함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을 받아 확인해 보니, 제가 원하던 디자인과 달라 상품 수령 후 6일이 지난 시점에 반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 사업자는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의 경우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밝혀야 하며, 반품 상품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업체에 도착해야 하므로, 반품과 환불 모두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갑은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사례에서는 상품 수령 후 6일 만에 반품을 신청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청약 철회 기간을 충족한다.

바로 알기 ①, ②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구매한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④ 판매 사업자가 정한 기한보다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한이 우선한다.

11 「제조물 책임법」과 제조물 책임 제도

밑줄 친 '이 법'은 「제조물 책임법」이다. ㄷ, ㄹ.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조사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거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바로 알기 ㄱ.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전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는 리콜 제도이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조물 책임 제도이며, 이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사후적 구제 제도이다. ㄴ.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 유무를 증명할 책임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에 있다.

✦ 미건 꼭 암기! **제조물 책임 제도와 리콜 제도**

- 제조물의 결함 + 소비자의 피해 발생 + 결함이 발생한 특정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기업의 손해 배상 → **제조물 책임 제도**
- 물품이나 용역의 결함 + 소비자의 신체·생명·재산에 위해 또는 그러할 우려 + 결함 제품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 **리콜 제도**

12 소비자의 권리 침해 시 구제 방법

ㄱ. A 예식장에서는 소비자의 필요와 관계없이 머리 손질 및 화장, 예복, 사진 촬영 등 여러 서비스를 묶음 상품으로만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ㄹ.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알기 ㄴ.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ㄷ. 부당한 공동 행위는 기업 간 담합 등의 방법으로 가격이나 품질의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시된 사례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공동 행위로 볼 수 없다.

✦ 이건 꼭 암기! **소비자의 권리 침해 시 구제 방법**

- 사업자에게 보상 요구 + 피해 보상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자율적 합의 → **당사자 간 합의**
- 소비자 상담 + 피해 구제 신청 + 사업자 통보 및 사실 조사 + 합의 권고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 **한국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내용에 불만족 시 → **민사 소송 제기**

13 소비자의 권리 침해 시 구제 방법

갑은 방문 판매로 구매한 화장품에 대해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약 철회 시 소비자는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 책임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④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의 경우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 책임 없이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②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불가라는 약관 조항 자체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이미 해당 약관 조항에 동의했어도 판매업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시된 사례에서는 물품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구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구매한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보장된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28쪽

01 주제: 사회보장법의 등장 배경

예시 답안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면서 많은 국민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사회보장법이 등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사회적 위험이 나타난 배경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사회보장법의 등장 배경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만 포함하여 사회보장법의 등장 배경을 서술한 경우

02 주제: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

예시 답안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의 건전한 기능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 반면, 공정한 경쟁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더 나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이므로,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채점 기준	
상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문제점과 공정한 경쟁의 장점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공정한 경쟁의 장점을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공정한 경쟁의 장점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

(1) 답 「사회보장 기본법」

(2) 예시 답안 ㉠ 사회 보험의 비용은 가입자와 사용자,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 공공 부조의 경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세금을 재원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 사회 서비스의 비용은 수혜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담한다.

채점 기준	
상	핵심 어구를 모두 사용하여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비용 부담 방식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핵심 어구를 두 가지만 사용하여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비용 부담 방식을 서술한 경우
하	핵심 어구를 한 가지만 사용하여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의 비용 부담 방식을 서술한 경우

04 주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1) 답 (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나) 부당한 공동 행위, (다) 불공정 거래 행위

(2) 예시 답안 (라)에 들어갈 법률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채점 기준	
상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쓰고, 그 제정 목적을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쓰고, 그 제정 목적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만 쓴 경우

05 주제: 소비자의 권리 침해 시 구제 방법

예시 답안 권리를 침해당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여 사업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 만약 한국 소비자원을 통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때 조정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방법을 세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방법을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방법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29쪽

01 ⑤ 02 ④

01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

자료 분석

기초 연금 제도는 「기초 연금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야.

(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서는 노인 돌봄 및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가)는 기초 연금 제도로 공공 부조에 해당하며, (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은 모두 「사회보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바로 알기 ① 공공 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즉, 공공 부조는 모든 국민의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② 기초 연금 제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 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③ 사회 보험은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닌다. 사후 처방적 성격을 지니는 제도는 공공 부조이다. ④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은 모두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상담, 재활, 돌봄 등의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는 사회 서비스이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기초 연금 제도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구분	기초 연금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유형	공공 부조	사회 보험
관련 법률	「기초 연금법」: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노인 돌봄 및 요양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
목적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02 공정 거래 위원회의 역할

자료 분석

핵심 공정 거래 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 기관이야.

사업자 단체가 가격을 공동으로 정해 경쟁을 제한한 사례야.

(가) ○○스키장 주변에서 장비와 의류를 대여하는 사업자 단체가 대여료의 최저 가격을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며 준수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를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판단하여 시정 명령을 부과하였다.

(나)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 가구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가구 제조·판매 업체가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 거래 위원회는 담합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가격 경쟁을 회피한 사례야.

ㄱ. (가)는 사업자 단체가 공동으로 최저 가격 수준을 정하고 이를 강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례이다. ㄴ. (나)는 가구 구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하여 가격 경쟁을 회피한 부당한 공동 행위의 사례이다. ㄹ. (가), (나)에는 공정 거래 위원회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보장을 위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주체에 대해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바로 알기 ㄷ. (가), (나)에는 모두 기업 간 합병이 나타나지 않았다. 합병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행위는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에 해당한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공정 거래 위원회의 역할

공정한 경쟁 촉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불공정 약관, 허위·과장 광고를 시정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중소기업 경쟁 기반 확보	대형 업체들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여 중소기업의 발전 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대기업 집단 간 상호 출자 및 채무 보증 금지, 부당 내부 거래 억제

03 현대 생활과 법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34쪽

01 (1) 지능정보화 (2) 익명성 **02** (1) ○ (2) × (3) ○
03 (1) ㄱ (2) ㄷ (3) ㄴ **04** (1) 특허권 (2) 만료 (3) 공유
05 ③ **06** ② **07** ③ **08** ⑤

02 지능정보화에 따라 발생한 법률문제

(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방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05 지능정보사회와 현대적 법률관계

③ 지능정보화에 따라 현대 사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법률관계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문제가 등장한다.

바로 알기 ①, ②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화를 기반으로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발전하는 사회이다. ④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이 감소하여 국가의 경제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플랫폼 노동의 보호 문제 등이 발생한다. 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 행위 발생 시 가해자를 파악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워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06 플랫폼 노동의 보호

①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로, 업무나 서비스가 임시적·단기적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③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가 연결되는 노동 형태이다. ④ 플랫폼 노동에서는 기업이 플랫폼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근로자를 연결하고, 업무 선택권은 근로자가 가지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⑤ 플랫폼 노동에 관한 법률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바로 알기 ② 「근로 기준법」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07 저작권과 「저작권법」

③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등 창작적 표현물에 대한 권리로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는 저작권으로,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는다.

08 신지적 재산권

⑤ 신지적 재산권은 과학기술의 발달 및 문화의 산업화 등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로, 저작권이나 산업 재산권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지적 재산권 외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35~137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② **06** ② **07** ③
08 상표권 **09** ④ **10** ① **11** ① **12** ④ **13** ⑤

01 지능정보화에 따른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

ㄴ. 지능정보화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발전하는 지능정보사회가 등장하였다.
ㄹ. 지능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법률관계가 나타나고, 인터넷 익명성으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졌다.

바로 알기 ㄱ.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가해자를 파악하고 특정하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ㄷ.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계 및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건 꼭 암기! **지능정보화와 지능정보사회**
- 정보와 이를 처리하는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비중이 심화하는 현상 → **지능정보화**
- 지능정보화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발전하는 사회 → **지능정보사회**

02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감독 책임

③ 불법 복제나 불법 유통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으로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② 이용 약관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으로 보기 어렵다. ④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이용자를 사전에 예측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관리·감독 조치라고 볼 수 없다. ⑤ 별도의 관리 체계 없이 이용 약관에 책임 제한 규정만 두는 것은 적절한 관리·감독 조치로 보기 어렵다.

✦ 이건 꼭 암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둘러싼 법률문제와 해결 노력**
-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불법 행위 발생 +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간 법적 분쟁 발생 → **법률문제의 양상**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 플랫폼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방조의 책임 부과 +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유도 → **해결 노력**

0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④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바로 알기 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자신이 관리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심판하고 판결할 의무는 없다. ②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플랫폼에 게시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사전 검열의 의무는 없다. ③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방조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자기 책임의 원칙은 자기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을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방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04 플랫폼 노동관계

A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를 탐색·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주체이므로 플랫폼에 해당한다. B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 제공자이며, C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수요자이다.

05 플랫폼 노동의 의미와 특징

자료 분석

핵심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으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로, 종사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 종속되지 않고, 업무 수행 장소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질문 \ 학생	갑	을	병	정	무
업무나 서비스가 임시적·단기적인 경우가 많은가? — ○	○	○	×	×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하는가? — ×	○	×	○	×	×
업무 수행 시간과 장소가 노동 제공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고정되는가? — ×	○	×	×	○	×

(○: 예, ×: 아니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고,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이므로,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을이야.

배달 대행, 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고용 형태는 플랫폼 노동이므로, 밑줄 친 ㉠은 플랫폼 노동이다. 플랫폼 노동은 일반적으로 업무나 서비스가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경우가 많고, 근무 장소 및 시간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제시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을이다.

✦ 미리 꼭 암기! 플랫폼 노동의 특징

업무나 서비스가 임시적·단기적인 경우가 많음 + 근무 장소·시간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움 + 종사자가 사용자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함 → **플랫폼 노동**

06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법률문제

② 자료를 통해 플랫폼 노동에서는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고용 책임 주체가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플랫폼 노동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노동을 매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모든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에서와 같이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④ 플랫폼 노동은 일반적으로 자율성이 큰 경우가 많지만, 자료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업무 내용과 근무 방식 등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A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 ⑤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범위를 재정립하거나 별도의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 미리 꼭 암기!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법률문제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고용의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 + 「근로 기준법」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법률문제의 양상**

07 지적 재산의 특징

(가)는 지적 재산이다. ㄴ, ㄷ. 지적 재산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바로 알기 ㄱ. 지적 재산은 쉽게 모방 또는 도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를 지적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그 이용을 규율하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ㄹ. 산업 활동에서 만들어진 지적 창작물도 지적 재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권리를 산업 재산권이라고 한다. 산업 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 미리 꼭 암기! 지적 재산의 특징과 보호의 필요성

-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움 +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음 → **지적 재산의 특징**
- 지적 창작물은 쉽게 모방 또는 도용될 수 있으므로 창작자의 권리를 지적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그 이용을 규율하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함 → **지적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08 상표권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로고 등을 상표라고 하며, 이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한다. 상표권과 관련한 법률에는 「상표법」이 있다.

✦ 미리 꼭 암기! 산업 재산권의 종류

- 발명물 등의 창작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 → **특허권**
- 산업상 이용 가능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 → **실용신안권**
- 제품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법적 권리 → **디자인권**
-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로고 등 상표에 관한 독점적 권리 → **상표권**

09 산업 재산권의 종류와 관련 법률

(가)는 디자인권으로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나)는 특허권으로 「특허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다)는 실용신안권으로 「실용신안법」의 보호를 받는다.

바로 알기 ①, ②, ⑤ 「상표법」은 상표권을 보호하는 법이며, 상표권은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에 관한 독점적 권리이다.

10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

(가)는 드라마, 영화 등 타인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례이며, (나)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한 상표권 침해 사례이다. ① 저작권은 문학·음악·영상 등 창작적 표현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바로 알기 ②, ③ 타인의 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특허권 침해이며, 디자인권 침해의 사례로는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④ 산업상 이용 가능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실용신안권 침해이다. ⑤ (가)는 저작권 침해 사례이고 (나)는 상표권 침해 사례이므로, (나)만 산업 재산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 이건 꼭 암기! **지적 재산권의 종류**

-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등 창작적 표현물에 대한 권리 → **저작권**
- 산업 활동에서 만들어진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 → **산업 재산권**
- 과학기술의 발달 및 문화의 산업화 등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 → **신지적 재산권**

11 지적 재산권 보호 기간을 규정한 이유

①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창작자의 지적 창작물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바로 알기 ② 저작권 보호는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창작의 연구와 생산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보호 기간 설정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③ 저작권 보호의 목적은 국가의 관리·통제가 아니라 창작자 권리 보호와 공공의 이용 간 균형에 있으므로, 국가가 문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저작물을 관리·통제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④ 저작 재산권은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보호되며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공유 상태로 전환된다. 따라서 창작자에게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 기간을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문제는 보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보호 기간을 규정한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 이건 꼭 암기! **지적 재산권 보호의 효과**

-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장려함 +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 → **긍정적 효과**
- 기술과 정보의 공유를 제한함 + 후속 연구와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부정적 효과**

12 저작 재산권의 보호 기간에 대한 논쟁

제시된 대화에서 갑은 저작 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을은 보호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ㄱ. 저작물을 저작자의 노동 결과로 보고 그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작 재산권 보호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갑의 입장에 부합한다. ㄷ. 보호 기간이 종료된 저작물을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저작물의 사회적 공유를 강조하며 보호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을의 입장에 부합한다. ㄹ.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을 응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개발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된다는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을의 입장에 부합한다.

바로 알기 ㄴ. 저작자의 개인적 권리보다 공공의 자유로운 이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호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갑의 입장과는 상반되므로 갑이 지지할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13 지적 재산권 보호의 한계

⑤ 제시된 글에는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지적 재산권 관련 법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지적 재산권의 보호 기간에 대한 논쟁은 저작권 보호 기간의 적절성을 둘러싼 문제이며, 제시된 글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② 지적 재산권 침해의 발견 및 입증의 어려움은 지적 재산권의 한계 중 하나이지만, 제시된 글의 주제로 보기 어렵다. ③, ④ 창작자의 창작 활동이 촉진되는 것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지적 재산권 보호의 효과에 해당하며, 제시된 글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38쪽

01 주제: 지능정보화에 따른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

예시 답안 지능정보화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법률관계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문제가 등장한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 침해, 명예 훼손 등의 문제 발생 시 가해자를 파악하거나 특정하기가 어려워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채점 기준	
상	지능정보화에 따른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을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지능정보화에 따른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저작권의 특징

예시 답안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을 등록하면 해당 권리에 대한 법적 추정력과 대항력 등이 부여되어 각종 분쟁에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입증 책임이 완화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저작권의 특징을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저작권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법률문제의 해결 방안

(1) 답 (가) 플랫폼 노동, (나) 근로자

(2) 예시 답안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의 정의를 재정립하거나,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정의하되 사회 보험 등 보호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있다.

채점 기준	
상	핵심 어구를 모두 사용하여 플랫폼 노동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결 방안을 세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핵심 어구를 사용하여 플랫폼 노동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결 방안을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핵심 어구를 사용하여 플랫폼 노동에 관한 법률문제의 해결 방안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4 주제: 지적 재산권의 종류

(1) 답 A: 지적 재산권, B: 산업 재산권, C: 신지적 재산권

(2) 예시 답안 산업 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특허권은 발명물 등의 창작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이며,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법적 권리이고, 상표권은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로고 등 상표에 관한 독점적 권리이다.

채점 기준	
상	산업 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 네 가지의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산업 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 중 두세 가지의 의미만 서술한 경우
하	산업 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 중 한 가지의 의미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지적 재산권 보호 기간의 규정

예시 답안 사례에서 갑의 음악 작품에 대한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 다양한 2차 창작물이 만들어지면서 음악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지적 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규정하는 이유가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호 기간이 만료되자 사람들이 갑의 작품을 자유롭게 활용하였는데, 이는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독점 상태에서 공유 상태로 전환됨을 보여 준다.

채점 기준	
상	사례를 근거로 보호 기간의 한정 이유와 만료 효과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보호 기간의 한정 이유와 만료 효과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39쪽

01 ⑤ 02 ⑤

01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법률문제

자료 분석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최저 임금제와 같은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문제가 되기도 해.

영상 편집 플랫폼에서 일하는 A 씨는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의뢰한 영상을 편집하여 제공하지만, 작업에 소요된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작업비 10만 원만 받는다. A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A 씨와 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노동 환경과 사회적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일부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불안정한 수입을 얻고 있으며, 산업 재해나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제도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도 한다.

핵심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벗어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방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정의하되 사회 보험 등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어.

ㄷ. A 씨와 같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고, 최저 임금이나 「근로 기준법」상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ㄹ.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으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로, 이 과정에서 기업은 플랫폼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근로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알기 ㄱ. 「근로 기준법」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노동 시간 및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종사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ㄴ.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근로 기준법」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항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문제

내용	「근로 기준법」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됨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함
종속적 관계의 판단 기준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가 정한 취업 규칙과 복무·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 등

02 지적 재산권 보호의 한계

자료 분석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고 있어서 인공지능이나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고 있어.

- 교사: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AI)이 만든 음악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 보세요.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 ○○은 음악 이론을 학습해 다양한 장르의 곡을 만들어 왔으며 실제 대중음악 제작 과정에도 활용되었다. 한때 ○○가 만든 음악 일부는 저작권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저작권료가 지급되었으나, 이후 해당 곡들이 인공지능이 작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되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은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학생: 자료를 통해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은 (가) 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지적 재산에 관한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알기 ①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과 같은 기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산업 재산권이다. 음악과 같은 창작적 표현물은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나타나기도 한다. ② 저작권은 모든 창작물에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의 저작권이 모두 인정되고 보호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이는 저작물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창작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저작권 등록을 하면 권리에 대한 법적 추정력과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등록 자체가 어렵다.

Ⅲ단원 실력 굳히기 142~145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④	05 ②	06 ③	07 ②
08 ①	09 ②	10 ③	11 ④	12 ④	13 ①	14 ③

15 해설 참조 16 18

17 거래 조건 등을 선택할 권리, 알 권리 18 해설 참조

01 「근로 기준법」의 특징

A는 「근로 기준법」이다. ① 「근로 기준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법 중 하나이다. ②, ④ 「근로 기준법」은 근로자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개선하고,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한다. ③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 계약은 서면 작성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알기 ⑤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계약 사항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 계약 전체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02 근로 3권의 이해

자료 분석

핵심 부당 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해당 질문에는 A, B, C 모두 '예'라고 답변할 수 있어.

질문	A	B	C
해당 권리 침해 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가?	예	예	(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인가? 단결권	예	아니요	아니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인가? 단체 행동권	아니요	(나)	아니요

A~C는 근로 3권 중 하나이므로 (나)에는 '예'가 들어가야 해.

A는 단결권, B는 단체 행동권, C는 단체 교섭권이다. ② 단체 행동권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로 알기 ① 단결권은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이다. 사용자나 자영업자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을 할 수 없다. ③ 근로 3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B는 단체 교섭권이 아니라 단체 행동권이고, C는 단체 행동권이 아니라 단체 교섭권이다. ⑤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이므로, (가)에는 '예'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 행동권이므로, (나)에도 '예'가 들어가야 한다.

03 부당 해고 구제 절차

사례에서 갑은 ☆☆ 기업으로부터 회사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② 부당 해고를 당한 갑이 법원에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① 갑에 대한 해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갑은 ☆☆ 기업에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로, 제시된 사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은 각각 독립적인 구제 수단으로, 병행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 해고가 인정되었으므로, 갑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갑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04 연소 근로자의 권리

④ 17세인 을은 연소 근로자이다.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을은 1일 7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갑과 을이 합의하면 을은 1일 1시간씩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이다. 따라서 을이 계약대로 근무할 경우 을의 1일 임금은 10만 5천 원이다. ② 을의 휴일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이므로, 주말에 근무하는 것이 휴일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 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③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을은 갑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근로 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최저 임금은 임금의 최소 기준일 뿐이며, 근로 계약에서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 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갑은 최저 임금을 이유로 근로 계약에서 정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05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 법률

(가)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나)는 「국민연금법」, (다)는 「국민 건강 보험법」으로, 모두 사회보장법에 해당한다. ㄱ.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에 해당하며, 빈곤 등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ㄹ.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바로 알기 ㄴ. 「국민연금법」과 「국민 건강 보험법」이 규정하는 제도는 모두 사회 보험에 해당하며, 사회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ㄷ.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 건강 보험법」은 모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하는 사회법에 해당한다.

06 사회 서비스의 이해

자료는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ㄴ, ㄷ. 사회 서비스는 민간 부문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사회 보험이나 공공 부조와 달리 상담, 재활, 돌봄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바로 알기 ㄱ.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제도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연금 제도 등이 있다. ㄹ.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는 사회 보험이다.

07 공정 거래 위원회의 역할

A 기관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공정 거래 위원회이다. ② 담합 행위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며, 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바로 알기 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은 국회이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 기관이다. ③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이다. ④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를 실시하는 것은 한국 소비자원이다. ⑤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다.

08 소비자의 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접수 및 소비자 상담 진행 →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피해 구제 신청 → 사업자 통보 및 사실 조사 진행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합의 권고 → 합의 결렬 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분쟁 조정'의 단계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이때 소비자는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ㄴ. 소비자가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한국 소비자원은 사실 조사 등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ㄷ. 소비자와 사업자가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반드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소비자는 민사 소송에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9 소비자의 권리

② 「소비자 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통해 물품 등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바로 알기 ①, ③, ④, ⑤ 합리적인 소비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 시킬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는 모두 「소비자 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법 조항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는 아니다.

10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문제

① 세계화는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 상호 간 의존성이 커지는 현상이다. ② 지능정보화란 정보와 이를 처리하는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 비중이 심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④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빈부 격차, 인권 침해,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지능정보화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플랫폼 노동의 보호 문제, 지적 재산권 보호의 한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③ 저출생은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고, 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저출생·고령화는 인구 구조·산업 구조·사회적 관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의 경제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1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A 기업은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이다. ④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명예 훼손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명예 훼손,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②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플랫폼에 게시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사전 검열 의무는 없다. ③, ⑤ 전통적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능정보화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한 새로운 법률관계와 법률문제가 등장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방조의 책임이 인정되면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다.

12 저작권의 특징

A는 저작권이다. ㄴ, ㄹ. 저작권은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바로 알기 ㄱ.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산업 재산권에 속한다. ㄷ.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도메인 이름, 반도체 배치 설계, 유전자원 등에 대한 권리는 신지적 재산권의 사례이다.

13 산업 재산권의 특징

자료 분석

핵심 '고도한 발명'은 특허권, '실용적 아이디어'는 실용신안권, '외관 디자인'은 디자인권, '명칭'이나 '로고'는 상표권의 핵심 키워드야.

산업 재산권	내용
디자인권 - A	자동차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법적 권리
B - 상표권	자동차의 명칭이나 제작사의 로고에 관한 독점적 권리
C - 특허권	자동차의 엔진 제어 시스템에 적용된 고도한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
D ㄱ 실용신안권	자동차 의자의 높낮이 조절 장치에 관한 실용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

A는 디자인권, B는 상표권, C는 특허권, D는 실용신안권이다. ① 디자인권은 심미성을 갖춘 디자인을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바로 알기 ② 상표권은 「특허법」이 아니라 「상표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 특허권을 포함한 산업 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한다.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저작권이다. ④ 실용신안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한다. ⑤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은 모두 저작권이 아닌 산업 재산권에 해당한다.

14 인공지능 생성물과 저작권에 관한 논쟁

③ 갑은 인공지능 생성물도 독창성이 인정되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을은 창작의 주체가 인공지능인 생성물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생성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토론 주제임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갑과 을의 토론에서 핵심 쟁점은 인공지능 생성물의 독창성 여부가 아니라, 인공지능 생성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② 강한 인공지능이 독자적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토론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강한 인공지능의 생성물만을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토론의 쟁점이 아니다. ⑤ 약한 인공지능의 생성물을 모두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갑의 의견 중 일부이며, 토론 전체의 주제로 보기 어렵다.

15 부당 노동 행위의 의미와 사례

예시 답안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단체 행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부당 노동 행위의 의미를 쓰고, 그 사례를 두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부당 노동 행위의 의미를 쓰고, 그 사례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부당 노동 행위의 의미만을 서술한 경우

18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법률문제와 해결 노력

예시 답안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포함하고 근로자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방안,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정의하되 사회 보험 등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

채점 기준	
상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재편 노력의 내용을 세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재편 노력의 내용을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재편 노력의 내용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Ⅳ 학교생활과 법

01 청소년의 특징과 법적 지위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52쪽

01 (1) 청소년 (2) 의무 **02** (1) 헌법 (2) 「교육 기본법」
03 (1)–㉡ (2)–㉢ (3)–㉠ **04** (1) × (2) ○ (3) ○ (4) ×
05 촉법소년 **06** ③ **07** ② **08** ④ **09** ①

04 청소년의 보호와 제한

(1)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지만, 아직 성장 중에 있으므로 각종 법률 등에서 특별한 보호와 제한을 받는다.
(4) 형법은 14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한다.

06 「청소년 보호법」

③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이다.

07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의무

② 국가는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국회),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시행하며(정부), 법률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소할(법원) 의무를 지닌다.

바로 알기 ④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08 보호 처분

④ 갑은 12세로서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법상 형사 책임을 면제받으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②, ③ 구류, 벌금, 징역은 형법상 형벌에 해당한다. ⑤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09 청소년의 선거권

②, ③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④ 18세 이상인 사람은 교육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2019년까지는 선거권 연령이 19세였으나, 2020년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8세로 하향되었다.

바로 알기 ① 「공직 선거법」에서는 18세 이상에게만 공직 선거권을 부여하므로 16세인 청소년은 대통령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53~155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④ **05** ③ **06** ④ **07** ②
08 학교 **09** ④ **10** ② **11** ④ **12** ① **13** ② **14** ③

01 청소년과 학생의 의미

A는 청소년, B는 학생이다. ⑤ 청소년과 학생은 모두 법률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법률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청소년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② 청소년을 규정하는 연령 기준은 법률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③, ④ 학생은 학교 등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년과 청년을 아울러 이르며,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은 청소년이다.

✦ 미건 꼭 암기! 청소년과 학생의 의미
- 어린아이인 소년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년을 아우르는 말 +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 → **청소년**
- 학교 등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 **학생**

02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말로 대체로 10대를 가리키는 (가)는 청소년이다. ① 청소년은 권리 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②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장 중이고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③, ⑤ 청소년은 법적 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받고,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와 국가는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바로 알기 ④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납세, 국방, 근로, 환경 보전 등의 의무가 있지만,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미건 꼭 암기! 청소년의 법적 특징
- 신체적으로 성장 중 + 경험·판단 능력 부족 → 법적 책임을 제한·면제받음,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자와 국가의 보호를 받음
- 성인과 같이 납세, 국방, 근로, 환경 보전 등의 의무가 있음 →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 이행을 요구받지는 않음

03 법률별 청소년의 연령 기준

(가)에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들어갈 수 있다. (나)에는 같은 연령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②, ③, ④ 「아동 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지칭하며,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지칭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각 법률의 목적에 맞게 적용 대상 범위를 다르게 정하여 동일한 나이의 사람이라도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릴 수 있다.

✦ 이건 꼭 암기! 법률별 청소년의 연령 기준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함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함 → **「청소년 보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청소년'이라고 함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함 → **「아동 복지법」**

04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④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많은 나라에서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바로 알기 ①, ②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③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1989년 국제 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조약 내용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⑤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상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 이건 꼭 암기!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인권 조약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권리 보장 →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05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

자료 분석

핵심 '이 법'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보호법」임을 알 수 있어.

제1조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특정 행위를 제한하기도 해.

밑줄 친 '이 법'은 「청소년 보호법」이다. ③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해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것과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바로 알기 ①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인권과 자치 활동 등을 보장한다. ②, ⑤ 「교육 기본법」은 학교 규칙을 준수할 의무,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학내 질서 유지에 협조할 의무,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에서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이건 꼭 암기!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의 권리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 **헌법**
- 학생 인권 보장 + 학생 자치 활동 보장 → **「초·중등 교육법」**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 자유로운 의사 표시 보장 + 스스로 결정할 권리 보장 → **「청소년 기본법」**
-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구제 +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보장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활동에의 참여 보장 +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와 지원 보장 → **「청소년 활동 진흥법」**

06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자료 분석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은 법적 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받으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돼.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장 중에 있으며, 성인에 비해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에 대해 성인과 다른 수준에서 일정한 ㉠ 권리와 ㉡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도 성인과 같이 납세, 근로, 환경 보전 등의 의무가 있지만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받지는 않아.

ㄱ.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상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ㄴ. 청소년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상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ㄷ. 청소년은 「교육 기본법」상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바로 알기 ㄹ. 청소년은 「초·중등 교육법」상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상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 이건 꼭 암기!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의 의무

-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 → **「초·중등 교육법」**
-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할 의무 + 학교 규칙을 준수할 의무 +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 학내 질서 유지에 협조할 의무 → **「교육 기본법」**
- 자기 능력을 개발할 의무 +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의무 + 가정·사회·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무 → **「청소년 기본법」**

07 청소년증

ㄱ, ㄷ. 청소년증 제도는 국회에서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한 법률인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소년증 제도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ㄴ.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 확인과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한 제도이다. 범죄 예방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제도와는 관련이 없다. ㄹ. 학교는 학생의 권리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도할 책임이 있지만, 청소년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공적 제도이다.

✦ 미건 꼭 암기!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의무**

-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법률 제정(국회) +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 시행(정부) +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 해소(법원) → **국가의 의무**
-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법령 및 학칙에 따른 학생 지도 권한·책임 → **학교의 의무**

08 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의무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권리 실현과 의무 이행을 위해 학교에 학생을 지도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09 청소년 보호와 제한의 내용

④ 민법에서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알기 ① 「도로 교통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형법은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③ 「공직 선거법」은 18세 이상에게만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⑤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건 꼭 암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제한의 내용**

- 형사 미성년자의 형사 책임 면제 +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손해 배상 책임 면제 → **행위에 대한 책임 면제**
- 청소년의 취업 연령 및 근로 시간 등을 제한 + 19세 미만 청소년의 주류 및 담배 구매 금지 + 19세 미만 청소년의 술집·유해 숙박업소 출입 제한 →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18세 이상에게만 공직 선거권 부여 + 18세 미만 청소년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제한 → **공익을 해하는 행위 방지**

10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법적 지위

자료 분석

- 갑은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 을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 병은 성인 근로자로 고용되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 정은 온라인 서비스 회원 가입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하였다.

「주민 등록법」상 17세 이상이면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아.

「도로 교통법」상 18세 이상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16세 이상은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

「근로 기준법」상 15세 이상은 연소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고, 18세 이상은 성인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어.

「개인 정보 보호법」상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려면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

ㄱ. 갑은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므로 17세 이상이며, 민법상 유언이 가능하다. ㄹ. 정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14세 이상이며, 형법상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알기 ㄴ. 「도로 교통법」상 18세 이상인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을은 18세 이상이므로, 「근로 기준법」상 성인 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다. ㄷ. 「근로 기준법」상 18세 이상은 성인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은 18세 이상이므로,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1 소년범의 연령별 처벌 기준

④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9세인 갑과 13세인 을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바로 알기 ① 형사 미성년자인 갑은 형법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9세인 갑은 범법 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18세인 병은 범죄 소년으로, 형법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을은 촉법소년, 병은 범죄 소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 병은 모두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미건 꼭 암기! **소년범의 연령별 처벌 기준**

- 보호 처분 불가 + 형사 처벌 불가 → **범법 소년**(10세 미만)
- 보호 처분 가능 + 형사 처벌 불가 →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 보호 처분 가능 + 형사 처벌 가능 → **범죄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12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사회적 쟁점

ㄱ, 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찬성 근거로 청소년 범죄가 이전보다 잔인해지고 있다는 점과 일부 청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바로 알기 ㄷ.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의 반대 근거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ㄹ.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 미건 꼭 암기!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찬반 근거**

- 일부 청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름 +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음 → **찬성 근거**
-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고 예측하기 어려움 → **반대 근거**

13 선거권 연령 기준에 관한 사회적 쟁점

②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갑은 찬성의 입장, 을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 미건 꼭 암기! **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찬반 근거**

- 청소년 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 → **찬성 근거**
- 청소년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에 아직 미숙함 → **반대 근거**

14 선거권 연령 기준에 관한 사회적 쟁점

③ 제시된 글에는 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다는 긍정적 시각과, 학교 현장의 여건이나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부정적 시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바로 알기 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선거권 연령 기준이 하향된다고 해서 청소년의 입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④ 2020년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인 사람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⑤ 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한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56쪽

01 주제: 청소년과 학생의 의미와 범위

예시 답안 청소년은 어린아이인 소년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년을 아우르는 말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며 대체로 10대를 청소년으로 본다. 한편, 학생은 학교 등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청소년에 포함된다.

채점 기준	
상	청소년의 의미와 범위를 학생과 비교하여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청소년의 의미와 범위만을 서술한 경우
하	청소년의 의미만을 서술한 경우

02 주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제한이 필요한 이유

예시 답안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지만, 아직 성장 중에 있으므로 각종 법률 등에 따라 특별한 보호와 제한을 받는다.

채점 기준	
상	청소년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지만 아직 성장 중에 있음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청소년은 아직 성장 중에 있다고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제한을 규정한 법률

(1) 답 「청소년 보호법」

(2) 예시 답안 (나)에 들어갈 법률은 형법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점 기준	
상	형법을 쓰고, 형법에 규정된 청소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핵심어〉를 모두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형법을 쓰고, 형법에 규정된 청소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핵심어〉를 한 두 가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형법이라고만 쓴 경우

04 주제: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의무

예시 답안 (가)에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시행하며,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을 적용하여 해소'가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나)에는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적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제시된 내용 중 한 가지만 적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가) 또는 (나)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촉법소년의 연령과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논쟁

(1) 답 10세 이상 14세 미만

(2) 예시 답안 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자신의 행동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형사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으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채점 기준	
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의견을 근거를 두 가지 이상 들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의견을 근거를 한 가지만 들어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57쪽

01 ② 02 ②

01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자료 분석

핵심 청소년은 어린아이인 소년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년을 아우르는 말로, 갑~병은 모두 청소년에 해당해.

다음은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 단체에 소속된 갑~병의 정보이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이지만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르다.

- 갑은 18세이다.
- 을은 16세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 병은 17세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

학생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을은 학생에 해당해.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이야.

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을은 학생으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권과 자치 활동을 보장받는다.

바로 알기 ① 「아동 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18세인 갑은 「아동 복지법」상 아동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학교 밖 청소년인 병도 청소년으로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④ 을과 병은 모두 청소년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⑤ 갑, 을, 병은 모두 청소년으로서 성인과 같이 납세, 근로, 국방,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지만,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 이행을 요구받지는 않는다.

02 소년범의 처벌 기준

자료 분석

16세인 갑은 범죄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해.

12세인 을은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자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A가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에서 갑(16세)과 을(12세)은 함께 10회에 걸쳐 라면과 음료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무단으로 취식하였다. 정산 과정에서 판매 수량과 매출액의 차이를 확인한 A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갑과 을의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이후 경찰은 갑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갑이 미성년자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범죄 소년에 해당하는 갑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도 될 수 있어.

16세인 갑은 범죄 소년, 12세인 을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ㄱ. 범죄 소년에 해당하는 갑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ㄷ. 보호 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바로 알기 ㄴ. 12세인 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을의 사건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ㄹ.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을 의미하므로, 16세인 갑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고, 12세인 을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소년의 형사 처벌과 보호 처분

구분	형사 처벌	보호 처분
적용 대상	범죄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 소년 •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사건 형태	소년 형사 사건	소년 보호 사건
가능한 조치	징역, 금고, 벌금 등	보호 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전과 기록	남음	남지 않음

02 / 학교생활의 법적 문제 ~ 03 / 민주 시민의 법적 문제 해결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62쪽

01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조정
02 (1) ○ (2) ×　03 (1)–㉠ (2)–㉢ (3)–㉡　04 판례
05 (1) × (2) ○ (3) ○　06 ⑤　07 ⑤　08 ③　09 ㄱ, ㄷ

02 학교폭력 피해 구제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피해 학생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05

(1)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의 법적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

06 학교폭력의 유형

이메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

07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피해를 가져오므로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알기 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언어 폭력·사이버 폭력·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

08 교권 침해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법」 제43조에서는 교권의 존중과 교원의 신분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09 법적 관점에서의 사회문제 해결

시민은 법적 자료를 탐색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바로 알기 ㄴ. 법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 관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63~166쪽

01 ①　02 ③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⑤
08 ③　09 ④　10 교권　11 ①　12 ④　13 ⑤　14 ②
15 ④　16 ①

01 학교폭력 관련 자료의 분석

ㄱ. 사이버 폭력(4,534건)은 따돌림(2,117건)과 금품 갈취(1,971건)를

합한 4,088건보다 많다. ㄴ. 신체 폭력(13,657건)과 언어 폭력(12,643건)을 합하면 26,300건으로 전체 43,519건의 과반이다.

바로 알기 ㄷ.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학교폭력은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 사이버 폭력의 접수 건수는 4,534건으로 4천 건을 넘는다. ㄹ. 물건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금품 갈취에 해당하며, 최저 접수 유형은 강요(1,924건)이다.

✦ 이건 꼭 암기!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발생 + 학생 대상 +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 갈취, 강요,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 → **학교폭력**

02 학교폭력의 법적 해결 방안 이해

학교폭력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피해 학생은 수사 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일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03 학교폭력의 해결 방식 이해

자료 분석

(가) 학교가 가해 학생에게 조언, 상담, 훈계 등의 생활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적 해결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 행정법적 해결

(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그 감독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 민법적 해결(민사 소송)

학교가 가해 학생에게 조언, 상담, 훈계 등의 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적 해결에 해당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법적 해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그 감독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적 해결에 해당한다.

04 학교폭력의 이해

밑줄 친 '이것'은 학교폭력이다. ㄷ.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비대면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ㄹ. 학교폭력 사안은 행정적 처리와 함께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도 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명예 훼손 등의 행위는 형사 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 성립한다. ㄴ.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05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주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다. 그 후 전담 기구 심의 후 학교폭력 사례 회의 운영 및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위원회의 의결 후 교육장이 조치 결정을 내린다.

06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

⑤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 결정은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한 당사자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학교폭력 신고 접수는 피해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② 사안 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한다. ③ 전담 기구 심의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④ 학교장 자체 해결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 이건 꼭 암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 초기 대응 → 사안 조사 → 전담 기구 심의 → 자체 해결 요건 충족(동의) → **학교장 자체 해결**
- 초기 대응 → 사안 조사 → 전담 기구 심의 → 자체 해결 요건 미충족(미동의) → **심의 위원회 개최(조치 불복 시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가능)**

07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방안 이해

제시된 사례에 나타난 학교폭력의 해결 방안은 조정이다. ⑤ 조정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3자인 조정자가 양 당사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학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조언, 상담, 훈계 등의 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조정을 통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 이건 꼭 암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방안**

- 가해 학생에게 조언, 상담, 훈계 등의 교육적 지도 실시 → **생활 교육**
-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관계 회복과 학교 공동체의 원상회복 지원 → **조정**

08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이해

을, 병.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사례로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 체벌 및 생활 지도, 표현의 자유 등을 들 수 있으며, 학생 대표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교 운영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바로 알기 갑. 학교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주로 학생 간의 갈등이나 학생과 교사 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정.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주로 학교 규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 규칙은 헌법과 법률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되어야 한다.

09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금지

제시된 대화에서 갑은 학생의 기본권을 강조하면서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금지에 반대하고 있고, 을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찬성의 입장이다.

④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이 학교의 질서 유지를 어렵게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을은 갑에 비해 학교의 질서 유지를 강조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② 교사의 교권을 강조하거나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우려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금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을의 입장에 해당한다. 갑은 교사의 교권이나 교육 활동 침해 행위 가능성을 앞세워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③ 학생의 자유권을 강조하는 것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갑의 입장이다. 을은 학생의 자유권이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⑤ 을은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갑도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10 교권의 의미

교권이란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하는 교원의 권리를 말한다. 교권이 침해되면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11 사회문제의 법적 해결에 필요한 자료

여러 사회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면 관련 법, 조약, 입법자료, 판례 등을 찾아야 한다. 법(A)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1차적인 근거가 되며, 조약(B)은 국제 법규로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한 입법자료(C)는 법률의 제·개정 배경과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판례(D)는 법원이 특정 소송 사건에 행한 선례를 의미한다.

✦ 미건 꼭 암기! 법적 해결을 위한 자료

-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모든 사회 규범 → **법**
- 국가, 국제기구가 주체가 되는 국제적 약속 → **조약**
- 법원의 실제 재판 사례 → **판례**
- 법률의 제·개정, 폐지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 → **입법자료**

12 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 찾기

④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의안들의 진행 상태(상임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통과, 폐기 등)와 관련한 정보를 비롯해 각종 의안에 관한 정보는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② 사법 공개 정보 포털과 조약 정보 시스템은 입법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이 아니다. ③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에서는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 검색에서는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13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A는 판례이다. ㄷ, ㄹ. 판례는 좁은 의미로는 법원이 내린 법해석 중 추후 다른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데 지침이 되는 판단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한 모든 실제 사례를 말한다.

바로 알기 ㄱ. 판례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ㄴ. 판례는 사회 변화, 정책 환경, 가치관 변화 등에 영향을 받아 시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미건 꼭 암기! 판례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한 모든 실제 사례 → **넓은 의미의 판례**
- 법원이 내린 법해석 중에서 장래에 다른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데 지침이 되는 판단 → **좁은 의미의 판례**

14 판례의 변경

①, ③, ⑤ 1979년 판례에서 법원은 양파를 식품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2017년 판례 이후부터는 양파도 식품으로 보아 양파를 다루는 업자도 「식품 위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는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의 판례와 다른 취지의 판례가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1심이나 2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④ 판례는 관례 사례의 해결을 위한 명시적 법 조항이 없는 경우에 중요한 해결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② 식품 규정과 관련한 판례가 변경되었으므로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미건 꼭 암기! 법적 안정성

- 법을 통해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 → **법적 안정성**
- 법이 함부로 변경 ×,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며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 → **법적 안정성** ↑

15 입법 과정 시 유의할 점

④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안을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것은 법 만능주의적 사고로, 입법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태도이다.

바로 알기 ① 법은 명확해야 하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입법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② 법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사회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입법 시 중요한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 ③ 법은 다수의 의견뿐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입법 과정에서의 타당한 고려 요소이다. ⑤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입법 과정 시 유의점에 해당한다.

16 법적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하기

① 법적 규제만으로는 이용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함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 제시된 글의 취지에 부합한다.

바로 알기 ② 제시된 글은 이용자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동 킥보드 제조사의 기술 개발 책임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은 제시된 글의 보완적 해결 방향과 거리가 있다. ③ 전동 킥보드 이용 문제를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는 자율 이용 제도는 교육·정책적 개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제시된 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전동 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조치는 법적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양한 보완책을 강조한 제시된 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⑤ 제시된 글은 사후 처벌 중심 대책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통한 행동 변화 유도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교통 법규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사후 제재 중심의 대책은 적절하지 않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67쪽

01 주제: 학교폭력의 해결 방법

예시 답안 학교폭력의 법적 해결 방법에는 행정법적 해결, 형법적 해결, 민법적 해결이 있다.

채점 기준	
상	학교폭력의 해결 방법 세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학교폭력의 해결 방법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학교폭력의 해결 방법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예시 답안 학교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사례에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 체벌 및 생활 지도, 표현의 자유, 교권 침해 등이 있다.

채점 기준	
상	학교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사례를 세 가지 이상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사례를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학교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사례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학교 폭력의 유형

(1) 답 (가) 언어 폭력, (나) 사이버 폭력

(2) 예시 답안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의 익명성에 의해 가해자의 책임 의식이 약화되기 쉽고, 은밀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 어렵다. 또한 게시물이나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피해가 단시간에 널리 퍼지므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채점 기준	
상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에 비해 사이버 폭력이 가지는 특징을 핵심 어구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에 비해 사이버 폭력이 가지는 특징을 핵심 어구를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에 비해 사이버 폭력이 가지는 특징을 핵심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04 법적 해결 방안의 한계

예시 답안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 해결 방안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법적 조치만으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피해 학생은 여전히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법적 해결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를 키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채점 기준	
상	법적 해결 방안의 한계를 핵심 어구를 모두 사용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법적 해결 방안의 한계를 핵심 어구를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법적 해결 방안의 한계를 핵심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05 주제: 사회문제의 법적 해결

(1) 답 A: 법, B: 조약, C: 판례

(2) 예시 답안 민주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사회문제를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자료를 탐색해야 한다. 법, 조약, 판례는 이렇게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법, 조약, 판례의 공통점을 사회문제의 법적 해결과 관련지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법, 조약, 판례의 공통점을 사회문제의 법적 해결과 관계없이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68~169쪽

01 ① 02 ④ 03 ④ 04 ⑤

01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이해

자료 분석

핵심 학교폭력 사례 회의 운영 및 심의 위원회 개최 여부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돼.

〈㉠ 학교폭력 사례 회의 운영 및 심의 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사례 회의	• B의 조사 결과 검토 (전담 조사관) • 사안 분석
심의 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심의 위원회 개최 • 조치 심의 및 의결
A의 조치 결정 (교육장)	• 학교장 통보 •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서면 통보

교육장의 결정은 행정 처분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A는 교육장, B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다. ㄱ. 학교폭력 사례 회의 운영 및 심의 위원회 개최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안이 된다. ㄴ. 교육장의 조치 결정은 행정 처분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은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바로 알기 ㄷ. 교육장의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 결정을 이행한다. ㄹ.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 인력으로,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교육 지원청 소속으로 파견되어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조사를 전담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공하며, 주로 퇴직 경찰관,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다.

02 교내 휴대 전화 사용 문제에 대한 법적 관점에서의 논쟁

자료 분석

핵심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의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통신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데 비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의 수업권 등 학교의 교육 질서를 강조해.

(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이다. 누구나 휴대 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학생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휴대 전화 사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야.

(나)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학업에 많은 방해가 된다. 또한 교사가 수업 중에 사용하는 휴대 전화를 빼앗다가 신체 접촉이라도 하면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업 전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면 학습권과 수업권을 침해하여 수업에 중대한 방해 요소가 된다는 의견이야.

ㄴ. 헌법에 따라 학생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가)의 입장에 대한 타당한 법적 근거가 된다. ㄹ. 교사는 수업권을 보장받고, 교육 질서 유지를 위해 학생의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전 휴대 전화 사용 제한은 수업권 행사와 교육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ㄱ. 통신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공복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ㄷ. 학생의 휴대 전화 사용은 학교 교육 질서와 직접 관련된다. 따라서 단순한 사적 자치 영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 규칙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입장별 근거

찬성 측	교육 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대 측	교육 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평생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03 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

자료 분석

[문항] A(입법자료)와 구별되는 B(조약)의 특징을 세 가지만 서술하시오. (각 서술별로 채점하며, 옳은 서술 1개당 1점, 총 3점임.)

[답안]

입법자료와 조약의 공통적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권을 가진다. → 조약
- 각종 사회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가)

[채점 결과] 2점 → (가)에는 조약에 대한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해.

A는 입법자료, B는 조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권을 가지며, 입법 자료와 조약은 모두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제시된 자료에서 채점 결과로 받은 점수가 2점이므로 (가)에는 조약에 대한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ㄴ. 조약은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 국제기구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명시적 약속이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가)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입법자료는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과정에서 수집하고 작성한 자료이다. ㄷ. 법적 검토 보고서, 입법 연구 보고서, 국회 회의록은 입법자료에 해당한다.

04 법적 관점에서의 사회문제 해결

자료 분석

법, 판례, 조약, 입법자료

〈층간 소음 분쟁의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료〉

- 공동 주택 관리법 제20조(층간 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 주택의 입주자 등(임대 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 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 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 소음[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 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

ㄷ.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한 판례는 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 및 적용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문제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료에 해당한다. ㄹ. 층간 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입법 조사 연구서는 입법자료에 해당하며, 입법자료는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법적 자료이다.

바로 알기 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결 후기는 개인의 경험에 불과하므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 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의 비공식 의견은 내부 운영 참고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을 지닌 자료는 아니다.

IV단원 실력 굳히기 172~175쪽

01 ①	02 ③	03 ③	04 ④	05 ⑤	06 ②	07 ①
08 ③	09 ④	10 ⑤	11 ①	12 ①	13 ④	14 ⑤
15 (가) 24, (나) 19		16 해설 참조		17 해설 참조		
18 해설 참조						

01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의 법적 특징

제시된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이다. ①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장 중이며 경험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법적 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받으며, 「청소년 보호법」 등을 통해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바로 알기 ②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성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아니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③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성인과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④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이 아니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02 법에 보장된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갑. 「교육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정.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바로 알기 병.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03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의무

(가)는 청소년 특별 회의이다. ㄴ. 청소년 특별 회의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인 「청소년 기본법」 제12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로,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한 사례이다. ㄷ. 정부는 청소년 특별 회의 등 청소년 참여 기구를 운영하고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바로 알기 ㄱ. 법률을 적용하여 청소년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이다. ㄹ. 학교는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청소년 특별 회의는 학교의 의무를 실현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04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법적 지위

④ 17세 이상은 단독 유언이 가능하고 주민 등록증이 발급되며, 18세 미만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A는 17세이다.

바로 알기 ① 13세는 단독 유언, 주민 등록증 발급, 연소 근로자로서 취업,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다. ② 15세는 단독 유언, 주민 등록증 발급,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③ 16세는 단독 유언과 주민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⑤ 18세는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부모의 동의를 받은 약혼 및 결혼이 모두 가능하다. 단, 19세 미만이므로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05 연령에 따른 형벌과 보호 처분

자료 분석

핵심 갑, 을, 병은 모두 범죄를 저질렀지만, 연령이 달라. 연령에 따라 보호 처분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면제되기도 해.

-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갑(15세)은 친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 소년에 해당해.)
- 을(9세)은 주차장에서 불장난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워져 있던 차량에 불이 옮겨붙어 해당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10세 미만의 소년은 범법 소년으로 분류돼.)
- 부모와 함께 마트에 간 병(10세)은 진열대에 놓인 장난감과 과자 등 여러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몰래 나오려다가 적발되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10세인 병은 15세인 갑, 9세인 을과 달리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① 갑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소년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다. ③ 을은 범법 소년으로, 보호 처분과 형사 처벌을 모두 받지 않는다. ④ 촉법소년인 병은 형사 처벌은 받을 수 없지만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다.

06 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에 관한 사회적 쟁점

(가)는 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ㄱ.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ㄷ. 반대 측에서는 학교 현장에 정치적 갈등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ㄴ.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반대 측의 근거이다. ㄹ.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은 찬성 측의 근거이다.

07 청소년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 제한을 둘러싼 쟁점

① 제시된 글은 청소년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및 미디어 선택권을 제한해도 되는지에 관한 사회적 쟁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바로 알기 ②, ③, ④ 제시된 글과 관련이 적은 쟁점이다. ⑤ 청소년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해야 하는지가 쟁점은 아니다.

08 학교폭력의 대응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예방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 구성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하지만 이 법률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를 때 학교폭력 발생 시 가장 필요한 조치 역시 피해 학생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 피해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협력해 보호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가해 학생에 퇴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② 가해 학생의 문제 행동을 조사해야 한다. ④ 학교폭력에서 피해 학생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학생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09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에서 임의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 → 조사 → 보고 → 의결'의 순서로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처리된다. 이는 학교가 사안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여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된 글에서 사안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A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며, A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의견을 제시하는 B는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이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안은 교육청에 보고되어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조치가 결정된다. 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ㄹ.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A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B는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이다. ㄷ. 학교폭력 사안은 행정적인 절차와 동시에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10 학교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제시된 사례에서는 고등학생 갑이 학교 게시판에 정부의 입시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부착하였고, 학교 측이 학생 선동 및 학교 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이를 강제로 철거한 상황이 나타나 있다. 이에 갑은 게시 장소가 문제라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게시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제시된 사례에 나타난 학교생활 속 법적 문제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학교의 질서 유지·관리 권한이 충돌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바로 알기 ① 교권 침해는 학생의 폭언·폭행, 수업 방해 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이 핵심인데, 제시된 사례는 학생 게시물 철거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제한 여부가 쟁점이므로 교권 보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②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나 괴롭힘처럼 당사자가 학생들인 갈등 상황이 아니라, 학생(갑)과 학교(기관) 사이의 권리 충돌이므로 학생 간 갈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 등 다른 학생의 행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제시된 사례는 특정 게시물의 삭제가 정당한 제한인지를 따지는 문제이므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 ④ 학교 규칙 제·개정은 학교 규정 자체를 만들거나 바꾸는 절차와 관련한 사안이므로 기존의 기준을 근거로 게시물 삭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1 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자료 분석

법 조약 판례

구분 (조약)	A	B	C
두 개 이상 국가 간의 약속을 의미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포함되는가? (법)	예	아니요	아니요
(가)	예	예	예

법, 조약, 판례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

표의 첫 번째 질문인 '두 나라 혹은 다수의 나라가 서명하고 승인한 국제적 약속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B만 '예'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B는 조약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인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포함되는가?'에 대해 A만 '예'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A는 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C는 판례가 된다. ㄱ. 법은 강제력이 있는 사회 규범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1차적인 근거가 된다. ㄴ. 판례는 시민의 사회생활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그런데 사회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판례와는 다른 취지의 판례가 생기기도 한다.

바로 알기 ㄷ. 법과 조약 모두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ㄹ. (가)에는 A, B, C 모두 '예'라고 답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즉, (가)는 법, 조약, 판례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을 묻는 질문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은 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 중 입법자료이므로, A~C 모두 '아니요'라고 답하는 질문이 된다.

12 판례의 변경

제시된 자료는 양파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1979년에는 양파가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017년에 대법원은 기존의 해석을 변경하여 양파도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자료의 핵심은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 즉 판례의 변경에 있다. 따라서 탐구 주제 (가)에는 단순한 무죄 판결 사례나 법령의 제정 목적이 아니라, 판례 변경이 법 적용 범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주제가 들어가야 한다. ① 판례 변경의 영향 알아보기는 (가)에 들어갈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바로 알기 ② 제시된 자료의 핵심은 무죄 판결 자체가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례의 해석이 변화했다는 점이므로 단순한 무죄 사례 조사는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③ 제재의 종류를 정리하는 것은 법 조항의 내용 이해에 해당하며, 판례 해석 변화로 적용 범위가 달라진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④ 법의 제정 목적은 일반적 내용으로, 판례 변경을 통해 '식품'의 의미가 달라진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는 탐구 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⑤ 위생 문제 자체는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일 뿐, 법원의 해석 변화와 그 법적 의미를 분석하는 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

13 법적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하기

전통 킥보드 사용의 급증에 따른 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 입법 활동과 함께 법적 방안 이외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시된 대화에서 교사는 법적 방안 이외에 어떤 노력이 가능할지를 학생에게 질문하고 있다. 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은 법적 규제 외에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ㄹ.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확대는 자율적 책임 의식을 높여 법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법 이외의 노력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ㄱ.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는 법·제도 강화를 통한 해결 방안으로, '법 이외의 노력'을 묻는 질문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ㄷ. 전자 운전면허증을 통한 면허 소지 여부 인증 강제는 제도적·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므로 법 이외의 보완적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14 사회문제의 법적 해결과 시민의 참여

제시된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동물의 보호과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불법 돌고래 포획과 공연 문제가 제기된 후 서울대공원이 공연을 중단하고 대법원이 돌고래 몰수를 결정하였다. 이어 흰돌고래 폐사와 돌고래 학대 논란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2022년 법 개정으로 동물원·수족관 운영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었다. ⑤ 시민 단체의 적극적 참여는 대법원의 돌고래 몰수 결정이라는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졌고, 이후 사회적 관심과 시민 참여가 결합되어 법률 개정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바로 알기 ① 사회문제의 해결은 행정 기관의 결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 입법부, 사법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시민 단체는 법률 외의 다른 측면에서도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③ 사회문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 법적 관점 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 ④ 사회문제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항상 여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16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제한

예시 답안 ㉠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의 사례로는 형법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들 수 있고, ㉡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사례로는 「근로 기준법」에서 청소년의 취업 연령과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의 사례로는 「공직 선거법」에서 18세 이상에게만 공직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제한의 유형 세 가지의 사례를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중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제한의 유형 중 두 가지의 사례만을 서술한 경우
하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제한의 유형 중 한 가지의 사례만을 서술한 경우

17 학교생활 속 법적 문제의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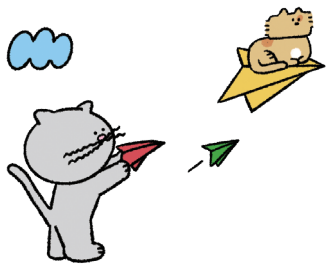
예시 답안 학교 규칙은 헌법과 법률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법령'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법령'을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18 법적 관점에서의 사회문제 해결

예시 답안 사회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법적 판단은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므로, 도덕적·사회적 맥락이나 당사자의 감정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채점 기준	
상	사회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의 한계를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하	사회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의 한계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부록

완자 중간·기말고사 풀이

완자 중간고사

02~07쪽

01 ③	02 ①	03 ①	04 ③	05 ④	06 ②	07 ①
08 ③	09 ④	10 ⑤	11 ②	12 ④	13 ①	14 ②
15 ①	16 ③	17 ④	18 ⑤	19 ⑤	20 ②	

21 미성년자의 성년 의제 22 면접 교섭권 23 친권
24 친양자 25 로크 26 인간의 존엄과 가치
27 헌법재판소 28 해설 참조 29 해설 참조

01 혼인의 요건

ㄴ. 혼인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남녀의 혼인 의사가 합치해야 한다. 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혼인하는 것은 무효이다. ㄷ.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의 배우자와 동시에 혼인하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할 수 없다.

바로 알기 ㄱ. 갑과 을은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혼인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ㄹ. 혼인할 수 없는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이다. 동성동본으로서 10촌의 친족이라면 혼인이 가능하다.

02 일상 가사 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거래 행위에 대해 다른 한쪽이 결정하였더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시된 사례에서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은 일상 가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내가 단독으로 냉장고의 구입을 결정하였더라도 남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로 알기 ② 부부 계약 취소권에 대한 설명으로, 부부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이 일방 배우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불공정할 경우에 법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부부 계약 취소권은 부부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 ③ 부부 별산제에 대한 설명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남편과 아내는 부부 별산제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소유할 수 있다. ④, ⑤ 부부 공유 재산 제도 및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에 생활비를 절약하는 등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된 공유 재산은 이혼 시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혼인 생활에서의 공동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적 장치이다. 부부 계약 취소권, 부부 별산제, 부부 공유 재산 제도 및 재산 분할 청구권은 모두 혼인 관계에서 부부의 재산권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제시된 사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3 이혼의 유형

① 제시된 사례에서와 같이 민법이 정한 특별한 이혼 사유가 있으며,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②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협의 이혼이다. ③ 법이 정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협의 이혼이다. ④ 법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하여 헤어지는 것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해당한다. 사례에 나타난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므로 이혼 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⑤ 재판상 이혼은 이혼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협의상 이혼이다.

04 가족 관계와 법

① 을과 정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서 낳은 자녀는 친생자이므로 상속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은 을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지만 C는 을의 친생자이므로 을의 법정 상속인이다. ② 갑과 을은 협의 이혼을 하였으므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다. ④ 을이 작성한 유언장이 유효하다면 B가 을의 전 재산을 가져가지만 A는 법정 상속인이므로 B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을의 유언이 컴퓨터로 작성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

바로 알기 ③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A와 을 간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유지된다.

05 계약의 성립

ㄴ. 금전 차용 계약은 재산권 중에서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ㄹ.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계약 해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일치하면 성립한다. 갑과 을 간의 금전 채무에 대한 의사 표시는 2026년 4월 1일에 일치하였으므로 이날 계약이 성립되었다. 2026년 4월 2일은 계약서를 쓴 날이다. ㄷ.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채권과 채무는 계약서를 쓰거나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을은 채권의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채권자의 지위를 가진다.

06 불법 행위 책임

② 첫 번째 사례에서 갑은 사용자, 을은 피용자이면서 가해자, A는 피해자이다. 피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로 알기 ① 갑과 을이 A에 대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두 번째 사례에서 병은 정의 법정 감독 의무자, 정은 가해자, B는 피해자이다. 정에게 책임 능력이 없을 경우 병은 정에 대한 감독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특수 불법 행위 중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정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경우 B는 정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정이 미성년자이므로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의 법정 감독 의무자인 병에 대해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갑은 을의 사용자이므로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병은 정의 법정 감독 의무자인데 정이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 병은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만, 정이 행위 능력자인 경우 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07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②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갑의 행위로 을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해야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④ 갑의 행위와 을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을이 갑의 차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다쳤다면 갑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 ⑤ 갑이 자기 행위의 결과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인 책임 능력이 있어야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바로 알기 ① 을이 무단 횡단을 하였는지는 갑의 불법 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갑의 손해 배상액 산정에 참고가 될 뿐이다.

08 등기부의 구성

ㄴ. 등기부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이 기재된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므로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ㄷ. 등기부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로 알기 ㄱ. 등기부 갑구에는 ○○ 주택의 소유권 변동 사항이 기재되지만, 거주자의 변동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자가 현재 ○○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ㄹ. ○○ 주택의 면적, 위치, 용도, 구조 등은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다.

09 부동산 매매 절차

④ 부동산은 물권이므로 등기를 통해 그 권리 관계를 공시한다. 등기를 하면 물권의 변동이 성립하고,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바로 알기 ① 등기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공식 자료이다. 따라서 등기부 열람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②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 시점에 체결된다. ③ 잔금 지급 이전에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하고, 매수자가 해제하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⑤ 부동산 매수자는 세금 납부 단계가 아니라 등기를 완료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10 임대차 계약

⑤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할 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주택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므로 20개월로 계약했더라도 24개월까지는 갑에게 이 아파트를 인도해 줄 필요가 없다. ②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이 제3조를 위반하더라도 을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을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행정관청의 확정 일자 날인을 받아야 발생한다. ④ 을이 2026년 1월 20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 등록을 마쳤다면 다음 날인 2026년 1월 21일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11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모든 시민이 한곳에 모여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한 A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참정권이 신분·재산·성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된 B는 근대 민주주의,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된 C는 현대 민주주의이다. ② 입헌주의 원리는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원리로, 근대 민주주의에서 정립되었다.

바로 알기 ①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여성, 노예, 외국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적 민주주의였다. ③ 추첨이나 윤번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직 담당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가 공직을 담당하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한다. ④ 권력 분립의 원리는 시민 혁명을 통해 확립된 원리로, 근대 이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⑤ 근대 민주주의에서 발달한 대의제에서는 시민의 의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났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고, 전자 민주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12 법치주의의 유형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긍정한다. ㄹ. 법치주의는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제재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실현한다.

바로 알기 ㄱ.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중시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 견제 수단

B와 C 사이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이 C이므로, B는 국회, C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A는 법원이다. ㄱ.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ㄴ.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ㄷ. 국회는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동의권을 통해 행정부(대통령)를 견제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기관의 장(長)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이 있다. 국회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4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사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강제하는 최저 임금제는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므로 A는 복지 국가 원리이다.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한다.

바로 알기 ① 복지 국가 원리는 근대 사회에서 나타난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③ 복지 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④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평화 통일 지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화주의 원리의 실현과 관련된다. 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문화 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15 기본권의 유형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A는 평등권이고,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B는 청구권이다. ①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바로 알기 ②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능동적 성격을 지닌다. ③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④ 국가기관에 문서로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원권은 청구권에 포함된다. ⑤ 평등권과 청구권은 모두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16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A 원칙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③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사례에서처럼 사후 입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바로 알기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정도를 법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②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행위라도 불문법인 관습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④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⑤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17 범죄의 성립 요건

ㄴ. 을의 행위는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구성 요건의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B에 해당한다. ㄹ. 극심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편의점에서 몰래 샌드위치를 훔친 정의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므로 D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ㄱ. 갑(9세)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되지만, 갑이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C에 해당한다. ㄷ. 병의 행위는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 행위이므로 B에 해당한다.

18 형사 절차

⑤ 보석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갑과 을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로 알기 ① 갑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선고한 형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집행 유예이다. ② 을은 불구속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1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 보상 제도는 형사 피의자가 구금되었다가 불송치 결정되거나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구금된 상태에서 공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수형인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보장되는 권리이다. ④ 병이 선고받은 징역형은 교정 시설에 수용되어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는 형벌이다. 교정 시설에 수용하되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로는 금고와 구류가 있다.

19 법원의 역할

갑은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A는 대법원이다. 을은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므로 B는 고등 법원 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이다. 병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 가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C는 가정 법원이다. 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적용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대법원은 상고 사건과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원칙적으로 1심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과 같은 2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고등 법원이다. 다만 지방 법원 및 지원의 단독 판사가 담당한 1심 사건의 항소·항고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② 을이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③ 1심 재판을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했다면 2심 재판은 고등 법원에서 담당한다. ④ 가정 법원은 혼인, 이혼, 양육, 상속과 같은 가족·친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사 소송과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한다.

20 헌법재판소

ㄱ.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ㄷ. ㉢은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법익의 균형성에 근거한 판단이다.

바로 알기 ㄴ. ㉡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ㄹ.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를 기속한다.

28 주제: 미성년자의 계약

(1) 예시 답안 병은 갑이 미성년자인데도 법정 대리인인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과 을 간의 오토바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채점 기준	
4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만 밝힌 경우

(2) 예시 답안 을은 병에게 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하거나, 자신이 먼저 갑이나 병에게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채점 기준	
4점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2점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9 주제: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1) 답 (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나) 구속 적부 심사 제도

(2) 예시 답안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피의자가 이미 체포·구속된 경우에도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채점 기준	
6점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와 구속 적부 심사 제도의 목적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3점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와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중 한 제도의 목적만 서술한 경우

완자 기말고사

08~13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②	07 ③
08 ②	09 ⑤	10 ④	11 ③	12 ⑤	13 ④	14 ②
15 ⑤	16 ②	17 ⑤	18 ④	19 ②	20 ④	

21 노동법 22 사회 보험 23 한국 소비자원
24 지적 재산권 25 14 26 조약 27 입법자료
28 해설 참조 29 해설 참조

01 「근로 기준법」의 내용

제시된 조항을 포함하는 법률은 「근로 기준법」이다. 「근로 기준법」은 근로자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개선하고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①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시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근로 기준법」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③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 「근로 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알기 ⑤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은 근로 3권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02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

(가)는 단체 행동권, (나)는 단체 교섭권이다. ㄴ.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ㄷ. 사용자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바로 알기 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단결권이다. 단체 행동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ㄹ. 단체 행동권과 단체 교섭권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03 부당 해고와 임금 체불

갑은 부당 해고, 을은 임금 체불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ㄱ. 부당 해고를 당한 갑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임금 체불을 당한 을은 고용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ㄴ.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ㄹ. 갑은 부당 해고, 을은 임금 체불을 당하였으므로 권리 침해의 유형이 서로 다르다.

04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

⑤ 갑은 17세의 연소 근로자이므로 사용자 을은 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30분이므로,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근로 기준법」상 기준을 충족한다. ② 갑의 1일 근로 시간은 9시~16시 30분에서 휴게 시간 30분을 뺀 7시간으로,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인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갑과 을이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④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다.

05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률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 서비스이다. 공공 부조와 관련 깊은 법률로는 「기초 연금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등이 있다. 사회 서비스와 관련 깊은 법률로는 「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아동 복지법」 등이 있다.

바로 알기 ①, ②, ④, ⑤ 「국민연금법」, 「국민 건강 보험법」, 「고용 보험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은 모두 사회 보험과 관련 깊은 법률이다. 사회 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정 조건을 갖춘 국민의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06 공정 거래 위원회의 역할

A는 공정 거래 위원회이다. ② ○○ 기업은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 기업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회사 소속 가맹 택시에 호출을 집중 배정하였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러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공정 거래 위원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기관이 아니라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 기관이다. ③ 공정 거래 위원회는 규제를 철폐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④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심의하는 것은 노동 위원회의 역할이다. ⑤ 공정 거래 위원회는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재판하는 사법 기관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 기관이다.

07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

(가)는 「제조물 책임법」이다. ③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이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바로 알기 ①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소비자 기본법」이다. ②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④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거·수리·교환·환급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리콜 제도로,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08 현대 사회의 변화와 법률문제

(가)는 세계화, (나)는 저출생·고령화, (다)는 지능정보화이다. ㄱ.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세계화에 대응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ㄷ.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 행위 발생 시 가해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알기 ㄴ. (나)는 지능정보화가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에 해당한다. ㄹ. (가)~(다)에 따른 법률문제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것이므로 기존 법률만으로는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09 플랫폼 노동의 보호 문제

밑줄 친 '이것'은 플랫폼 노동이다. ⑤ 「근로 기준법」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 임금제와 같은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바로 알기 ① 플랫폼 노동에서 업무 선택권은 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게 있다. ② 플랫폼 노동은 업무나 서비스가 임시적·단기적인 경우가 많다. ③ 현행 「근로 기준법」에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④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사용자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며, 근무 장소와 시간의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다.

10 지적 재산권

A는 디자인권, B는 저작권, C는 특허권, D는 상표권이다. ④ 상표권은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 로고 등 상표에 관한 독점적 권리이다.

바로 알기 ① 디자인권은 산업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특허청에 출원·등록하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다. ②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청에 출원·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산업 재산권이다. ③ 특허권은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고도한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고도한 발명보다는 진보성이 낮지만 실용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는 실용신안권이다. ⑤ 디자인권(A), 특허권(C), 상표권(D)은 산업 재산권에 해당하지만 저작권(B)은 산업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D가 모두 산업 재산권인 것은 아니다.

11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률 규정

③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자로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며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없다. 따라서 16세의 청소년은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없다.

바로 알기 ① 형법상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이다. 따라서 14세의 청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② 「근로 기준법」에서 15세 이상의 연소 근로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취업할 수 있다. 따라서 15세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취업할 수 있다. ④ 민법에서 18세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자이다. 따라서 19세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12 학생의 의무

⑤ 제시된 내용은 「교육 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이라는 신분과 자격으로서 지게 되는 의무이다.

바로 알기 ① 우리나라는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추구하지만, 제시된 법률 규정이 직접 교육의 기회균등을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제시된 법률 규정에서는 학생의 인권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③ 학교 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시된 법률 규정이 직접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제시된 법률 규정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지만, 학습권의 핵심 내용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3 선거권 연령 하향 의견 찬반 입장

④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갑은 찬성, 을은 반대의 입장이다. 따라서 갑은 선거권 연령 제한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배제한다는 입장이고, 을은 16세는 아직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흡하므로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바로 알기 ① 갑과 을은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지 않다. ②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은 을의 입장이다. ③ 청소년이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은 을이다. ⑤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의 확대가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갑과 을이 직접 언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갑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의 확대가 정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14 학교생활과 법률

ㄱ.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원의 교육이나 연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교육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ㄷ. 학교 교육 활동 중에 학생이 다쳤을 경우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받는다.

바로 알기 ㄴ. 학생 자치 활동에 참가할 권리는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술·담배·마약류 같은 유해 약물, 음란·폭력성 매체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ㄹ. 「근로 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연소 근로자 본인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5 학교폭력의 유형

제시된 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① 다른 학생을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것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건강 상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학교폭력의 유형 중 상해에 해당한다. ② 다른 학생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므로 학교폭력의 유형 중 협박에 해당한다. ③ 다른 학생에게 간식을 사 오라고 억지로 시키는 것은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로 수행하게 한 것이므로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강제적인 심부름에 해당한다. ④ 다른 학생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학교폭력의 유형 중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⑤ 다른 학생에게 독서 동아리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폭행,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학교폭력의 처리

② 갑이 을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을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므로 갑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또한 민법상으로는 불법 행위, 형법상으로는 상해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인 갑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사안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갑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③ 형사 절차와 학교 징계는 별개로 처리된다. 따라서 형사 절차가 시작된다고 해서 학교의 징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수사 기관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성범죄 등 중대한 학교폭력이다. 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이므로 갑이 민사 책임을 지더라도 형사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7 사회문제의 해결 방식

(가)에서 시민 단체는 캠페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나)에서 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가)는 법적 해결 방안 이외의 노력이고, (나)는 법적 해결 방안이다. ⑤ 법적 해결 방안은 강제성이 있으며, 법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로 알기 ①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서 시민 단체는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에 따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다. ②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합의로 사회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끄는 것은 (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에서 법원은 법적 처벌을 통해 폭행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③ 개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 양식을 자율적으로 내면화하게 하는 것은 (가)에 대한 설명이다. (나)에서 법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 양식을 법적 처벌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 ④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채로 문제 해결이 강요되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가)와 같은 법적 해결 방안 이외의 노력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8 입법 과정에서 유의할 점

① 입법 과정에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나 도덕적 규범 등 입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 ③ 입법 과정에서는 법이 시행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법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하거나 한쪽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바로 알기 ④ 입법은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9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금지 논란

② ㉡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므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알기 ① ㉠은 학생의 휴대 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③ 휴대 전화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보다는 ㉡이다. ④ ㉡은 ㉠에 비해 학생의 학습 활동의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⑤ ㉠과 달리 ㉡이 휴대 전화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20 판례의 역할

ㄴ. 판례는 법원이 특정 소송 사건에 행한 선례를 의미한다. 비슷한 사안에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지속되면 관련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명시적 법 조항이 없을 때 판례가 중요한 해결 기준이 된다.
ㄹ. 판례는 시민의 사회생활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바로 알기 ㄱ.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과정에서의 준비 자료는 입법 자료이다. ㄷ.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법률이다.

28 주제: 부당 노동 행위와 구제 방법

(1) 답 부당 노동 행위

(2) 예시 답안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를 거쳐 행정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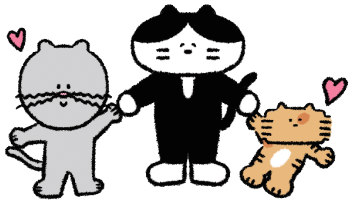
채점 기준	
4점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주체, 절차를 모두 포함하여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주체, 절차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29 주제: 교육 활동 침해

(1) 답 교육 활동 침해

(2) 예시 답안 교육 활동 침해는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하는 교원의 권리인 교권을 침해한다. 교권이 침해되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이는 곧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

채점 기준	
6점	교권의 침해와 학습권의 침해를 모두 포함하여 제재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3점	교권의 침해와 학습권의 침해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제재가 필요한 이유를 서술한 경우



수행 평가 끝장 보기 풀이

활동형 문제 01 법관으로서 이혼 판결문 작성하기 진로+

활동 Solution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사유별 법적 요건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

제시된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여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내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

주문(결론), 청구 취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이혼 판결문을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1 예시 답안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예시 답안 미성년 자녀 둘이 있는 갑과 을은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 과정에서 을이 병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관계의 애정과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갑은 판단하였다. 갑은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을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갑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을과 이혼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갑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서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혼인 파탄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을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 청구도 함께 제기하고자 하였다.

3 예시 답안

주문(결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6. 9. 1.부터 2028.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청구 취지	1. 원고 갑과 피고 을은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소외 2를 자녀로 두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년경부터 사이가 나빠졌고, 2년 전부터 원고가 거실에서, 피고가 안방에서 생활하는 등 부부관계가 계속 원만하지 않았으며, 혼인 기간 중에 피고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피고는 생활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3과 여행을 하는 등 남녀 사이로 교제하여 부정행위를 한 바 있다.
이유	2. 법적 판단 가.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기간 중 소외 3과 계속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관계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피고의 책임이 크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6항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및 책임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법관으로서 이혼 판결문 작성하기' 활동에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판결문에 준하는 완성도 높은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돋보임.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의 부정행위와 장기간의 별거 사실 등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법적 요건과 논리적으로 연결 지어 이혼 사유를 명확히 인정함. 특히 판결문의 주문(결론), 청구 취지, 이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정 사실과 법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써 법적 문서 작성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논리적 사고력을 발휘함.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7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실제 판결문에 준하는 치밀한 법적 서술 태도가 인상적임. 나아가 단순한 법조문 암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판결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민법의 근본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활동형 문제 02 미성년자의 계약에 관한 탐구 보고서 만들기

활동 Solution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하여 규정한 원칙을 정리한다.

⬇

미성년자의 계약 효력과 관련한 유형을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로 정확하게 구분한다.

⬇

미성년자의 계약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미성년자의 계약 관련 강조점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예시 답안

1. 미성년자가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였을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된다.
4.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에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게 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한다.

2 예시 답안

계약 유효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 용돈과 같이 법정 대리인에 의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계약 취소 가능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계약 취소 불가능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년자인 것처럼 속인 경우

3 예시 답안 • 제목: 미성년자의 계약은 어떻게 다를까?

- 서론: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문장으로 제시한다.
- 본론
  -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한 민법의 핵심 원칙(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취소권, 취소권 제한,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을 번호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 효력의 유형을 계약 유효, 계약 취소 가능, 계약 취소 불가능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 결론: 고가의 물건 구매, 할부 등의 계약 시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4 예시 답안

미성년자의 계약 탐구 보고서

미성년자의 계약은 어떻게 다를까?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계약에서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한 민법의 핵심 원칙

1. 법률 행위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정 대리인이나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였다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
4.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 확답 촉구권과 철회권을 보장하여 보호한다.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 효력의 유형

계약 유효
-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계약 취소 가능
-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계약 취소 불가능
-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 신분증 위조 등으로 성년자인 것처럼 속인 경우

미성년자가 고가의 물건 구매, 할부 등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미성년자의 계약에 관한 탐구 보고서 만들기' 활동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학생의 시각에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는 탁월한 전달력을 보여 줌. 민법 내용을 바탕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철회권 등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제목, 서론, 본론, 결론을 각 내용의 특징에 맞게 각각 다른 형태로 적절하게 제시하여 보고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임. 특히 본론에서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 효력의 유형을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유효한 경우, 취소 가능한 경우, 취소 불가능한 경우의 세 가지로 명확히 분류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보호 제도의 핵심 원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함.

활동형 문제 03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스터 만들기

활동 Solution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임차인이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포스터에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게 구성한다. 포스터는 단순한 정보 나열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안내물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피해 상황(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계약 갱신 거절 등)을 탐구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 부족에 있음을 인식한다.

⬇

포스터의 주제를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라!"와 같이 행동을 촉구하는 형태로 설정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

임대차 계약서에 필요한 내용, 임대차 계약 시에 확인할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적 노력과 개인적 노력이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여 포스터를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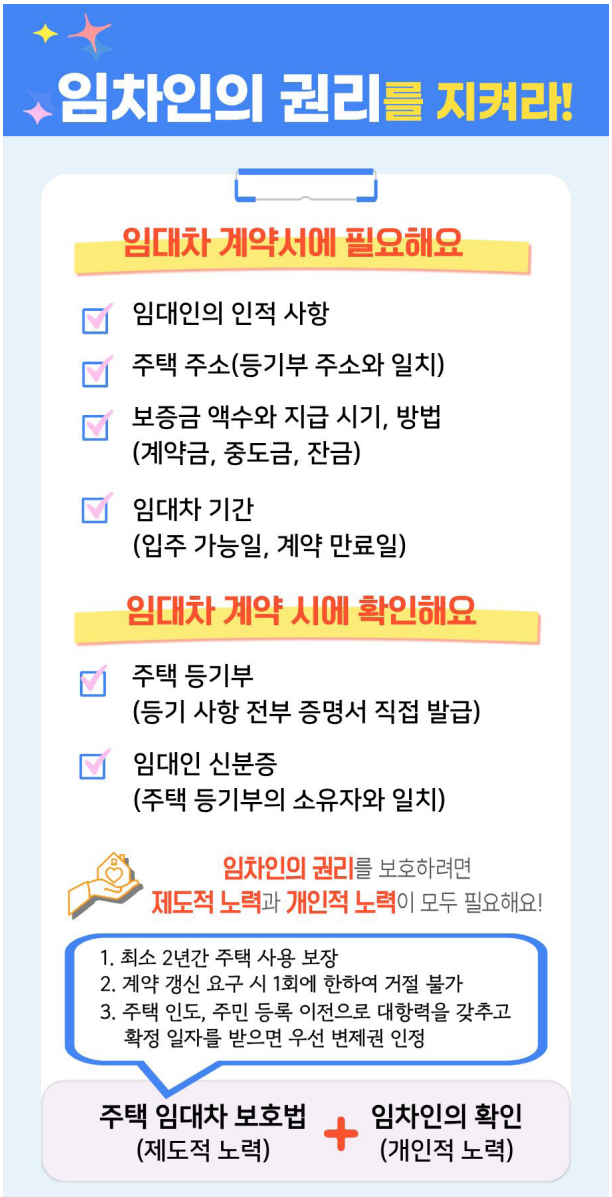
1 예시 답안

1. 임차인이 최소 2년간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1회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이때 갱신되는 계약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 거주하고 전입 신고를 하여 주민 등록을 이전하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춘 후 확정 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2 예시 답안

주택 임대차 계약서 내용	• 임대인의 인적 사항 • 주택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의 일치 여부 • 임대차 보증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지급 시기 및 방법 • 임대차 기간, 입주 가능일, 계약 만료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필수 확인 요소	• 주택의 등기부 • 임대인의 신분증(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의 일치 여부)

3 예시 답안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스터 만들기' 활동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분하여 포스터를 제작함으로써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는 전달력이 돋보임.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제도적 노력, 임차인 스스로의 확인과 같은 개인적 노력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포스터 구성을 통해 명확히 표현함. 임대인의 인적 사항 확인, 등기부상 주소와 계약서 주소의 일치 여부, 보증금 지급 방법과 시기, 임대차 기간 등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요소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시각화하여 실생활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

논술형 문제 04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제한 판단하기

논술 Solution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이 상속권을 주장한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1 예시 답안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를 저지른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아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모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 예시 답안 상속 제도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실질적 정의와 법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상속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혈연만을 근거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사회의 보편 윤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부모가 의무를 방기한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을 훼손하며, 사회적 정의에도 어긋난다. 특히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 제도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따라서 상속권 제한은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가족 간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상속을 정의로운 재산 배분의 과정으로 만드는 핵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상속을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가족 구성원 간의 의무와 책임을 전제로 한 사회적 계약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결국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가족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를 수호하는 필수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를 저지른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함.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아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모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특히 현행 민법이 상속에 있어 혈연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는 방기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사회의 보편 윤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권리 제한이 정의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임을 체계적으로 논증함.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족 간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상속 제도가 정의로운 재산 배분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 취지임을 통찰력 있게 서술함.

논술형 문제 05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책임 분석하기

논술 Solution

(가)에서 을이 병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갑이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나)에서 B가 C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A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1 예시 답안 (가)에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나)에는 사용자 책임이 나타난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2 예시 답안 (가)의 경우에 갑이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갑이 을을 충분히 감독하고 있었음에도 을이 순간적으로 자전거를 넘어뜨린 것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사례에서 갑은 친구와 대화하느라 을에게서 눈을 뗀 상태였으므로, 일반적으로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갑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나)의 경우에 A가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B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A가 B를 고용할 때 충분한 자격을 검증하였고, 배달 업무 수행 중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감독하였음에도 B가 독자적 판단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책임의 면책은 실무상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A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A의 책임이 면제되더라도 B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B는 C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불법 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법적 책임의 주체와 그 한계를 탐구하는 능력이 탁월함. 일반 불법 행위와 특수 불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성립 요건과 법적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법적 사고력을 발휘함. 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발생하는 면책 사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상 면책이 엄격하게 인정된다는 현실적 한계까지 균형 있게 서술함으로써 법 이론과 현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 줌.

논술형 문제 06 물권과 채권 비교하기

논술 Solution

제시된 글을 통해 저당권이 물권에 해당함을 이해하고, 물권과 채권의 관계를 파악한다.

⬇

다수 물권이 충돌할 경우에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원칙을 이해하고, 물권의 순위 원칙에 따라 담보 설정 전 등기부 확인이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 법적 주의 의무에 해당함을 인식한다.

1 예시 답안 저당권은 물권이다.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며,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은 특정인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며,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가 의무를 저버릴 때 채권 실현을 확실히 보장하는 안전 장치 역할을 한다.

2 예시 답안 민법상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로, 동일한 물건 위에 중복하여 성립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성립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한다. 저당권은 등기를 통해 권리 존재가 공시되며, 제시된 글에 명시된 것처럼 먼저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후순위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 대금 중 선순위자의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내에서만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적인 이유 때문에 담보를 설정하기 전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이미 설정된 저당권의 유무와 그 금액을 파악하여 담보물의 잔존 가치가 자신의 채권액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결과적으로 등기부의 확인은 물권의 순위 원칙으로부터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주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채권이 특정인에 대한 상대적 권리에 불과한 반면,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절대적 권리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함. 특히 동일한 물건 위에 복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성립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원칙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저당권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점이 돋보임. 결과적으로 등기부 확인이 물권의 순위 원칙으로부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논증한 점에서 법적 사고력과 논술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활동형 문제 07 영상 스토리보드를 활용하여 권력 분립의 필요성 알리기

활동 Solution

국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권력 분립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본다. 이를 토대로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영상 스토리보드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1 예시 답안 19세기 영국의 사학자 존 액튼은 "권력은 부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이는 권력이 한곳에 독점되거나 집중될수록 부패의 가능성과 그 심각성이 커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2 예시 답안 국가 권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될 경우 권력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단이 사라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독립된 기관에 분산하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권력의 독점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3 예시 답안

순서	영상 설명	자막 / 내레이션	전달 의도
1	'행정'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왕관을 쓴 권력자가 '입법'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도장을 법안에 찍고, '사법'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도장을 재판서에 찍는 모습	(자막) 만약 한 명의 권력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다면?	권력이 한곳에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2	1의 장면이 어두워지며, 19세기 영국의 사학자 존 액튼이 등장하여 말하는 모습	(내레이션) "권력은 부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3	다시 1의 장면으로 돌아와, 왕관을 쓰고 양손에 두 개의 도장을 쥔 권력자 아래에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	(내레이션) 사람들은 행정에, 입법에, 사법에 불만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권력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여준다.
4	어두운 분위기가 점차 밝아지면서, 권력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적힌 세 개의 기둥이 삼각 구도로 세워지는 모습	(내레이션) "그래서 우리는 국가 권력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권력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제시한다.

5	세 개의 기둥 위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 자리를 잡고 앉아, 서로를 향해 화살표 모양의 시선을 주고받는 모습	(자막) 각 기둥 사이로 자막이 떠오름 → 견제 그리고 균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권력 분립의 원리의 핵심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권력의 부패와 관련된 명언을 찾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파악함. 권력이 한곳에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제안함. 또한 권력 분립의 원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영상 스토리보드는 '권력 집중의 문제점 → 권력 분립 원리의 기능'이라는 단계적 흐름이 일관되게 보여지도록 기획함. 각 장면의 구성과 자막/내레이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청자가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함. 나아가 오늘날 권력 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마지막 장면에서 제시함. '영상 스토리보드를 활용하여 권력 분립의 필요성 알리기' 활동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함.

활동형 문제 08 죄형 법정주의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

활동 Solution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다섯 가지 원칙을 정리하고, 각 원칙이 적용된 판례나 사례를 조사한다.

⬇

조사한 사례 중 하나를 선정하여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죄형 법정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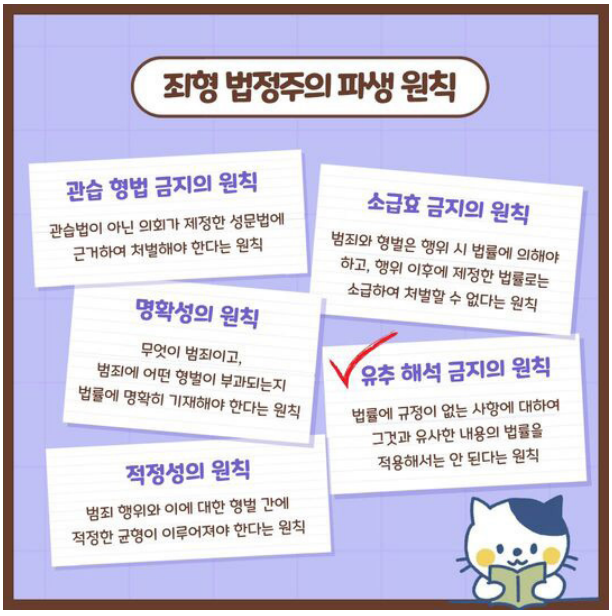
1 예시 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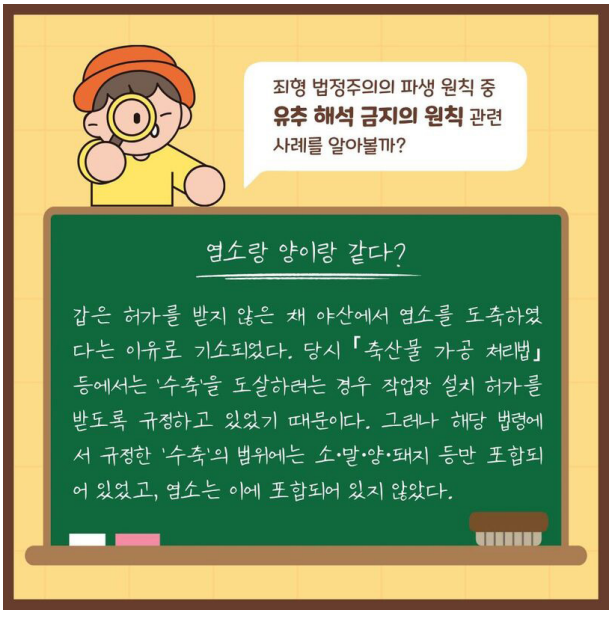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의 규정이나 형벌의 부과는 관습법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성문법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행위 이후에 제정한 법률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명확성의 원칙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적정성의 원칙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2 예시 답안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갑은 허가를 받지 않고 야산에서 염소를 도축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사건 당시 「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2조는 '수축'을 도살하거나 해체할 때는 작업장 설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축산물 가공 처리법」과 그 시행령·시행 규칙 어느 규정에도 '수축'의 개념에 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염소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수축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 참조).

3 예시 답안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죄형 법정주의 적용 사례를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 활동에서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다섯 가지 원칙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례 분석을 통해 실제 사례에서 죄형 법정주의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파악함. 이를 바탕으로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소개 → 사례 분석 → 법원의 판단 → 시사점'의 흐름으로 카드 뉴스를 구성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나아가 죄형 법정주의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형법의 기본 원리임을 카드 뉴스 마지막 장면에서 제시하여 죄형 법정주의의 핵심을 짚음. 사법 정보 공개 포털(portal.scourt.go.kr)과 헌법재판소 통합 검색 누리집(isearch.ccourt.go.kr)에서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된 판례를 찾는 과정에서 정보 활용 능력을 발휘함.

활동형 문제 09 법원 직원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 만들기 진로+

활동 Solution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 규정을 확인한다.

⬇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의 실현 관점에서 법관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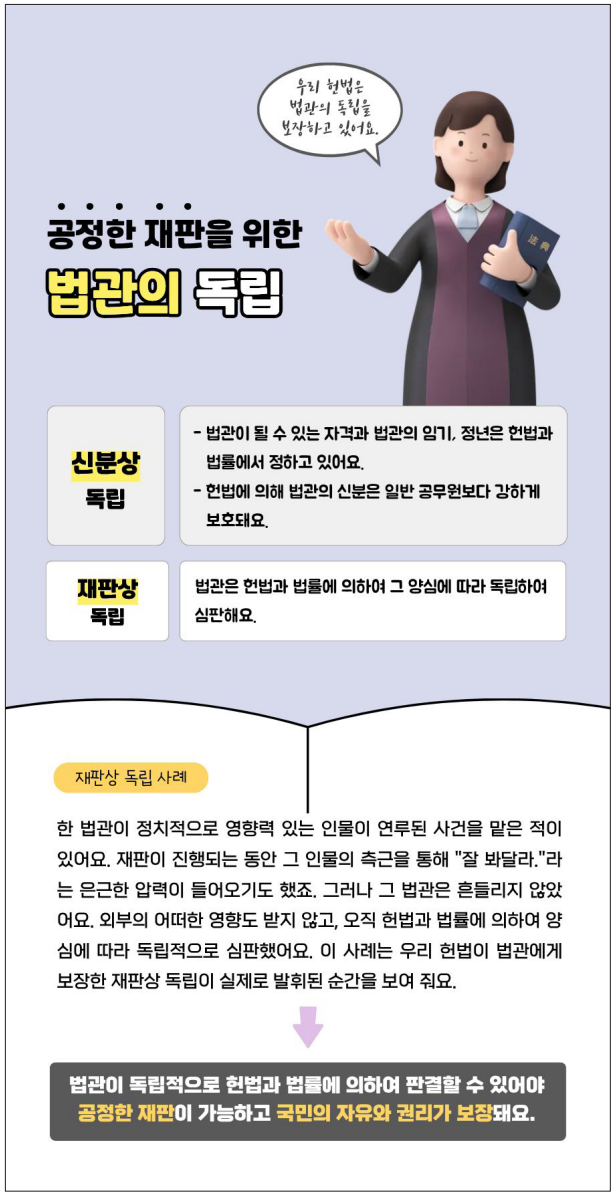
법원 직원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소개한다고 가정하고, 법관의 독립을 신분상 독립과 재판상 독립으로 나누어 안내한다.

1 예시 답안

헌법 제101조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2 예시 답안 만약 법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아 재판을 진행한다면, 재판이 권력자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좌우되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국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 헌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첫째, 법관의 자격과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법관의 신분을 일반 공무원보다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한다. 둘째, 법관이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다. 이러한 헌법 규정은 사법권을 입법권·행정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장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 원칙이다.

3 예시 답안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법원 직원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 만들기' 활동에서 법관의 독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관의 독립이 가지는 의의를 다각도로 정리한 것이 돋보임. 법관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를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권력 분립의 원리 및 법치주의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함. 안내 책자는 법관의 독립을 '신분상 독립 규정 → 재판상 독립 규정 → 외부 압력이 들어온 사례 → 법관의 독립의 중요성'의 흐름으로 기획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 제작한 안내 책자를 서로 공유하며 다른 학생의 관점과 표현 방식을 비교하고, 법관의 독립이 지니는 의의를 깊이 있게 이해함.

논술형 문제 10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분석하기

논술 Solution

제시된 유신 헌법 조항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한 내용을 파악한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라도 그 내용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람직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원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설명한다.

1 예시 답안 유신 헌법 제40조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고, 이를 통일주체 국민 회의가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참정권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제59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구성뿐 아니라 존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권력 분립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훼손한 것이다. 또한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거쳐 제정된 헌법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지만, 그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즉 법의 형식적 합법성만 충족했을 뿐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예시 답안 우리나라의 유신 헌법 사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 절차만 갖추었다고 해서 정당한 법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의 내용 또한 자유·평등·정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며, 민주주의 역시 법치주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실현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유신 헌법 조항을 근거로 민주주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분석함.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법의 내용이 정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제시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음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설득력 있게 서술함.

논술형 문제 11 노 키즈 존 문제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하기

논술 Solution

노 키즈 존 문제에서 영업주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아동의 평등권 및 행복 추구권이 충돌함을 파악한다.

⬇

과잉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노 키즈 존 운영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 예시 답안 노 키즈 존 문제에서 충돌하는 기본권은 영업주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아동의 평등권 및 행복 추구권이다. 갑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근거로 영업주가 노 키즈 존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아동도 성인과 동등한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가지는 주체이므로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2 예시 답안 을의 입장에서 볼 때, 노 키즈 존 운영은 헌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 아동의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영업주의 편의를 위한 목적에 가깝다. 둘째,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안전시설 설치나 보호자 동반 조건 부과 등 다른 수단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동과 보호자의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넷째,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영업주가 얻는 영업 편의라는 사익이 아동이 입는 차별과 배제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노 키즈 존 운영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노 키즈 존 문제에서 영업주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아동의 평등권 및 행복 추구권이 충돌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입장이 어떤 헌법적 근거에 기반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단순히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 키즈 존을 운영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를 과잉 금지의 원칙 네 가지 요건(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함. 과잉 금지의 원칙 적용 결과를 토대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리적으로 판단함. 자신이 선택한 입장의 헌법적 근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설득력 있게 서술함.

논술형 문제 12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의 충돌 분석하기

논술 Solution

무죄 추정의 원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와 충돌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한 뒤, 이를 뒷받침할 헌법적 근거와 논거를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1 예시 답안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의자·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한다. 한편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추가 범죄 예방, 유사 범죄 피해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다. 즉, 이 제도는 공익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피의자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사이에 본질적 긴장을 안고 있는 셈이다.

2 예시 답안 나는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에 반대한다. 형사 절차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다. 그런데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실상 피의자를 재판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개된 신상 정보로 인한 명예 훼손은 회복하기 어려우며, 신상 정보 공개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정보까지 유출되어 무고한 시민이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흉악 범죄의 감소가 신상 정보 공개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상 정보 공개와 재범 방지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물론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이 형사 절차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 보장 원칙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의자의 인권을 희생하여 얻는 안전은 결국 누구의 인권도 안전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며, 이는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정의에 어긋난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에서 국민의 알 권리 및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과 피의자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충돌함을 정확히 이해함. 각각의 입장이 어떤 헌법적 근거에 기반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헌법적으로 정당한지를 검토하고,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논리적으로 판단함. 자신이 선택한 입장의 헌법적 근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설득력 있게 서술함.

활동형 문제 13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 가이드라인 만들기

활동 Solution

연소 근로자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근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

근로 계약 가이드라인은 계약 체결, 근로 조건, 권리 구제 절차가 드러나도록 구성한다.

1 예시 답안

계약 체결 관련 규정	•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는 가능하다. •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 근로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장에는 연소 근로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 조건 관련 규정	• 성인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추가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본인의 동의와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2 예시 답안 [근로 계약 시 지켜야 할 사항]

- 근로 계약서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제도 등의 근로 조건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 근로 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연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 15세 미만인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사용자에게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덕상·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 임금은 연소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주휴일 등의 근로 조건이 「근로 기준법」의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권리 침해 시 대처 방법]

- 임금 체불이나 근로 조건 위반 시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3 예시 답안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꼭 확인해요!]

- 계약 체결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았나요?
  - ☐ 연소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했나요?
  - ☐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본을 받았나요?
  - ☐ 15세 미만인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았나요?
- 근로 조건
  - ☐ 근로 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인가요?
  - ☐ 시급이 최저 임금 이상이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종이 아닌가요?
  - ☐ 야간·휴일 근로를 하기로 하였다면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나요?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해요!]

-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위반 → 고용 노동부에 진정 제기
- 부당 해고 →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 가이드라인 만들기' 활동에서 연소 근로자 보호 규정을 조사하여 근로 계약 체결 요건, 근로 조건, 권리 구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 법률 규정을 실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으며, 연소 근로자의 권리와 권리 침해 시 대처 방법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체화한 점이 돋보임.

활동형 문제 14 공정 거래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는 포스터 만들기

활동 Solution

공정 거래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주요 역할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하여 이해한다.

⬇

포스터에는 공정 거래 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잘 드러나도록 문구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적절히 배치하여 시각적 전달력을 높인다.

1 예시 답안 공정 거래 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 기관이다.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독과점적 시장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2 예시 답안
- 공정한 경쟁 촉진: 아파트 유지 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 업체가 경쟁 업체에 형식적인 입찰 참여를 요청하여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소비자 보호: 다수의 페인트 판매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라돈 저감 효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중소기업 경쟁 기반 확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가 중소 숙박 업체에 할인권 비용이 포함된 광고 상품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을 별도의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경제력 집중 억제: △△ 그룹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예시 답안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공정 거래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는 포스터 만들기' 활동에서 공정 거래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하여 분석하였음. 공정 거래 위원회의 역할 유형을 공정한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경쟁 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역할이 드러난 적절한 사례를 조사함. 공정 거래 위원회의 시장 질서 유지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시각 자료로 재구성함으로써 공정 거래 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보였음. 포스터 구성에서 핵심 문장과 시각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전달력을 높인 점이 돋보이며, 공정 거래 위원회의 역할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잘 드러남.

활동형 문제 15 지능정보사회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서 작성하기

활동 Solution

지능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법률문제를 선정하고, 기존 법 체계의 한계와 연결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다.

⬇

선정한 법률문제의 개선 방향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지능정보사회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서는 항목을 나누어 구조화된 형식으로 작성한다.

1 예시 답안

법률문제	•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보호 공백 문제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 불명확 문제
원인	•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보호 공백 문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배달,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 기준법」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 임금 보장, 근로 시간 제한 등 「근로 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 불명확 문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거래 중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매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예시 답안

현행 제도의 한계	•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보호 공백 문제: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 불명확 문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가 어렵다.
개선 방향	•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보호 공백 문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최저 임금 보장,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을 규정한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 불명확 문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게시물의 삭제·차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한다.

3 예시 답안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서]

- 현황 및 문제점: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지만, 현행 「근로 기준법」에 그 지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 임금 보장, 근로 시간 제한 등 「근로 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에서 배제되어 장시간 노동, 저임금, 부당한 계약 해지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 개선 방안: 첫째,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최저 임금 보장, 근로 시간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을 규정한다.
- 기대 효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어 지능정보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 명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서]

- 현황 및 문제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거래 중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매개하고 있으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개선 방안: 첫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한다.
- 기대 효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 불법 행위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이 조성되어 지능정보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지능정보사회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서 작성하기' 활동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보호 공백'이라는 시의성 있는 법률문제를 선정하고, 현행 노동법의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였음. 제도 개선 방향으로 「근로 기준법」상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문제 진단, 개선 방안, 기대 효과의 구조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법률문제를 탐구하는 능력을 보였음.

논술형 문제 16 공인 노무사로서 근로자의 권리 침해 대응하기 진로+

논술 Solution

사례를 읽고 연소 근로자 갑의 근로 계약 과정과 근로 조건에 대해 파악한다.

⬇

법률에 근거하여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갑의 사용자가 근로 계약서 미작성, 법정 근로 시간 초과, 최저 임금 미달, 부당 해고 등 복수의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찾아낸다.

⬇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갑이 침해당한 권리를 정리하고, 공인 노무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술한다.

1 예시 답안 첫째, 갑은 근로 계약 체결 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근로 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둘째, 갑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초과한 1일 9시간·1주 54시간 근무를 요구받았으므로,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연소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셋째, 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받은 것은 「최저 임금법」상 보장된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넷째, 야간 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것은 「근로 기준법」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2 예시 답안 공인 노무사로서 갑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임금 명세서, 근무 일지, 문자 메시지 등 갑의 근로 조건과 해고 경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 권리 침해 유형별로 사실 관계를 정리한다. 근로 계약서 미교부는 「근로 기준법」상 서면 근로 계약 체결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1일 9시간·1주 54시간을 근무하게 한 것은 연소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을 위반한 것이며, 최저 임금 미달은 「최저 임금법」상 최저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확인한다. 이에 갑을 대리하여 고용 노동부에 「근로 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갑을 대리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접수한다. 부당 해고로 인정되면 해고는 무효가 되며, 갑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공인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대리하여 권리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제시된 사례에서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 계약서 미교부, 연소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 초과, 최저 임금 미달, 부당 해고 등 권리 침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 침해당한 권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음. 공인 노무사의 입장에서 각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정확하게 제시하였음. 관련 증거 자료 수집, 고용 노동부에 진정 제기,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등 실제 구제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였으며,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 구제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이 드러남. 특히 공인 노무사의 전문적 역할과 직무 범위를 반영하여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노동 분야 관련 진로에 대한 탐색 역량과 관심이 돋보임.

논술형 문제 17 불공정 거래 행위의 영향과 규제 분석하기

논술 Solution

(가)에서 ○○ 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파악한다.

⬇

(나)에 제시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 기업의 행위가 '경쟁 사업자의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함을 찾아낸다.

⬇

(가), (나)를 바탕으로 불공정 행위가 시장 경쟁 질서와 소비자의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를 유추한다.

1 예시 답안 ○○ 기업의 행위는 (나)에 제시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중 '경쟁 사업자의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 ○○ 기업은 자사 제품을 추천 및 판매하는 병원 또는 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 업체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병원 또는 의원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특정 제품을 추천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2 예시 답안 ○○ 기업이 병원 또는 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자사의 건강 기능 식품의 구매를 추천하도록 한 행위는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중소 경쟁 업체는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판매 기회를 잃게 되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내 경쟁 사업자의 수가 줄어들어 시장의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병원 또는 의원이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특정 제품을 추천하게 되면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고, 경쟁이 제한되면 제품의 품질 향상이나 가격 인하를 위한 노력도 줄어들어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 거래 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제시된 사례가 '경쟁 사업자의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 이유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였음. 불공정 거래 행위가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함.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의 관점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음. 특히 경쟁 제한이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도출한 점이 돋보임.

논술형 문제 18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토론하기

논술 Solution

(가)를 읽고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작물이 수상하면서 그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을 파악한다.

⬇

(나)의 저작물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고, 인간의 개입 정도와 창작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들어 논술하도록 한다.

1 예시 답안 (나)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자체는 저작권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의 사례에서 출품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하고 생성된 이미지를 선별·보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인공지능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이 직접 사상이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나)에서도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가)의 인공지능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2 예시 답안
- 찬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창작 의도를 가지지 못하지만, 인간이 텍스트 명령어를 설계하는 과정과 생성된 결과물을 선별·수정하는 과정에는 창의적 판단이 개입된다. (가)의 사례에서 출품자가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선별·보정하였다고 주장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인간의 창작은 카메라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에 대한 투자와 혁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창작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결과물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창작 활동의 동기가 약화되어 문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창작 기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반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의적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사상이나 감정을 가질 수 없으며,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에 따라 결과물을 생성할 뿐이다. (가)의 사례에서 출품자가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선별·보정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창작적 표현을 형성한 것이라기보다 인공지능의 생성 과정을 조작한 것에 가깝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된 기존 창작자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기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와 인공지능의 저작권 주체 인정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인공지능 창작물 사례에 적용하여 저작권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였음. 현행 법해석과 학설을 근거로 분석의 설득력을 높인 점이 돋보임. 인공지능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인간의 창작적 개입, 창작 활동 보호의 필요성,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변화 요구 등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음. 특히 인공지능을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인간의 역할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분석한 점이 돋보임. 나아가 변화하는 창작 환경에 맞게 인간의 창작 기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음.

활동형 문제 19 학생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학교 규칙 제정하기

활동 Solution

「공직 선거법」, 「초·중등 교육법」 등 학생의 참정권과 관련한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한다.

⬇

목적, 절차, 권한, 보장 내용을 구분하여 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1 예시 답안
- 2020년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어 고등학교 3학년 일부 학생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초·중등 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학생은 학교의 규칙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교육 규칙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청소년 참여 기구로는 청소년 특별 회의, 청소년 참여 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회 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예시 답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생 의견 수렴)	학교장은 교육 규칙의 제정·개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 학교 시설 운영 등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을 결정할 때 학생회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야 한다.
제3조 (학생 대표 운영 위원회 참여)	학생 대표는 학교 운영 위원회에 참관인 또는 의견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학생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조 (학생 자치 활동 보장)	학교는 학생회의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총회, 학급 회의 등 자치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정책 제안권)	학생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제안된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학생회에 통보해야 한다.

3 예시 답안 우리가 제정한 학교 규칙은 학생의 참정권 보장에 다음과 같이 기여할 수 있다. 첫째, 학교 규칙의 제·개정 시 학생 의견 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범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둘째, 학생 대표의 학교 운영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의 목소리가 학교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였다. 셋째, 정책 제안권을 부여하여 학생이 수동적인 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 운영의 적극적인 참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의 참정권 경험은 단순한 교내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도 민주적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학생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학교 규칙 제정하기' 활동에서 참정권의 법적 개념과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학교 현장의 실태와 연결 지어 분석하는 능력이 돋보임.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이 도입된 사실과 「교육 기본법」에 근거한 학생의 학교 규칙 제정·개정 참여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참정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함.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의견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교 규칙 조항을 목적, 학생 의견 수렴, 학생 대표의 학교 운영 위원회 참여, 학생 자치 활동 보장, 정책 제안권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이 돋보임. 각 조항이 학생 참정권 보장이라는 목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으며,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각각의 절차와 요건을 제시함. 나아가 학교 규칙의 제정 경험이 단순한 교내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술하였으며, 참정권 보장의 궁극적 의미를 민주주의 실현과 연결 짓는 통합적 사고 역량이 인상적임.

활동형 문제 20 입법 조사관으로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입법 제안서 작성하기 진로+

활동 Solution

「소년법」상의 규정을 바탕으로 법적 체계와 죄형 분류, 보호 처분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분류 기준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 제안의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예상할 수 있는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안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

입법 제안이 실현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법적·사회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하고, 소년 범죄 예방 및 보호라는 「소년법」의 근본 취지와 연결 지어 마무리한다.

1 예시 답안

-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10세 미만(범법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 소년)
- 보호 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10호(소년원 송치)까지 총 10종류
- 문제점: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존재한다.

2 예시 답안

제안 내용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신규 제정한다. 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기간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의무적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다. ② 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③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기반 법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한다.
예상 반대 의견	소년에 대한 처분 강화는 소년법의 교화·재활 이념에 반하며, 처벌 강화가 실질적인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론 및 보완점	처분 강화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화·재활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보호처분 기간의 확대는 더 충분한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3 예시 답안

제안 법률명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 배경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는 추세이나, 현행 소년법은 교화·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강력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범죄 예방, 체계적 교화, 피해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	① 강력 범죄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기간 확대(의무 치료·교육 포함) ② 소년 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 체계 및 국가 지원 비용 규정 ③ 초·중·고등학교 법교육 의무화 ④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
기대 효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체계적 예방·교화·피해 회복 시스템이 갖추어져,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면서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된다.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입법 조사관으로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입법 제안서 작성하기' 활동에서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는 추세에 비해 현행 「소년법」이 교화·재활 중심으로 운영되어 강력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논리적으로 제안함. 특히 입법 제안의 주요 내용을 강력 범죄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기간 확대, 소년 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 체계 구축, 학교 기반 예방 교육 의무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다각도에서 균형 있게 구성한 점이 돋보임. 처벌 강화가 「소년법」의 교화·재활 이념에 반한다는 예상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인정하면서도, 보호 처분 기간 확대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체계적 교화·재활 기회 확대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반론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법적 사고력을 발휘함.

논술형 문제 21 학교폭력의 해결 방안 모색하기

논술 Solution

(가)는 고등학생 A가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등 복합적인 학교폭력을 당한 사례임을 파악한다.

⬇

(나)는 학교폭력 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와 사안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나)의 법률적 해결 방안과 대비되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법률적 해결 방안과 교육적 관점에서의 해결 방안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효과적 접근 방법을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술한다.

1 예시 답안 (가)에서 A가 당한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악성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인격을 공격한 것으로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 둘째,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공공연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셋째, 교실에서 집단적으로 A를 배제하고 소외시킨 행위는 '따돌림'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으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2 예시 답안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해결과 교육적 해결을 병행해야 한다. 먼저, 법률적 해결 방안으로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공식적 사안 처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전담 기구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심리 상담, 일시 보호, 학급 교체 등)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서면 사과,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를 결정한다. 형법적으로는 가해 학생이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가 아닌 경우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민법적으로 가해 학생과 그 감독 의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적 해결 방안으로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요하다.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었는지를 인식하고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피해 학생 간 대화 모임이나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 또래 상담 프로그램,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법률적 제재와 교육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적 조치만으로는 가해 학생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고, 교육적 접근만으로는 심각한 폭력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률적 절차를 통해 가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가)의 사례에서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유형을 법률의 정의 규정과 정확히 연결하여 분석하였음. 학교폭력의 해결 방안을 법률적 관점(학교폭력 예방법 절차, 형사·민사 책임)과 교육적 관점(관계 회복 프로그램, 예방 교육)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논술하였음. 특히 법률적 제재와 교육적 접근의 유기적 연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자신만의 견해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한 점이 돋보임.

논술형 문제 22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토론하기

논술 Solution

(가)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14세 미만)의 현행 규정(형법 제9조)과 하향 논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

(나)는 국제 연합 아동 권리 위원회의 권고(14세 이상 유지)와 각국의 형사 책임 연령 비교(영국10세, 독일14세, 일본14세/12세)를 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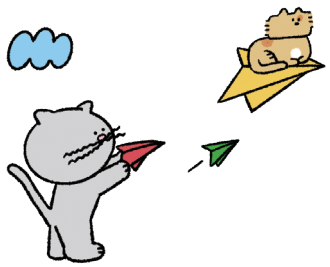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가), (나)를 활용하여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1 예시 답안 형사 미성년자 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어린 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완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즉, 사리분별 능력이 미성숙한 소년에게 형사 처벌이라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형사 정책적 판단에 기반한다.

2 예시 답안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찬성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설정된 것으로, 70년 이상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의 신체적·지적 발달 수준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청소년은 이전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사회적 경험을 쌓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최근 14세 미만 청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여 보호 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며, 범죄 억제 효과 또한 미흡하다. (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본 역시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 형사 책임 연령을 12세로 하향하여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셋째, 연령 하향이 곧 소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 제도를 유지하면서 형사 책임 연령만 조정하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보다 실효적인 교화·재활 프로그램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국제 연합 아동 권리 위원회가 강조하는 교화·재활의 이념과도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 피해자 보호, 범죄 억제의 관점에서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되, 소년 보호 처분 제도를 강화하여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을 균형 있게 검토한 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서술하는 능력이 돋보임.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가 처음 형법이 제정된 당시에 설정되고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소년의 신체적·지적 발달 수준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사회적 변화를 근거로 기준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특히 14세 미만 청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 연령 하향의 타당성을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라는 관점에서 균형 있게 논술한 점이 돋보임. 연령 하향이 곧 소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 처분 제도를 유지하면서 형사 책임 연령만 조정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더 실효적인 교화·재활 프로그램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나아가 사회적 변화, 피해자 보호, 범죄 억제라는 다각적 관점을 통합하여 법적 정의 실현과 청소년 보호라는 궁극적 가치를 연결 짓는 통합적 사고 역량이 인상적임.



Memo